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

## 서울시 마을공동체

### 주요 활동가 인식 유형 연구

: 오스트롬의 공동자원 설계 원리를 중심으로

2017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윤 찬 흠

# 서울시 마을공동체 주요 활동가 인식 유형 연구

: 오스트롬의 공동자원 설계 원리를 중심으로

지도 교수 홍 백 의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윤 찬 흠

윤찬흠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6월

위 원 장     안 상 훈     (인)

부위원장     박 정 민     (인)

위     원     홍 백 의     (인)

## 국문초록

### 서울시 마을공동체 주요 활동가 인식 유형 연구 : 오스트롬의 공동자원 설계 원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윤찬흠

본 연구는 “서울시 마을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자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다. 엘리너 오스트롬은 국가나 시장이 아닌, 공동체를 통한 공동자원의 자치 가능성을 제시하며 ‘공유지의 비극’ 테제에 효과적으로 반박한다. 아울러 최근 공동자원의 개념이 사회 운동 및 도시 공간으로까지 확장되면서, 마을공동체와 같은 도시 계획 또한 공동자원의 관점에서 조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엘리너 오스트롬의 공동자원 설계 원리 및 마을공동체 기능을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하여, 서울시 마을 활동가 집단이 마을 사업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유형화를 시도한다. 나아가, 마을공동체 기획이 제 3 섹터 복지 전략으로서 어떠한 의의를 지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주요 활동가 집단이라 할 수 있는 ‘마을넷’ 구성원 30인을 대상으로 Q 방법론 및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마을 활동가들이 인식하는 마을공동체는 네 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를 나열하면 ‘자치 결사체 중시형’, ‘포용적 협의체 중시형’, ‘행정 거버넌스 중시형’, ‘대안 가치 중시형’이다. 첫 번째 유형인 자치 결사체 중시형(유형A)은 지속 가능성과 자치 능력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운용을 지향하고, 공동체 구성원의 정치적 역량을 강조한다. 두 번째 유형인 포용적 협의체 중시형(유형B)은 내부 협의체를 통한 공동체 운용을 중시하고, 마을공동체의 포용적 역량 및 구성원의 다양성을 추구한다. 세 번째 유형인 행정 거버넌스 중시형(유형C)은 마을공동체 운용에 있어 행정 주도성을 긍정한다. 이에 행정을 근간으로 한 민관 협력을 마을 사업의 성공 요소로 인식한다. 마지막 유형인 대안 가치 중시형(유형D)은 마을의 자치적 운용 원리 그 자체를 강조하기보다, 마을 사업의 대안적 프로그램과 유용성을 긍정하는 집단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마을 사업의 생태 및 복지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개별 유형은 이론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지닌다. 첫째, 마을 사업의 행위 주체를 민간 중심으로 인식할수록 공동체 및 공동 자원의 경계에 있어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형 C, 유형 B, 유형 D, 유형A의 순으로 개방적 전략을 택했다. 둘째, 공동체와 공동자원을 둘러싼 갈등 해결 과정에 있어, 협의 과정이 내부 지향적인지 혹은 외부(행정) 지향적인지에 따라, 집합적 선택 장치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 협의체를 가장 중시한 유형 B를 시작으로 유형 A, D, C의 순으로 집합 선택 장치가 민간 영역에 위치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및 공동자원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은 전 유형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유형 간 모니터링의 주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제재 국면의 양상 또한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해볼 때,

마을공동체와 공동자원의 운용 주체가 민간 중심적인지 혹은 공공 인지에 따라 마을 활동가들이 인식하는 운용 원리가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마을의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유형 A의 경우 마을을 매개로 한 정치적 역량 발휘를 가장 중요시하였고, 유형 B는 네트워크 및 복지적 기능, 유형 C는 주민 네트워크 기능, 유형 D의 경우 마을의 생태 및 복지적 기능을 긍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3 섹터 복지 전략으로서 마을공동체가 지니는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 마을 활동가들은 마을과 복지를 연계하는데 있어, 복지를 위해 마을을 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 활동을 통해 복지 욕구가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경로적 사고(pathway thinking)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형 D를 제외한 여타 유형은 복지를 마을공동체 기능의 핵심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활동가들은 마을 복지가 제도권과 비제도권의 경계에서 독자적인 민관 협력형 모델로 자리잡아야 함을 주장한다. 이에 본 연구는 마을을 매개로 한 복지가 공공 복지로 편입되는 것이 아닌, 민간에서 기획되어, 민간에서 조성되고, 민간에서 완성되는, 민간 지역조직화의 원리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마을을 통한 3섹터 복지는 비영리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제도권 복지와 상호 호혜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독자적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엘리너 오스트롬, 공동자원, 마을공동체, 마을 만들기, 마을 활동가, 마을 복지, Q 방법론

학번: 2015-20231

# 목 차

I. 서론.....	1
1. 문제 제기 .....	1
2. 연구의 필요성.....	2
3. 연구 목적 .....	5
II. 이론적 자원.....	7
1. 공동체와 마을, 그리고 3섹터 .....	7
1) 공동체 논의.....	7
2) 마을공동체의 형성과 발전.....	9
3) 제 3섹터로서 마을의 기능: 복지적 관점 .....	11
2. 공동자원론에 관하여 .....	14
1) 공동자원의 속성 .....	17
2) 공동자원 설계 원리.....	21
3) 마을공동체와 공동자원의 접목.....	26
3. 마을공동체 기능 .....	30
1) 경제적 영역.....	31
2) 정치·사회적 영역 .....	34
3) 복지적 영역.....	36
4) 생태·문화적 영역 .....	39
4. 선행 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42
1) 마을 성격 연구 .....	45
2) 마을 주체 및 행위자 연구 .....	47

3) 마을 공동자원 연구.....	49
4) 연구의 차별성.....	51
III. 연구방법 .....	53
1. Q 방법론 개요.....	53
2. 연구 설계 .....	55
1) Q모집단 구축 및 진술문 설계.....	55
2) P표본의 선정.....	61
IV. 연구결과.....	65
1. 유형의 추출.....	66
2. 인식 유형의 특성.....	73
1) 합의적 진술문 VS 논쟁적 진술문.....	73
2) 인식 유형별 분석.....	75
3) 사후 면담(Post-interview)을 통한 유형 분석.....	95
3. 인식 유형화의 의의.....	118
V. 분석결과 논의.....	120
1. 공동자원으로서 마을공동체.....	120
2. 이론적 관점의 유용성 .....	125
1) 자치적 거버넌스로서의 마을의 가능성.....	126
2) 마을의 기능적 유용성 .....	134
3. 3섹터 복지 전략으로서의 가능성.....	140
VI. 결론.....	147
1. 연구 요약 .....	147



2. 연구의 함의.....	149
3. 연구의 한계.....	150
참고문헌.....	153
Abstract .....	164

## 표 목차

<표 II-1> 재화의 분류 .....	19
<표 II-3> 공동자원 연구의 두 가지 접근법 .....	26
<표 II-4> 복지국가와 마을공동체 접근법 비교 .....	38
<표 II-5> 마을공동체 자산의 종류와 관리현황 .....	50
<표 III-1> Q방법론의 절차 .....	55
<표 III-2> 진술문 선정을 위한 이론적 준거틀 .....	58
<표 III-3> Q표본 .....	59
<표 III-4> 마을 행위자 구분 .....	61
<표 III-5> P표본 .....	64
<표 IV-1> 개별 인식 유형의 요인 적재치 및 설명력 .....	68
<표 IV-2> P표본의 개별 유형별 요인적재치 .....	68
<표 IV-3> 각 진술문에 대한 인식 유형별 점수 .....	69
<표 IV-4> 요인 간 상관관계 .....	72
<표 IV-5> 합의적 진술문과 논쟁적 진술문 .....	73
<표 IV-6> 유형 A '자치 결사체 중시형'의 대표 진술문 .....	76
<표 IV-7> 유형 A와 타 유형 간 차이를 나타내는 진술문과 Z-score .....	80
<표 IV-8> 유형B '포용적 협의체 중시형'의 영역별 대표 진술문 .....	81
<표 IV-9> 유형 B와 타 유형간 차이를 나타내는 진술문과 Z-score .....	85
<표 IV-10> 유형 C '행정 거버넌스 중시형'의 영역별 대표 진술문 .....	86
<표 IV-11> 유형 C와 타 유형 간 차이를 나타내는 진술문과 Z-score .....	90
<표 IV-12> 유형D '대안 가치 중시형'의 영역별 대표 진술문 .....	92

<표 IV-13> 유형 D와 타 유형 간 차이를 나타내는 진술문과 Z-score .....	95
<표 IV-14> 이론적 관점에서 살펴본 각 유형의 특징.....	118
<표 V-1> 복지 관련 진술문 유형별 요인가 .....	141

## 그림 목차

<그림 II-1> 복지삼각형과 공동체 .....	12
<그림 II-2> 오스트롬의 자치적 지역공동체 8가지 제도 설계 원리.....	25
<그림 II-8> 서울시 마을기업의 핵심 가치와 작동 원리 .....	32
<그림 II-9> 서울시 마을기업 운영 현황 .....	33
<그림 II-11> 연도별 국내 마을공동체 논문 편수.....	44
<그림 III-1> 마을활동가 층위 구분 .....	63
<그림 IV-1> Q카드 .....	65
<그림 IV-2> 요인적재치 스크리 도표 .....	67
<그림 V-1> 유형 간 공동 자원 운용의 개방성 .....	128
<그림 V-2> 유형 간 갈등해결 및 집합선택 장치 .....	130
<그림 V-3> 유형 간 제재 및 모니터링 비교.....	131
<그림 V-4> 마을 사업의 연계 구조.....	140

# I. 서론

## 1. 문제 제기

오늘날 전 지구적인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작금의 후기 산업화 체제가 지속 가능할지에 관한 비판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Beck, 2015; Giddens, 2013). 이는 인간의 삶의 형식 중 시장 경제가 압도적인 헤게모니를 행사하면서(Piketty, Goldhammer, & Ganser, 2014),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지탱하던 자본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성찰해야한다는 흐름과 맥락을 함께한다(Zizek, 2011). 그간 대표적인 위기관리체제로 기능하였던 복지국가(welfare state) 또한 전망이 밝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1970년대를 기점으로 탈산업화, 세계화, 금융위기 등에 맞서 지속적인 수정 전략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김태성, 류진석, & 안상훈, 2005; Pierson, 2001),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 및 국민국가의 급속한 와해로 인해 복지국가의 위상 또한 약화되었다(Fitzpatrick, 2003). 무엇보다 제도와 관료중심적으로 구성된 복지국가는 지역 공동체의 자립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개인의 비공식적 영역을 지나치게 합리화하여 사적 관계망을 해체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한동우, 2012; Goldsmith, 1994; Gorz, 1999).

이처럼 국가와 시장의 중첩된 위기는 제 3섹터의 부상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Defourny, Borzaga, & Defourny, 2001; Evers, 2005). 이른바 복지 혼합(welfare mix)의 맥락에서 국가가 시민들의 필요(needs) 충족에 요구되는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역사적으로 생활 세계의 안녕(well-being)은 가족과 이웃 등 공동체적 전략을 위시로 한

비국가영역에서 공급되어왔다(홍경준 & 김상균, 1999; N. Rose, 1996). 아울러 국가를 제한 다양한 비공식적 영역은 자발적 결사체와 같은 상호의존적 혼합체로 구성된다는 주장과(Esping-Andersen, 1996; Evers, 2005),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상호 호혜적 조직이 현대적으로 복원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을 고려했을 때(홍경준, 2013; Adam, Beck, & Van Loon, 2000), 제3섹터는 대안적 위기관리체제로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이처럼 최근 부상하는 각종 ‘사회적인 것’(the social)<sup>1</sup>이 현대 사회의 비(非)복지 문제를 해소하고, 와해된 협력적 생활 세계를 복구할 수단이 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난 몇 년간 화두를 모았던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획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 2. 연구의 필요성

2000년대 이후 마을 만들기 운동<sup>2</sup>을 모태로 한 대안 공동체 담론이 부상하면서, 대다수 지방 자치 단체가 마을공동체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와 관련된 학술 연구 또한 꾸준히 증가하였다.<sup>3</sup>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12년

---

<sup>1</sup> 최근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공유 경제 등을 위시로 한 각종 ‘사회적인 것’의 담론이 증가하고, 그 성격을 규정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김성윤, 2011; 이은희, 2008).

<sup>2</sup> 국내 마을만들기 운동은 1970년대 일본의 마치즈쿠리(まちづくり)의 영향을 받아 1990년대 이후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동의 일환으로 태동되었다. 이에 마을만들기 운동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안녕을 향상시키는 것을 제반 목적으로 삼는 종합적인 도시 계획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주민이 관에 반대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내생적 전략을 취했다면, 국내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을 주도하는 하향식(top-down) 설계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김기홍, 2015).

<sup>3</sup> 1999년부터 2014년에 이르기까지 총 126편의 마을공동체 연구가 누적되었으며, 건축, 교육, 도시, 디자인, 사회, 인문, 복지 조정, 지리, 행정, 환경 등의 분야에서 저마다의 학문적 관점에 입각한 다양한 마을 관련 연구가 생산되었다(정석 & 김택규, 2015).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마을공동체 기획을 서울시 도시·사회 정책의 중심에 위치 시켰다. 아울러 2015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증가하는 복지 수요의 공급 수단으로 마을을 연계시키는 등, 마을공동체의 운용 원리를 두고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김형용, 2016; 남기철, 2015). 결국 마을공동체는 기존 도시 자본주의 생활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관료주의적인 국가나, 물인간적인 시장 기제의 해결 방식에서 탈피하여, 생활자치<sup>4</sup>의 역량과 공동체적 접근으로 해결하려는 대안적 관점을 주문한다. 이에 마을은 지역 공동체 차원의 작은 정치, 경제,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김기홍, 2015), 긍정적 마을 효과(village effect) 및 이웃 효과(neighborhood effect)를 창출하는 근린 거버넌스로 이해될 수 있다(Pinker, 2014; Sampson, 2012). 따라서 오늘날 마을공동체 기획은 전근대적인 마을의 부활이 아닌, 후기 근대의 실정에 입각한 지역 사회 전략이자, 현대적 코뮌(commune)의 가능성과 맞닿아 있다(조한혜정, 2007; Harvey, Hardt, & Negri, 2009; Maffesoli, Felski, Megill, Rose, & Eagleton, 2004).

그간 시론적 차원에서 서울시 마을공동체의 성격을 규정하려는 시도가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을공동체가 제 3섹터로서 어떠한 논리 체계를 지니는지, 그 기능적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는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서울시 차원의 마을 사업이 시행된 지 5년이 채 경과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 놓여있고, 마을 사업의 외연이 확장되고 있지만<sup>5</sup>,

<sup>4</sup>요코다 카쓰미(2004)는 마을공동체, 생협과 같은 대안적 운동을 정치학적 관점에서 조망하였으며, 대안적 운동이 자본 및 정치권력 등과 같은 기존 체제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생활세계의 협동적 자기조직화 원리를 원칙으로 삼고, 주민들이 생활 자치를 실현한다는 점이라 분석한다.

<sup>5</sup> 1기 마을공동체 기획의 핵심적 요체라 할 수 있는 주민제안사업이 2012년 203건(46.1%), 2013년 648건(83.60%), 2014년(86.10%)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마을공동체 기획이 어떠한 형태의 거버넌스를 구축 해야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논리 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박주형, 2013; 손우정, 2016).<sup>6</sup> 무엇보다 마을 기업, 생활협동조합, 주민커뮤니티, 육아·돌봄 커뮤니티, 도시 재생 사업 등의 기능이 동시 다발적으로 혼재 되어있는 마을 사업의 다차원적 요소를 고려한다면,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명확한 학술적·행정적 정의를 내리기 쉽지 않다. 이에 서울시 또한 마을공동체를 “자치구 지역 내 주민들이 일상 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환경·복지·문화 등을 공유하는 사회·공간적 영역”으로 정의한다(서울시, 2016). 그러나 이와 같은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내세우는 마을 기획의 핵심에는 주민 주도성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공동체 전략 확보에 있다(김찬동, 서윤정,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2). 이에 서울시 마을 기획의 상(像)은 기존과 같이 행정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는 하향식(Top-down) 구성이 아닌, 마을 활동의 핵심 주체인 마을 활동가들에 의해 조감도가 그려져야 한다. 이는 곧 개별 마을 활동가들의 실제적 삶(real life)과 주관적 경험에 입각하여 마을 전략이 구상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김의영, 2014). 따라서 마을공동체 기획이 지속 가능한 공동체 전략으로서 어떠한 원리를 구축 해야할 지에 대한 답변은 현장 중심의 접근(grounded approach)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sup>6</sup>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다수 서울시 마을공동체 연구는 참여 주체나 분야별 사업 평가 및 만족도 조사, 마을과 행정의 관계 연구 등에 중점을 두었다(서울연구원, 2016). 이에 현존하는 마을공동체 연구의 경우, 연구자가 지향하는 특정 가치에 견주어 마을 체제의 대안적 성격을 규정하는 시도가 대부분이다(손우정, 2016).



### 3. 연구 목적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은 공동자원론(Common-pool resources theory)을 통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 공동체는 국가나 시장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Ostrom, 2007, 2015).<sup>7</sup> 이처럼 자원 관점에 입각한 공동체 전략<sup>8</sup>은 서울시와 같이 인적, 물적, 산업적 자원이 밀집한 도시 환경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특히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공동자원은 공동체 문화가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만 형성될 수 있다(Siefkes, 2009; Gidwani, 2011에서 재인용). 그렇다면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이 공동자원의 분석틀에 입각하여 지속 가능한 자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가? 혹은 서울시만의 독특한 전략이 요구되는가? 이러한 문제에 답변하기 위해 본 연구는 Q 방법론을 통해 서울시 마을공동체 주요 활동가들이 마을공동체 기획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오스트롬의 공동자원 설계 원리와 마을공동체 기능을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하여, 서울시 마을활동가들의 인식 유형화를 시도한다. 이는 도시 계획을 하나의 공동자원으로 파악하는(city as a commons) 최신의 관점을 수용하고(Borch & Kornberger, 2015; Dellenbaugh, Kip, Bieniok, Müller, & Schwegmann, 2015), 마을공동체라는 생활 세계에 공동자원 패러다임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닐 수 있다(정영신, 2016). 또한

---

<sup>7</sup> 공동체의 자치적 관리 가능성을 경험적으로 검토한 오스트롬의 이론은 현대의 복합적 위기를 공동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단초를 제공한다(Ostrom, 2007, 2015). 오스트롬은 전 세계 자치적 지역 공동체의 사례 연구를 통해, 장기 지속적인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8 가지 제도적 설계 원리를 제시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론 장에서 후술된다.

<sup>8</sup> 자원을 기반으로한 공동체 전략은 1990년대 이후 서구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자산 기반 공동체 발전 전략(ABCD: 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sup>8</sup>의 맥락에서 의의를 지닌다(전대욱, 최인수, & 김건위, 2016).

여기서 도출되는 마을활동가의 인식 유형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 해야하는지에 대한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시한다.

#### [연구문제 1]

서울시 마을공동체 주요 활동가들이 마을공동체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 인식 유형은 어떻게 나뉘어 지는가?

#### [연구문제 2]

도출된 활동가들의 인식 유형은 이론적 관점에 근거하여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가?

[연구문제 2-1] 오스트롬의 공동자원 설계 원리가 마을 활동가의 인식 유형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2] 마을공동체의 기능적 특성이 마을 활동가의 인식 유형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 [연구문제 3]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획이 3섹터 복지 전략으로서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가?

## II. 이론적 자원

본 장에서는 공동체 및 마을 논의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3 섹터의 관점에서 마을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본다. 뒤이어 Q 연구의 이론적 근간으로 활용될 오스트롬의 공동자원론과 마을공동체 기능 등을 중점적으로 서술한다.

### 1. 공동체와 마을, 그리고 3섹터

#### 1) 공동체 논의

공동체는 사회과학 영역에서 가장 오래된 관심사 중 하나이다. Zimmerman(1938)은 사회과학에서 통용되는 공동체 개념의 네 가지 핵심적 특성을 제시하는데, 공동체는 사회적 사실(social facts), 고유 속성(specification), 결사체(association), 한정적 지역(limited area) 등의 특성들로 구성될 수 있다(Zimmerman, 1938). 또한, 공동체 개념을 최초로 군집하여 유형화한 Hillery(1955)는 <Definitions of community>를 통해 94가지 공동체 특성을 16개의 군집으로 유형화 하였다. 그에 따르면 공동체는 세 가지 핵심적 특징들로 요약될 수 있는데, 특정한 지리적 영역(geographical area),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하나 이상의 유대 관계(common ties)를 바탕으로 공동체가 형성된다고 분석한다(Hillery, 1955). 공동체 논의를 사회 이론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 Plant(1978)의 경우, 다양한 사회 이론 속에서 제시하는 공동체의 개념적 유래를 비교 분석하였다. 대표적으로

맑스주의의 경우 공동체를 소외되지 않은 사회 구성체로 보며, 계급 투쟁과 국가성이 희석된 상태에서 인간은 공동체적 존재로서 존재한다고 본다. 반대로 보수주의에서의 공동체는 위계적으로 조직된 인간 사회 집단으로 이해되며, 공통된 전통과 제도를 지향하는 통일된 실체로 정의된다. 이와 더불어 아나키즘과 아나르코 공산주의, 생디칼리즘 등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에서 바라본 공동체의 개념은 공통적인 이념 아래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실체적 집단으로 정의된다(Plant, 1978; Taylor, 1982). 이처럼 공동체의 개념은 단 하나의 개념으로 환원될 수 없을 만큼 다차원적이지만, 김미영(2015)에 따르면 공동체는 사회적인 것의 직접성(immediacy), 즉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양식과 사회적 관계를 내포하는 양식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 특성이 부각된다(김미영, 2015).

한편 초기 공동체 연구가 이루어졌던 인류학적 연구는 공동체를 전통적 차원의 부족, 혈연 집단에 국한시키고, 소규모 조직의 안정과 통합이라는 목표 하에 공동체가 생산하는 전통적 도덕 관계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근대로의 진입 이후, Tönnies(1887)는 <*Gemeinschaft und Gesellschaft*>를 통해 인간 사회의 상이한 결사적 삶이 역사의 발전 단계에 따라 공동 사회에서 이익사회로 변화된다고 보았다. 이는 한 사회를 지탱해왔던 공동체가 근대성으로 인해 그 토대가 약화된다는 지적과 궤를 함께한다(김형주 & 최정기, 2014; 이재열, 2006). 전통 사회와 공동체적 삶을 동일시했던 퇴니스와 반대로, Durkheim(1893)은 오히려 과거의 공동체적 결사가 기계적이며, 근대 이후에 들어서야 사회는 비로서 유기적인 연대를 이루었다고 보았으며, 그 원인으로 노동의 분업과 전문화를 제시한다(민문홍 & Durkheim,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Day(2006)는 공동체 논의가 전통과 근대라는 이분법적 틀 속에서 위치 지어지는 점을 경계한다. 가령 공동체는 현대 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는 일종의 부르주아적 향수에 불과하다는 해석이나, 공동체 양식을 단순히 제도적인 차원의 정치적 동원 단위로 보는 것은 현대 공동체를 연구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선입견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Day, 2006). 이에 Wirth(1938)는 근대 이후의 공동체는 전통 사회와 달리, 높은 인구 밀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하며(Wirth, 1938), Wellman(1999)은 오늘날 공동체의 핵심을 도시 자본주의 속에서 소통이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한 관계적 공동체(relational community)라 보았다(Wellman, 1999). 무엇보다 Castells(1983)는 시장주의, 국가주의, 정보화주의에 맞설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결집력이 로컬리티(locality)에서 창출된다고 보았으며(Castells, 1983), 현대 공동체를 근린 지역(neighborhood)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주문한다. 여기서 지역은 구성원들의 복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Frazer, 1999). 이처럼 현대 사회의 공동체 전략은 일종의 방어 전략으로 이해되기도 한다(Whyte, 2012).

## 2) 마을공동체의 형성과 발전

상술한 서구 중심의 공동체 담론과 논의는 국내 공동체 운동의 발판 마련에 영향을 끼쳤다. 특히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공적 위기를 극복, 보완하는 형태의 지역 공동체 운동은 실천적 형태로 지역 사회에 큰 이바지 하였다(김미영, 2015). 그렇다면 오늘날 회자되는 마을공동체는 어디서 유래된 것인가? 직접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일본의 마치즈쿠리(まちづくり; 마을

만들기) 운동의 영향을 받으면서, 마을 기획이 본격적으로 사업화 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아키라(1987)의 저서에서도 드러나듯 동아시아 마을 만들기 운동은 물질 자원 중심의 지역 정비가 아닌, 협의체와 네트워크를 통한 자치 조직의 구성, 시민 의식의 제고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사회 운동으로 발전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을 지닌다(다무라, 강혜정, & 田村明, 2005).

이에 국내에서는 1995년 민선 자치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여러 형태의 공동체 운동이 태동되었다. 그 후 2003년 전북 진안군이 최초로 마을공동체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중앙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 또한 시범 사업의 형태로 다양한 마을 사업을 추진하였다(전동진 & 황정현, 2014). 국내 마을공동체 관련 법적 조례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사업이 기존 도시 발전 전략인 효율성, 양적 성장의 논리를 극복하고, 지속가능성, 주민 자치 등을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볼 때, 마을공동체는 도시 관리 방법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전동진 & 황정현, 2014). 한편 정규호(2012)는 국내 도시 공동체 운동을 시대별로 유형화하여 분류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적응형(60,70년대), 저항형(80년대), 방어형(90년대), 창조형(90년대 후반), 협력형(2000년대 후반)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거버넌스로서의 마을 공동체 사업이 본격적으로 구축된 것은 창조형 단계 이후라 볼 수 있다. 특히 창조형 전략 이후로는 순수 민간 차원에서 사회 운동으로 진행되었던 마을 관련 움직임이 정책과 제도의 뒷받침 되면서 행정·사업화 되었다(정규호,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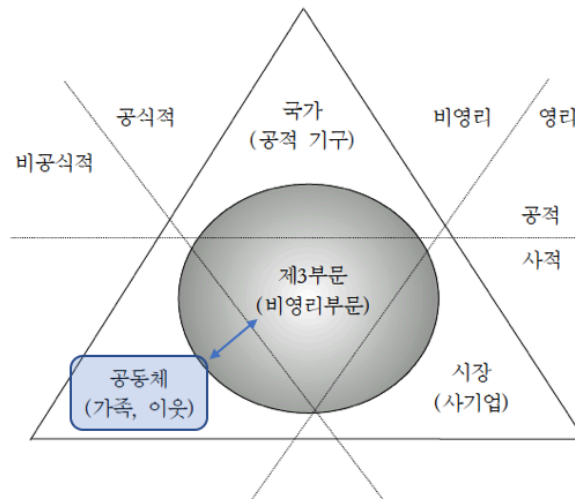
이처럼 마을공동체 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마을공동체는 비단 도시 정책의 일환이 아닌, 일반 사회 정책의 영역으로까지 확장하였다. 무엇보다 국내의

경우, 공공과 행정이 마을 사업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기존 행정 주도의 하향식 사업 기조를 철폐하고, 주민 참여와 같은 아래로부터의 참여가 마을 사업의 핵심적인 가치로 자리잡게 되었다. 여기서 행정은 지원과 민관 협력을 장려하는 역할에 집중하였다는 점에서 기존과 다른 특성을 보인다(전동진 & 황정현, 2014). 이처럼 국내의 경우 전북 진안군 마을만들기조례(2003)를 시작으로, 2000년대 후반 국토해양부의 ‘살기좋은마을만들기 사업’ 행정안전부의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업’, 중앙 부처의 ‘마을만들기지원사업’ 등이 본격화 되면서, 전국 지자체 대부분의 지역에서 마을 관련 제도가 제정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룬 서울시의 경우 2012년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현재 5년차에 접어들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다양한 마을 사업이 형성·추진 중에 있다.

### 3) 제 3섹터로서 마을의 기능: 복지적 관점

지역사회조직(communitry organization)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마을공동체 기획은 대표적인 3 섹터 영역의 활동이다. 통상적으로 3 섹터라 함은 국가나 시장 중심의 체제를 보완·극복하는 요소로 각광받아 왔으며, 비영리 영역(nonprofit sector), 비정부 영역(NGOs), 자선 영역(charitable sector), 독립 영역(independent sector), 결사체 영역(associational sector) 등으로 정의된다(박정선, 2006). 무엇보다 3 섹터 논의는 복지 혼합(welfare mix)의 맥락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기도 한다(김진욱, 2013; 홍경준, 2013). Evers(1995)와 Pestoff(1998)등에 의해 논의된 3 섹터는 복지 삼각형 모델(welfare triangle model)로 구체화되었다. 특히 Pestoff의 모델은 공공과

민간, 영리와 비영리, 공식과 비공식이라는 세 가지 축을 기준으로 각 영역 간의 긴장과 상호작용의 과정을 나타내며(김진욱, 2013; Pestoff, 1998), 이를 도식화하여 살펴보면 아래 <그림 2-1>과 같다.



<그림 II-1> 복지삼각형과 공동체

Pestoff는 국가, 시장, 공동체라는 세 가지 차원을 교차 시키고, 그 역학 속에서 3 섹터를 위치시킨다. 여기서 비공식적·사적 영역에 속하는 기존 공동체는 3섹터와 상호 호혜적 방식으로 지역 사회를 조직하며 발전하는데, 박정선(2006)에 따르면, 공동체와 3섹터는 국가나 시장에 비해 더 친화력을 가지는 편이지만, 공동체의 귀속적 성격으로 인해 3섹터 발전을 저해하기도 한다(박정선, 2006) 그러나 우리나라의 3 섹터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3 섹터와 공동체의 결합은 공과 사와 분리되지 않고, 민관 협력의 영역, 공공 지원의 영역, 사회 운동의 영역으로서 특징을 갖는다. 이는 곧 87년 민주화 이후 형성되고 발전되기 시작한 3 섹터는 공공의 영역에 예속되기 보다,



동시에 구축되기 시작하였던 점에 기인한다. 이에 국내 3 섹터 논의는 민관 협력이라는 주제에서 논의되기도 한다(서울연구원, 2012)<sup>9</sup>.

이러한 맥락에서 마을공동체는 제 3 섹터로서, 복지 혼합 전략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국내의 경우 2007년에 ‘열린사회시민연합’에서 복지마을만들기 담론이 최초로 형성되면서, 기존에 도시 계획적 마을 전략이 복지를 포용하면서 그 외연이 확장되었다(조혜진 & 유동철, 2014). 염일열(2007)에 따르면 복지 마을 만들기는 “주민이 일상 생활 환경의 정비와 개선활동을 넘어 주민의 건강과 복지, 교육은 물론 지역의 아이덴티티의 확립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운동”으로 정의된다. 이에 동 단위의 주민자치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자원 발굴 및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기존의 지역사회복지관이 발굴주의적 복지 사업에 치중했다면, 복지와 마을이 결합되는 과정은 주민의 자치적인 역량 발휘를 중요시한다. 이에 주민이 지역 사회 의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결안을 모색하는 등, 3 섹터로서 마을의 위상을 능동적으로 확장시키는 동시에, 복지생태계를 보다 광범위하게 확장할 수 있는 과정으로 이해된다(남기철, 2015). 강병노와 유영림(2015)은 복지와 마을을 연계하는데(복지마을만들기) 있어, 세 가지 주요 관점을 제시하는데, 첫째, 자원 중심적 관점에서 마을은 자립성을 기반으로 한 협동적 경제 기반을 형성하고, 이는 참여와 복지를 지향하는 특성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참여 중심적 관점에서 마을에서의 주민 참여는 주민 운동과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에

---

<sup>9</sup> 이에 신명호(2000)는 오늘날과 같이 도시 환경 속에서 구축되는 공동체는 ‘의도적 공동체’라 지칭한다. 가령 전근대 공동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 생활 영역을 공유는 현대 도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도시 속 공동체는 행정 지원형 전략을 바탕으로 공간의 근접성으로 상호 접촉의 기회를 높이고, 사회, 문화적으로 동질적 상호 호혜 전략을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마지막으로 관계 중심적 관점에서 마을 지역 주민을 활용한 지역사회 관계 형성은 지역사회복지의 조직화, 주민의 주체 의식 형성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강병노 & 유영림, 2015). 이처럼 3섹터 복지 전략으로서 마을공동체는 지역 사회의 역량 강화를 꾀하고, 현대 사회의 해체된 공론장을 복구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의의를 지닐 수 있다.

## 2. 공동자원론<sup>10</sup>에 관하여

공유 테제와 관련한 논의는 1968년 「사이언스(Science)」에 게재된 가렛 하딘(Garrett Hardin)의 「공유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으로부터 촉발되었다. 하딘은 개방된 목초지의 폐해를 사례<sup>11</sup>로 인간의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한 이기적 행위는 사회적 차원의 합의로 이어질 수 없으며, 구성원 간 자발적인 협력에 의한 딜레마의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자원 관리는 이용자들의 인간성, 협동심과 같은 선의가 아닌, 리바이어던(leviathan)적 관점에 입각한 국가의 직접 개입 방식이나,

---

<sup>10</sup> 통상 커먼즈(common)로 일컬어지는 공동자원은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던 각종 자원을 의미하며, 구성원들의 자원 이용을 보장해주는 제도 및 권리라는 의미 또한 내재 되어있다. 국내 번역서나 논문에서 commons 를 두고 ‘공유재’, ‘공유지’, ‘공유자원’ 등으로 번역이 되지만, 한국어의 공유(共有)의 의미는 ‘공동소유’라는 전제가 바탕이 되어 해석된다. 이에 commons 를 공유재나 공유자원으로 번역하면 공동소유자원(common-property resource)로 인식될 수 있다(정영신, 2016). 하지만 공동 자원의 실제적 형태는 소유권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공동으로 이용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자원(common-pool resources)으로 번역하는 선행 연구를 따르도록 한다(정영신, 2016; 최현 & 파이싱성, 2015).

<sup>11</sup> 하딘에 따르면 소유의 주체가 상정되지 않은 개방적인 목초지라는 상황적 세팅 아래, 다수의 합리적인 가축주가 있다고 가정한다. 이때 가축주들은 자신의 이익 화장을 위해 가축의 수를 계속 늘리려 할 것이고, 소유주가 없는 공유지로서 목초지는 자생적인 관리 능력을 상실하게된다. 이에 결국 공유지는 개별 가축주의 사익추구로 인해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주장이다. 하딘은 이러한 논제를 통해 지구 규모의 지속가능성에 함의를 제공한다.

사유화(privatization)와 같은 시장에 의한 해결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시되어왔다(강은숙 & 김종석, 2013; 안도경, 2011).

그러나 공유지 비극론이 제시된 이후, 공유 테제에 관한 부정적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들이 제시되었다. 우선 로즈(Rose)는 1986년 「공유지의 희극(*The Comedy of the Commons*)」을 통해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입각한 사유재산이나 정부 통제에 의해 소유되는 공적 재산을 제하고 “본래적으로 공적인 재산(inherently public property)”의 존재를 주장하며 공유재의 유용성을 강조한다(C. Rose, 1986). 이에 로즈는 재화의 특성 상 광장과 같이 공유적 가치로 생성된 자발적 지대를 사적 영역으로 포섭될 수 없도록 보호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하딘의 테제에 전면적으로 반박한다(C. Rose, 1986; 곽노완, 2015에서 재인용).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200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은 1990년 「*Governing the commons*」를 통해 자치적 지역 공동체가 국가나 시장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한다(Ostrom, 2015)<sup>12</sup>. 오스트롬은 전 세계의 자치적 공동체 사례<sup>13</sup>들을 연구하고 공동자원의 유용성을 제도경제학의 이론으로 종합하는 등, 공동자원

---

<sup>12</sup> 그러나 오스트롬은 자치 제도나 자치적인 자원 관리가 정부나 시장을 통한 자원 관리에 비해 우월하다거나, 자치제도와 같은 3섹터의 영역만이 기존의 이분법적 접근을 넘어설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오스트롬은 사회 속 다양한 제도들을 국가나 시장이라는 두 가지 개념적 틀에 끼워 맞추려는 이론 및 정책적 시도를 비판하고, 자원 관리의 프레임을 복잡하고 (complex), 다중심적인(polycentric) 관점에서 조망한다(안도경, 2011).

<sup>13</sup> 자치적 지역 공동체의 사례들로는, 스위스 알파스의 마을공동체, 일본의 산악 마을, 스페인의 관개 시설, 브라질의 근해 어장 및 미국 메인 주의 가제 어장과 지하수 및 오클라호마 주 마을의 석유 자원 등 다양하게 제시되며, 오스트롬은 이러한 사례들의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차지적으로 관리되는 수 많은 공유 공동체들이 어떻게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제도의 설계 원리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다음 장에서 상세히 후술될 것이다.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특히 인간의 집합적 행동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딜레마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두고, 성공적인 공동체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여덟 가지의 제도 설계 원리(design principle)를 도출한다. 이와 같은 이론적 단초는 오늘날 각종 공유 담론에 큰 기여를 하였다. 오스트롬의 논의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용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도가 시장과 국가의 도식적인 이분법에서처럼 완전히 사적이거나 완전히 공적인 경우는 거의 없다. 많은 성공적인 공동자원은 사적인 것처럼 보이는 제도들과 공적인 것처럼 보이는 제도들의 풍부한 혼합물이기 때문에 경직된 이분법의 틀에 들어맞지 않는다(…) 실제 상황 속에서 공적인 제도와 사적인 제도는 별도의 세계에 있다가 보다 서로 얽혀서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한다”(오스트롬, 2010[1990]:43-44; 안도경, 2011에서 재인용)*

이처럼 공동자원 패러다임은 마을공동체 연구에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특히 최근 자본주의의 심화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려는 취지로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마을 경제, 협동조합 등의 논의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Gritzas and Kavoulakos, 2015; Peredo and Chrisman, 2006; 신명호, 2009; 김상준, 2008; 권상철, 2015에서 재인용), 이러한 공동체 기반의 대안적 체제에 자리잡은 상당수 유무형의 자원들이 공동자원을 기반에 두고, 이를 토대로 지역 단위의 상이한 제도화 과정이 발생한다는 거버넌스적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권상철, 2015). 특히 데이비드 볼리어(David Bollier)에 따르면 사회적·시민적 커먼즈(Social and Civic Commons)로 분류될 수 있는

마을공동체는 현대 도시 사회 속에서 공유와 협력적 삶의 원리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이론적, 실천적 단초를 마련한다(Bollier, 2014). 무엇보다 근린생활단위 내에서 발생하는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기존의 국가나 시장과 같은 이분법적 패러다임으로만 대처하는 시도는 복지 자원의 총량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유도할 수 있어, 마을공동체를 위시로 한 공동화 전략은 중요한 복지 전략으로 고려될 수 있다(한동우, 2012; 홍경준, 2013). 이처럼 도시 계획을 하나의 커먼즈로 파악하고(city as a commons), 지역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Borch & Kornberger, 2015; Dellenbaugh et al., 2015),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획을 공동자원론에 입각하여 조망하는 시도는 유용하리라 판단된다.

### 1) 공동자원의 속성

그간 경제학을 중심으로 사유재(private goods)와 공공재(public goods)를 둘러싼 개념의 구분은 여러 생산적 논의를 가능케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기본적 재화 형태라 할 수 있는 사유재의 경우 배제성과 경합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시장의 원리가 기반이 되는 환경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이용하는데 있어 이러한 성격의 공급되기 어려운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공공재(public goods), 집합재(collective goods) 등이 해당된다(최현 & 파이싱성, 2015). 이러한 종류의 재화는 행위자의 접근을 배제할 수 없고(비배제성), 행위자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이 감소하지 않는(비경합성) 특성을 지닌다. 이와 같은 사유재와 공공재의 양분은 사무엘슨(paul samuelson)과 머스그레이브(Richard Musgrave)의 논의에 의해 구체화 되며,

양자간의 구분은 소비의 공동성(jointness of consumption)<sup>14</sup>에 기인한다(정영신, 2016). 뒤이어 1965년 제임스 뷰케넨(James M. Buchanan)은 특정 규모의 구성원이 함께 사용하는 클럽재의 개념을 제시한다. 이는 순수한 사유재나 공공재와 달리, 소비에 의해 발생하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배제성을 띄나, 멤버십의 영역 내에서는 경합성을 지니지 않는 재화를 의미한다(Buchanan, 1965; 정영신, 2016에서 재인용).

그러나 오스트롬은 기존 재화 분류 양식에 공동 자원(common resources)을 추가한다. 소위 커먼즈(communs)로 이해되는 공동자원은 공동으로 자원을 소유하되, 그 이용의 양태는 사용자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특징에 의거한다. 이는 곧 재화에 접근하는 행위자들의 접근을 막을 수는 없으나(비배제성), 여러 행위자들이 재화에 접근할 경우, 그 편익은 감소하는 특징(경합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는 곧 공동자원을 활용하는 상황에서 한 행위자의 자원 접근으로 인해 다른 행위자들의 이용량이 감소하는, 가령 마을 숲, 목초지, 마을관개시설 등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원이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일컫는다(정영신, 2016). 상술하였듯, 공동자원, 공유재 논의는 재화의 접근과 사용 및 유지에 있어 자치적인 협동으로 자원을 관리하기 어려워 공유의 비극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는 하딘의 주장에 전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이에 기존에 제시되었던 정부 개입이나 시장을 활용한 사유화와 같은 이분법적 해결 도식을 넘어, 자치적 해결이라는 해법 도안을 위한 단초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그 이론적 의의가 마련된다(Ostrom,

---

<sup>14</sup> 사유재는 재화의 특성상 분할과 타 행위자에게 할당이 가능하지만, 공공재의 경우 행위자 차원에서 발생하는 소비가 타 행위자의 소비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대별되며, Samuelson은 이러한 차이를 소비의 공동성(jointness of consumption) 여부로 기준을 제시하였다.

2015; 김정돈 & 류석진, 2011에서 재인용). 위와 같이 경합 및 배제의 여부를 토대로 범주화 한 재화의 분류는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II-1〉 재화의 분류

	배제성	비배제성
경합성	사유재	공유재
비경합성	클럽재	공공재

이처럼 경합성과 배제성의 유무로 재화를 도식화하여 분류하는 작업은 재화의 속성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도구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위의 도식과 같이 재화가 고정적으로 구분되고 고유한 물리적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조망하는 접근이 꼭 바람직한 접근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김정돈 & 류석진, 2011). 가령 재화의 물리적 속성 상 공공재로 분류되는 공기 또한 밀폐된 공간 속에서는 그 사용량이 제한되고 경합성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재화는 시점과 특정 사회적 맥락 속에서 그 재화에 접근하려는 행위자를 둘러싼 전반적 정보에 입각하여 그 속성이 정의되는 것이다(김정돈 & 류석진, 2011; 정영신, 2016). 이처럼 오스트롬의 공동자원 패러다임은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지니는 재화의 한 종류이지만, 그 개념적 도식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보다 다양한 상상력의 차원에서 그 의미를 확장하고 적용하는 것이 오늘날의 공동자원 연구에서 중요한 함의로 보여진다(정영신, 2016). 이는 곧 공동자원이 오스트롬의 초기 저작에서는 물리적인 자원관리의 패러다임에 국한되었다면, 최근에는 지식과 정보와 같은 비가시적인 영역으로까지 확장 되기 때문이다(안도경, 2011; 정영신, 2016). 특히 본 연구에서는 “공동육아나 지역도서관, 마을장터, 마을만들기,

젠트리피케이션 등과 같은 현대 도시 공간의 재사유화”에 대한 저항의 일환으로 구성되는 공동자원의 개념을 적용하고(김경돈 & 류석진, 2011; 정영신, 2016), 그것을 마을공동체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아울러 최근 도시 계획을 하나의 커먼즈로 파악하고(city as a commons) 지역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Borch & Kornberger, 2015; Dellenbaugh et al., 2015), 공동자원의 적용 가능성은 한층 더 증가하게 된다.

가까운 사례로 마포구 성미산 마을의 배수 사업 저항 운동 과정을 보면 마을공동체 내부의 공유자원을 둘러싼 갈등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성미산 저항 운동은 지난 1997년 성미산의 실질적 소유주였던 한양 재단이 서울시와 마포구 차원의 협의 과정을 거쳐 배수지 공사 사업을 인가하고, 해당 지역에 아파트를 개발하는 추진안을 발표하면서 촉발되었다. 그 당시 서울시는 재단으로부터 약 9천여 평의 토지를 매입하는 등, 재단은 배수지 사업이 완료되면 성미산 정상의 녹화 사업을 추진하고, 공원 부지를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건립안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아파트 건설을 강행할 경우, 도시 계획 규정 상 주민 운동 시설 및 운동장 용도로 지정된 6천 5백 평에 대한 시설 해제가 이루어지고, 전체 부지의 약 70%의 대지 형질을 변경해야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었다(한주희, 2008). 이러한 추진안이 시행 단계에 접어들자, 2001년 7월 성미산 공동육아 단체, 성미산 체조모임 동호회 등 21개의 지역 주민 모임들이 결사하여 ‘성미산을 지키는 주민연대’를 조직하고 서울시와 한양 재단의 사업 안에 대한 저항 운동에 돌입하였다.

서울시는 당시 자연 친화적 법면 녹화 공법을 사용하여 성미산 공원의 생태화를 보장하였지만, 그러한 추진안에 동의할 수 없었던 성미산 대책위는



서울시의 계획안에 반대하고, 2001년 환경 전문가, 환경 연합, 여러 NGO와 연합하여 성미산에 대한 대규모 생태학적 조사와 더불어 2만 여명의 반대 서명을 이루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03년 1월 29일 성미산 정상에 약 9천여 평의 수목을 기습적으로 벌목하게 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성미산 정상에 머무르며 릴레이 투쟁을 이어나갔다. 뒤이어 지역 국회의원, 구청장 등의 정치행위자들과 주도 면밀한 협상을 거치고, 각종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성미산 사태를 대중화시키는데 성공하였다(한주희, 2008). 이러한 성미산 주민들의 저항 운동은 결국 배수지 건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고, 2003년 서울시는 결국 성미산 배수지 건설계획을 유보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성미산 사례는 마을 주민들이 공유하는 공간과 자원에 대한 기존 인식을 전면적으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김동완 & 신혜란, 2016). 아울러 공동자원의 관점에서 볼 때, 토지의 실 소유주인 사적 영역과 중간 협의체이자 공적 영역을 대변하는 서울시의 도시 계획에 대항하여, 지역 근린 조직이 공동자원 확보를 위해 자치적인 결사 능력을 지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각인시킨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 2) 공동자원 설계 원리<sup>15</sup>

이처럼 공동자원의 패러다임 변화는 자원의 관점을 고정적 재화로부터 보편적인 공동 거버넌스로 적용가능성을 확장 시킨다는 점에서 의의를

---

<sup>15</sup> 오스트롬은 이를 *Design principles illustrated by long-enduring CPR institutions*라 명명하였으며 (Ostrom, 2007), 국내 번역의 경우 자치적 지역 공동체 설계 원리(박아름 & 권태상, 2013), 장기 존속형 자치제도(김경돈 & 류석진, 2011),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커먼즈의 이용 및 관리 제도(정영신, 2016), 공유자원의 자치관리를 가능하게하는 제도 디자인 원리(안도경, 2011) 등으로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 적용되었다.

가진다<sup>16</sup>. 오스트롬은 오랜 기간 공동자원의 딜레마 상황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자치적 공동체의 사례를 통해 그것이 가능했던 제도적 설계 원리(design principle)를 8가지로 도출하였다(정영신, 2016; Ostrom, 2015). 이를 위해 그는 지역 공동체의 실제적 삶(real life)을 오랜 기간 관찰하였으며, 자연 자원, 연안 어장, 마을 산림, 지역 지하수 및 인공 자원 및 각종 사회적 딜레마 갈등이 발생하였던 지역의 사례를 통해 공동자원 이론의 일반화를 시도한다. 즉, 특정 지역 공동체가 8가지 제도적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공동체와 공동자원의 지속 가능성이 제고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 명확한 경계의 정의(Clearly defined boundaries)이다. 여기서 경계는 공동체 내 각종 유무형의 공유 자원을 두고 행위자와 자원의 접근 및 추출 가능성을 일컫는 것이다. 즉, 경계는 지역 내 이해 집단들의 집합 행동을 가능케 하는 첫 단계로 인식되며, 조직 내 행위자의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박아름 & 권태상, 2013). 이를 위해 커먼즈(Commons) 체계로부터 유무형의 자원 유량을 누가, 얼마나 인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계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사용/제공 규칙의 현지 조건과의 부합성(Congruence between appropriation and provision rules and local conditions) 여부이다. 이는 공동체 내 자원의 물리적 제약, 여건 등에 입각하였을 때, 그 자원에 접근하는 지역 행위자들이 얼마나 지역 자원의 특성을 잘 고려하는지를 의미한다. 이는 공유 자원의 물리적 지속 가능성과 자원 관리의 측면에서 의의를 지니며(Ostrom, 2015), 자원의 유량, 시공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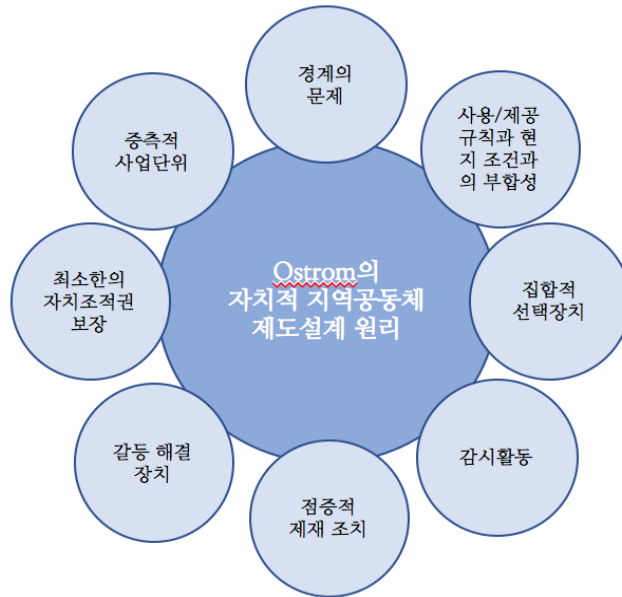
<sup>1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자원의 속성을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연구는 오스트롬 패러다임에는 충실하지만, 제도설계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점에서 이론 생산적 연구로 발전하지 못한다는 비판 또한 제기된다(정영신, 2016).

등의 현지 조건과 노동력, 물자 등의 제공 규칙이 어떻게 조율 되는지에 중점을 둔다. 세번째 원리는 집합적 선택 장치(Collective-choice arrangements)이다. 해당 원리는 공유 환경 속에서 요구되는 규칙이나 조건을 행위자 내부 집단에서 생성하고 시정할 수 있는 장치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집합적 선택 장치는 공동체 내 여건에 맞춰 행위자와 그 집단이 얼마나 공동체 활동을 위한 의사 발언 권리를 지닐지와 연관된다. 따라서 공동체 실행 규칙에 영향을 받는 행위자들은 규칙 제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박아름 & 권태상, 2013; 정영신, 2016).

네번째 원리는 감시활동(Monitoring)의 여부이다. 공동체 내에서 감시의 존재는 내부에서 제정된 규칙을 내부 행위자가 이행하게끔 한다. 이는 규칙 합의 이후 발생하는 각종 유혹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내부의 감시는 외부의 권위체로부터 발생하는 제재에 비해 비용적 우위를 지니기도 한다. 따라서 공동체 결속에 있어 감시 제도의 존재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박아름 & 권태상, 2013). 다섯 번째 원리는 점증적 제재 조치(Graduated sanctions)이다. 네번째 원리인 감시 제도는 공동체 내 행위자들이 서로간의 위반 행위를 발견하고, 이는 가벼운 처벌 제도로 연계된다. 따라서 질서 유지를 위한 서로간의 수평적 감시 체제는 공동체의 유지에 기여하게 된다. 이에 제재 조치는 실행 규칙을 위반하는 사용자들이 서로를 책임지고, 양자 모두에 행위의 경중을 가능케한다(Ostrom, 2015). 여섯째, 갈등 해결 장치(Conflict-resolution mechanisms)이다. 소규모 공동체라는 특성에 입각하여, 공동체 내부 행위자 간 혹은 사용자와 관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때 외부 권위체가 아닌 공동체 차원에서 갈등 해결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내부적 장치는 단순히 비용적 우위를 지니는 것을 넘어, 내부

행위자들 간의 책임 및 권리 증진에 용이한 제도로 인식된다(박아름 & 권태상, 2013).

일곱 번째 원리는 최소한의 자치 조직권 보장(Minimal recognition of rights to organize)이다. 해당 원리는 공동체 내부 행위자들의 권리가 외부 권위체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자체적인 공동체 규칙을 제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이며, 내부 집단의 조직화 과정의 중요성에서 파생된 원리이다. 가령, 특정 마을 공동체의 지역적 특징에 입각한 규칙이 실행되고 있는데, 중앙 정부의 일괄적인 법적 제도가 적용되어 지역 공동체의 질서가 바뀐다면, 공유 체제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아름 & 권태상, 2013; Ostrom, 2015). 마지막 여덟 번째 원리는 중층의 정합적 사업 단위(Nested enterprises)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Ostrom의 기존 제도 원리들이 소규모 공동체 사례에 제한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항하여 새롭게 적용된 원리로, 규모가 큰 공동체에 필요한 제반 조건이다(Ostrom, 2015), 가령 공동체의 단위가 클 경우, 중층의 공동체 사업이 운용된다. 이 때, 각 층위의 제도는 서로간의 정합성을 지녀야 하며, 특정 영역에만 적용되는 규칙이 다른 층위에 존재하지 않거나, 규칙 간 심각한 이질성을 유발한다면, 공동체 사업 전체의 시스템이 통일될 수 없다. 이에 공동체 사업의 장기적 유지를 위해서 공유 자원의 사용, 제공, 감시 활동, 집행 운영 등 전반의 사업 단위가 중층적으로 조직화되어야 한다(박아름 & 권태상, 2013).



〈그림 II-2〉 오스트롬의 자치적 지역공동체 8가지 제도 설계 원리

위와 같은 오스트롬의 제도 설계 원리는 오늘날 각종 공동자원 연구에 유용한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과거에 공동자원의 개념이 자연 및 환경의 영역에 주로 적용되었다면, 최근에는 도시 공간을 커먼즈로 파악하고 도시 계획에서 시민들의 영역을 연구하는데 도입되기도 한다(Borch & Kornberger, 2015). 특히 마을공동체, 친환경 마을, 공동 거주지 등과 같이 소규모 공동체 내 공존과 협력적 원리가 작용하는 경우와 같이 사회적 거버넌스 제도를 설계하는데 중요한 단초가 된다(정영신, 2016). 이는 곧 기존의 공유 자원을 다루는데 제도주의적 접근이 강조되었다면, 최근에는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공동의 것’을 연구하는 추세로 패러다임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McCay, 2002).

### 3) 마을공동체와 공동자원의 접목

이처럼 마을공동체와 공동자원의 접목은 자치적 지역 공동체를 지향하는 마을공동체가 국가나 시장이라는 이분법적 거버넌스를 탈피하여, 새로운 대안적 체제로서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오스트롬의 초기 이론은 공동자원을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조망하여, 지나치게 자원관리의 패러다임에 국한시켰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에 Linebaugh(2013)는 공동자원을 ‘공동의 활동’으로 바라보고, 한 사회의 정치, 경제적 제도와 문화 속에 배태된 전반적 생활 양식으로 파악하길 권고한다(Linebaugh, 2012; 정영신, 2016에서 재인용). 이는 곧 커먼즈를 자원관리의 패러다임에서 정치생태학적, 구성주의적 접근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이노우에, 최현, 정영신, & 김자경, 2014; 정영신, 2016; McCay, 2002). 정영신(2016)은 이러한 맥락에서 공동자원의 기존 접근법과 확장된 접근법을 비교하였으며, 이를 제시하면 아래 <표 2-3>과 같다.

<표 II-2> 공동자원 연구의 두 가지 접근법

접근법	자원관리 패러다임	정치생태학적 접근법
이론적 기반	신제도주의	구성주의
공동자원 정의	공동자원(비배제성&감소성)	공동의 것으로 사용되는 자원과 공간
문제 상황	무임승차, 혼잡, 남용	인클로저, 사유화
문제 소재	공동체 구성원 내부	공동체 구성원 외부
인간과 자연 관계	분리, 독립적	분리 불가, 사회생태체계 일부
해결책	자치적 자원 관리	공동의 것에 대한 권리 확보
연구 대상	공동자원 상황에서 자원 관리	공동 자원과 커뮤니티 관계 변동, 생태적 생활 양식, 공동의 것을 생산하는 과정과 실천(communing)

\*정영신(2016) 토대 재구성

이처럼 지역 공동체 계획에서 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199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자산 기반 지역 공동체 발전(ABCD: 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에서 찾을 수 있다. ABCD 전략의 정의에 따르면,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변성을 위해 지역 내 각종 자원을 발굴, 활용하여 공동체 역량을 발전시키는 방식이다(Kretzmann & McKnight, 1996). 이러한 전략이 생성된 배경에는, 1980년대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기존 공공, 사회 부문의 문제 해결 주체를 민간으로 이전시키면서, 지역 공동체는 정부와 시장의 의존에서 탈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공동체 내 구성원의 개인적 자산(기술, 재능 역량), 조직적 자산(공공, 민간, 비영리 기관과의 협력 및 기여), 물리적 자산(유휴 공간 및 지역의 다양한 공간적 자산)을 결합하여 공동체의 자생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전대옥 et al., 2016; 한상일 & 김경희, 2013).

도시 공동체 공간에 공유의 개념을 적용하기위한 개념적 단초는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의 논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비는 최근 도시화의 진전이 도시공유지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과거의 농촌 공동체와 달리 ‘사회적’으로 생산된 공유지라는 점에서 그 특징을 지니며, 도시 공유지는 일반적으로 생산력이 증가함에 따라 그 위상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공유지가 1) 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해 1/N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2) 공유지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자원의 영역을 확대하는 자치 능력이 중요시되기 때문이다(곽노완, 2015; Harvey, 2012)<sup>17</sup>.

---

<sup>17</sup> 그러나 오스트롬의 지적과 동일하게, 하비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생성된 공유지가 티부의 가설 및 자본가와 재산 소유자에게 유리한 구도로 전개될 수 있는 점을 경계한다. 티부는 지역 공동체 별로 파편화된 공유지 확보를 주장하며, 이는 지역 공동체 내 거주자들이 결국 자신의

이에 공유지의 핵심은 탈상품화를 견지하는 선에서 생산 되어야하며, 공유지로 인한 가치가 지역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분배될 수 있는 체제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곽노완, 2015; Dellenbaugh et al., 2015; Harvey, 2012; Harvey et al., 2009).

대표적인 공동자원론 연구자인 일본의 이노우에 마코토(2014)는 기존의 공동자원론을 시민사회 및 협치의 프레임과 접합시켜 근대 이후 소멸된 공적 영역을 사회경제적 모델로 변환시키는 구축 과정에 주목한다(이노우에 et al., 2014) 이처럼 공동자원과 마을공동체를 접목하는 시도가 비교적 새로운 접근이라는 점은 마을공동체 전략 설계에 있어 ‘자원’의 재인식을 가능케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닐 수 있다. 가령 제주도 가시리 마을의 사례로 공동자원과 마을만들기의 관계성을 탐구한 최현 외(2016)의 연구는, 공동자원과 공동체의 현대적 복원에 있어 마을만들기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최현 & 김선희, 2016).

상술한 인식은 서울시 마을공동체와 복지국가의 체제를 비교한 김형용(2016)의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날 도시마을공동체가 지녀야 하는 핵심적 가치를 탈상품화와 집합적 소비로 제시한다(김형용, 2015, 2016). 이는 도시 속 공유지 체제이자, 비제도적 장치로 비유되는 마을공동체는 국가라는 제도적 장치와 결합되는 환경적 한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가령 곽노완(2015)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한 시민들의 공유지 복원과 확대가 중요한 시대적 사안이지만, 반대로 토지 가치가 필연적으로 상승하여 자본가에게 이득이 될 수밖에 없는 서울시 도시의

---

선호에 의거하여 거주지 위주의 참여 거버넌스를 확보할 수 있는 점을 경계한다. 이에 실제 뉴욕시의 사례를 볼 때, 가진자들은 부촌으로 이동하고, 빈자들은 열악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오히려 불평등과 계급 이질성을 강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곽노완, 2015).



환경을 고려했을 때, 구청 이하의 단위에서 서울시 차원의 유무형의 공유지를 미시적으로 확대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서울시)의 역할은 축소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곽노완, 2015). 위와 같이 공동자원의 확대된 지평 등을 감안하였을 때, 마을공동체를 하나의 커먼즈로 파악하는 작업은 유용하다. 특히 도시 계획을 공동자원으로 파악하는(city as a commons) 시도나(Borch & Kornberger, 2015; Dellenbaugh et al., 2015), 마을공동체 기획과 같이 근대적 생활세계를 “공동의 관점”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는(정영신, 2016), 공동자원 형성 과정에서 사회적 기능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기본계획(2011)을 통해 서울시 마을 사업에서 자원으로 인식될 수 있는 마을 자원 현황을 제시한다. 우선 마을공동체 사업 이전부터 마을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온 단체는 상당수 비영리 민간 단체, 풀뿌리 시민단체 등이다. 이들은 서울 지역 주민들의 생활 욕구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촉진제 역할을 담당한다. 통상 마을 현장에서 자치구당 평균 1~2개 정도의 기관이 운용되고 있으며, 서울시 전체로 보면 약 50~60개의 단체가 마을 활동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단체 외에 424개의 행정동 별로 지역주민대표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가 존재하는데, 이들은 지역주민들을 대표하여 공동체 활동을 선도하는 등, 행정과의 교량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일상 생활을 지원하는 각종 공공시설 또한 유용한 마을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복지시설과 문화관련 시설 등이 사례이다. 현재 서울시 기준 복지시설은 약 5,500개소, 문화시설은 920 개소로 생활권 단위의 지역거점시설, 소규모 시설 등의 형태로 시 전역에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 시설은 지역주민들의 필요한 서비스를 공동체 활동과 연계시켜 제공하는 등, 최근에는 공동체

형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 시설은 지역 주민들에의 개방성, 공동체 지향적 성격 등으로 인해 그 유용성이 확인된다(서울시, 2011). 아울러 최근 마을공동체의 핵심적 활동인 지역 경제 관련 자원의 경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다양한 조직들이 증가하고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회적 기업의 경우, 공동체 일자리 활성화를 주요 목적으로 삼으며, 취약 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및 서비스, 지역 사회의 기여 등을 핵심 기조로 삼는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예비 사회적 기업까지 합치면 대략 340개의 사회적 기업이 공동체 내에서 활동 중에 있다.

### 3. 마을공동체 기능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 2조 1항에 따르면,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 문화, 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 사회적 범위를 말한다”로 명시되어있다. 아울러 2017년 개정된 제 9조 1항의 세부 조항 11개<sup>18</sup>에서도 확인되듯,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획의 핵심적 기능은 자치구 지역 내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환경·복지·문화 등을 공유하는 사회 공간적 영역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서울시, 2016), 지역 공동체 차원의 작은 정치, 경제, 복지시스템을

---

<sup>18</sup>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 영역으로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기업 육성, 3) 환경 및 경관의 보전 및 개선, 4) 마을 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6) 마을공동체 관련 단체 및 기관 지원,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 8) 마을학교 운영, 9) 마을공동체 관련 연구 및 조사, 10) 마을 자원을 활용한 아동과 청소년 직업체험 및 문화체험, 11)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사업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처럼

구축하고(김기홍, 2015), 서구적 관점<sup>19</sup>을 적용해보면, 긍정적 마을 효과(village effect)와 이웃 효과(neighborhood effect) 창출을 시도한다고 볼 수 있다(Pinker, 2014; Sampson, 2012). 이와 같은 기능들을 주요 골격으로 삼는 서울시 내 마을공동체는 다양한 양상으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선행 연구에 입각하여 마을공동체의 기능을 경제, 정치·사회, 복지, 생태·문화 등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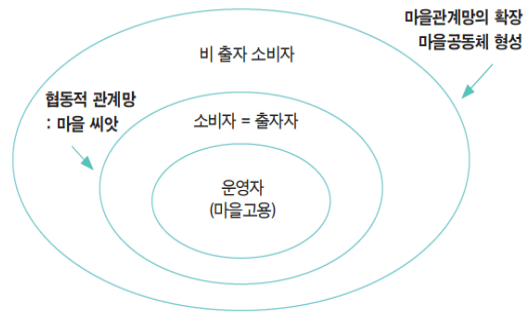
### 1) 경제적 영역

마을을 기반으로 한 경제적 기반은 2010년 하반기 당시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의 주도로 추진되었으며,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이란 이름으로 지역 내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시작되었다. 2011년에 이르러 사업명이 ‘마을기업’으로 변경되어,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으로 정의되고 사업이 후속적으로 추진되었다(서울특별시 et al., 2015). 이는 2012년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에서 제정된 ‘마을공동체기업’의 정책적 기조와 일치하여, 마을 기업과 생활협동조합을 위시로 주민주도의 마을 경제를 육성시키는 민관 합동 TFT의 출범으로 이어졌다. 이에 서울시에서 정의한 마을공동체 기업은 “마을공동체의 가치, 철학을 실현하는 범용적 수단으로, 주민의 욕구 및 지역 문제 해결을 과업으로 하며, 마을 주민의

---

<sup>19</sup> 서구의 경우 마을만들기는 CO(Community Organizing), CDCs(communitiy development corporations), CCI(Comprehensive Community Initiatives), CCB(Community Capacity Building) 등의 개념으로 이해되며, 마을 내 주민들의 자치 능력을 제고하고, 정부와 민간의 행정적 조율을 통한 지역사회 복원을 꾀하는 등, 포괄적으로 볼 때, 지역 사회 내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을 주요 골자로 삼는다(Brueggemann, 2013; Hess, 1999; 김형용, 2016에서 재인용)

자발성에 바탕을 둔 협동조합 원리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한 형태”로 정의된다<sup>20</sup>. 서울시 차원의 마을기업 설계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3〉 서울시 마을기업의 핵심 가치와 작동 원리

일반 기업의 작동 원리가 사업 아이템과 자본 조달을 통해 인력을 고용하고 운영하는 등(고용/피고용), 소비자를 통한 수익 창출의 과정을 통해 확장되는 반면, 서울시 마을기업은 서비스의 필요를 가진 수요자가 사업의 자본을 직접 출자하고(출자자), 이 중 운영자(마을 고용)를 자발적으로 선발하는 과정으로 창업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운영자와 소비자는 협동적 관계를 맺기에, 사업 지속성의 토대를 초기에 조직해 나간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는 일명 ‘보호된 시장’을 창업단계로부터 확보해 나간다는 의미로, 일정 수준의 소비자를 마을 안에서 확보하고 창업으로 이어지는 구조이다(서울특별시 et al., 2015). 또한,

<sup>20</sup> 한편, 서울시 사회적 경제 홈페이지(se.seoul.go.kr)에 따른 마을 기업의 정의를 살펴보면, “마을공동체에 기반을 둔 기업 활동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에 기초해 주민의 욕구와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마을 공동체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또한, 민주적 운영과 협동조합 원리에 기초를 둔 마을 기업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특성화된 자연자원, 인적자원, 가공제품, 문화 등 유무형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설명한다.

상시 등록제로 지역주민 5인이상, 지원금의 10%이상 출자금(자부담), 선정 이후 2개월 내 법인 설립이라는 기업 설립의 요건을 토대로 한다. 서울시(2015)는 마을기업의 3대 요소로 마을 필연성, 자립 가능성, 공공성을 제시하는데, 마을필연성은 마을의 필요와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였는지, 지역 주민 및 단체와 협동적 관계망이 구축되었는지, 지역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지 등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점을 핵심적 특징으로 삼는다. 이와 같은 요건을 토대로 현재 서울시의 운영 중인 마을 기업의 현황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II-4〉 서울시 마을기업 운영 현황

상기한 서울시 마을공동체기업의 일반적 배경에 근간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박소연 외(2013)는 통인 시장의 사례 연구를 통해 마을기업과

전통시장 간 활성화 메커니즘을 연구하였다. 특히 지역 자산을 활용하는 마을기업의 특성상 고정적 시장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점에 주목하고, 지역 공동체의 이익이 추구하고, 마을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상인들의 공동체 의식이 확대되는 등 지역 상인의 역량이 강화된 점을 평가한다. 하지만 부동산 가치가 상승되거나 업종이 변경되는 등과 같은 부수적 효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한다(박소연 & 박인권, 2013). 또한, 이흥택(2012)은 성미산 마을의 경제공동체 사례 분석을 통해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성장 방안을 고찰하였다. 특히 지역사회 내 필요 및 지역 주민의 요구가 관철되어야 하고, 구성원들 간 사회자본의 구축 선행, 지역특성에 맞는 창업 자금 마련 방법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진단한다. 아울러 갈등 방지를 위한 소득분배 구조 구축을 권고하였다.

## 2) 정치·사회적 영역

마을공동체를 둘러싼 정치적 기능은 오늘날 대의민주주의 및 절차상 민주주의 제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실질적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주민의 자치 능력을 확보하자는 기조와 맞물려 형성되었다(나종석, 2013; 이은희, 2008). 이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 1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제2조에 따르면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이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로 마을공동체를 정의한다. 이처럼 서울시에서 상정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은 현대 대의 민주주의 시스템 내에서

“원자화된 개인들”이 공동체를 직접 형성하여 정치적 기능을 확보한다는 주민 참여의 가치를 핵심으로 내세우며(권효림, 2015), 이를 직접 민주주의 혹은 결사체 민주주의<sup>21</sup> 등으로 해석한다(김의영 & 한주희, 2008).

마을공동체의 사회적 기능 또한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다.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 3조 기본 원칙 1항에 따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 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로 목표를 명시한다. 이처럼 마을 사업은 참여, 연대, 협력 등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중요한 의제로 삼는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사회적 기능을 세 가지로 제시하는데, 첫째, 지역사회 내 다양한 구성원들이 마을을 통해 서로를 알게 되고, 공동체 형성 과정을 통해 응집력을 가지게 된다. 둘째,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새로운 유형의 마을 활동을 계속해서 발생시켜 가시적인 마을공동체 관계망을 형성한다. 셋째 이러한 마을 활동의 확장은 주민을 단절된 개인에서 함께하는 마을 구성원으로 성장시켜, 서로간의 신뢰, 참여, 나눔과 같은 가치들을 맺게 한다.

관련 선행 연구로 김의영 외(2008)는 마포구 성미산 마을을 사례로,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야 결사체 민주주의가 가능한지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기존 합리적 회의주의자, 문화주의적 비관주의자들이 예상하였던 행위자들의 제한적 의도는 포착되지 않았다. 대신, 마을 행위자와 결사체 차원의 집집단적 노력을 바탕으로, 전략과 제도적 고안에 따른 결사체 조직화 과정을 이루어

---

<sup>21</sup> 김의영 외(2008)은 집단행동의 딜레마, 파벌의 해악 등을 극복하고 특수 집단의 사적 이익만이 아닌 사회의 일반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기능성의 일환으로 결사체 민주주의를 제시한다. 이는 결사체 구성원 간 협력을 유도하고, 집단 이기주의로 전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공적 책임을 통해 예방하는 등, 대의제에 대한 과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된다.

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하였던 것은 심의(deliberation)과정, 연방제적 조직화, 지역 커뮤니티 네트워크 재활용, 마을 축제와 같은 감성적 행사 등이 활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김의영 & 한주희, 2008). 한편, 권효림(2015)은 서울시 마을 사업이 실제적으로 마을 내부에서의 정치적 의미를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마을이 동원하기 용이한 자기 규율적 경제 주체를 양산하는 통치의 공간으로 조망한다. 이에 공모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시 마을 사업이 “저렴한 가격에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얻고 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민주성에 대한 이중효과”를 얻을 수 있더라도, 여기서 민주성은 주민 동원의 수단으로 작용되며, 결국은 신자유주의적 시장 구조가 마을 체제에서도 재생산되는 지점을 비판한다(권효림, 2015),

### 3) 복지적 영역

그간 국내 복지국가 담론에서 사회 문제가 지나치게 국가나 민간 영역과 같은 제도적 영역을 매개로 해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와 같은 제도-관료주의적 접근은 개인의 체제 의존성을 증대시키고 생활세계 상의 사적 영역을 불필요하게 축소시키는 등, 지역공동체의 자립가능성을 훼손시킨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김형용, 2016; 한동우, 2012; 홍경준 & 김상균, 1999). 무엇보다 증세나 공공 영역의 확장을 통한 복지 확충이 어려운 시대적 실정을 감안하였을 때, 지역 공동체나 제3섹터의 자발적 활동을 복지 수요와 연계시키는 시도가 최근 몇 년간 다양하게 포착되고 있다(홍경준, 2013). 이는 곧 지역공동체 활동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 영역의 복지 자산을 활용하여 사회의 복지 총량을 늘리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공공복지의 경직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후기 근대적 사회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방편이라 할 수 있다(조한혜정, 2007).

이러한 흐름은 마을공동체와 복지의 연계를 가능케하는 실천적 단초를 제공한다. 서울시의 경우 2014년 ‘동마을복지센터’를 추진하면서, 기존의 복지전달체계를 마을 공동체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시도를 추진하였으며, 이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 9 조 및 동 마을복지센터 추진 기본 계획에 추진 근거를 둔다. 본 사업은 2015년 3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어, 사회복지 인력을 동 단위에서 확보하여 복지 서비스의 발굴 및 관리를 주민센터 차원에서 실시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인 주민참여 지원사업, 마을기금, 마을계획, 마을활력소 등과 연계하는 등 제도 의존적인 기존의 복지시스템을 상호의존적인 복지생태계로 전환하였다(서울시, 2017). 이와 같은 개편은 복지의 수요를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와 연계하여, 공공과 민간에 차중되었던 복지 거버넌스를 동이라는 미시적 단위로 전환하는 시도로 평가된다(남기철, 2015).

복지와 마을을 연계한 주요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김형용(2016)은 복지국가와 마을의 체제 비교를 통한 특성을 고찰한다. 양자 모두 탈상품화를 지향하는 위기 극복 수단으로서의 공통적 성격을 지니나, 복지과 마을의 일방적인 결합 보다는 각각의 목적과 방법론적 차이점에 입각한 결합이 이루어지는 점이 중요하다고 진단한다. 특히 복지국가가 근대화 과정에서 획득된 사회권으로 정의되는 반면, 마을은 근대화 과정에서 상실된 생활 공동체 복구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대별된다. 또한 복지국가는 소득재분배와 개별적 욕구 충족 등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취하는 반면, 마을공동체는 지역 내 자원과 생태적 한계, 마을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핵심적 가치로 삼는다는 점에서 전략적 특성이 상이하다(김형용,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와 마을공동체가 공통적으로 형성해야하는 과제는 집합적 소비 체계를 형성하여, 탈상품화의 기초를 견지하는 것이다(김형용, 2016). 복지국가와 마을공동체의 체제적 특성을 비교한 도표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표 II-3〉 복지국가와 마을공동체 접근법 비교

	복지국가	마을공동체
등장배경	산업화-근대화 과정에서 획득한 사회권	산업화-근대화 과정에서 상실한 생활 공동체
권리	국가와 국민간 사회적 계약	비제도적 영역으로서 주체 및 관계에 기초
정치적 측면	국가주의적 대의제 구조	풀뿌리-결사체 민주주의
예시	사회보험, 공공부조	자조적 서비스, 협동 및 우애 조합
주요 특징	국민국가, 위험관리, 탈상품화, 소득재분배, 계급연대	주민참여, 상호의존, 정서적 연대, 탈개인화
전략	보편적 복지, 증세	적극적 복지, 출자
자원의 특징	공공재(비경합적)	공유재(경합적)
운용 원리	생산성, 효율성, 형평성	생태성, 지속가능성, 통합성

출처: 김형용(2016) 자료 토대 재구성

아울러 홍경준(2012)은 한국 복지 체제의 변화 과정에 있어, 가족 간 소득 이전과 같은 형태의 이른바 ‘연복지’가 쇠퇴한 지점에 주목하며, 사회적 경제나 제3섹터와 같은 공동체에 기초한 호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열린 공동체론을 제시한다(홍경준, 2013). 이에 따르면 국가와 시장, 시민 사회와 공동체라는 사자 상호 관계 속에서, 시민사회의 비공식적 호혜(자조 및 봉사)및 시장 영역의 영리성을 위한 교환 활동(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의 결합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협동조합과 같은 형태의 공동체는 기존 복지 질서

내에서 생활 세계상 필요한 집합적 조직화에 기여하게 되고, 이러한 흐름은 최근 사회적 기업으로 조직 전환을 시도하는 복지관들의 운용 원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홍경준, 2013).

#### 4) 생태·문화적 영역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 9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영역 중 마을 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개선을 명시하면서, 마을의 환경 보전적 기능 또한 마을공동체의 핵심적 기능 중 하나로 인식한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의 취지와 부합하여, 성대골, 새재미, 십자성 마을 등이 대표적인 에너지마을을 조성하고 있는 실정이다(박종문 & 정현영, 2014). 마을과 생태의 개념을 최초로 연계(eco-village)한 것은 1991년 Gilman에 의해서다. 그에 따르면 생태적 마을은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인류의 발전을 위해,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인간 활동과 자연을 조화시키는 인간적 규모의 삶의 양식을 갖춘 정착지”로 정의된다(Gilman, 1991). 아울러 생태 마을은 일종의 유토피아적 이미지와 전통적 공동체가 교차되는 지점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임은진, 2010), 노동과 여가, 놀이, 삶의 탄생과 죽음,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 건강한 삶을 토대로 이웃과 쉽게 교류하고 조직화될 수 있는 장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생태의 개념은 생태주의라는 다양한 학문적 분파<sup>22</sup>를 근거로 삼아, 현대 사회의 각종 위험 요소들에 대한 경각심, 나아가 성찰적 근대화에 대한 요청과 그 궤를 같이한다(Beck, 1992).

---

<sup>22</sup> 생태주의의 분파는 본질적으로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를 거부한다는 공통된 기초 아래, 안네스의 심층생태주의(deep ecology), 인간과 자연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머레이 북친의 사회생태주의(social ecology), 불평등의 폐지와 인간의 자연 착취를 거부하는 사회생태주의(eco-socialism) 등이 있다.

이러한 사조가 도시 계획의 일환인 마을만들기와 결합되면, 삶의 공간을 하나의 생태체계로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 생태적 자립 능력과 순환성 및 안정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설계되는 것을 일컫는다(임은진, 2010; 최협 et al., 2001).

이처럼 생태적 가치에 근간한 마을공동체는 에너지 마을, 환경 마을 등을 위시로 하여, 에너지 절전, 에너지 교육, 마을 환경 축제, 친환경 상품 제조 등의 활동을 일삼아 에너지 시민성 양성을 목표로 한다(박종문 & 윤순진, 2016). 이는 에너지 전환 운동이라고도 불리며, 최근 국내외 곳곳에서 에너지 자립 마을을 설립하고 지방 정부의 지원 및 마을 내부의 협동조합형 출자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지역 공동체로서 기능한다. 이러한 사례를 공동체의 개념과 맞물린 드바인과 라이트(Walker & Devine-Wright)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에너지 문제에 참여하고 위험을 집합적으로 관리, 분배하는 체제를 ‘공동체 에너지 체제(community energy)’로 정의하기도 한다(박종문 & 윤순진, 2016). 이러한 기조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도 이식이 되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를 사례로 한 대표적인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김상민(2005)는 마포구 성미산 마을의 배수지 건설 반대 운동을 사례로, 사회적 자본이 환경운동과 상호작용하며, 지역 내 신뢰와 네트워크, 사회적 규범이 형성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김상민, 2005). 아울러 박종문 외(2014)는 2012년 서울시 에너지 자립 마을 7곳 가운데 시범 마을과 사업을 중단한 마을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을 행하였는데, 에너지 자립 마을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마을 별로 에너지 자립에 대한 성과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공통 사안이 도출되었으며, 마을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행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특징이 부각된다. 아울러, 서울시 주거 환경의 특성상 주택태양광의 사후 관리가 핵심적인 마을 에너지 활동으로 필요함을 제시하며, 각종 절전 활동에 대한 유인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박종문 & 정현영, 2014).

한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 9조 7항과 10항에 따르면 마을의 문화예술 및 역사를 보존하는 것, 마을 자원을 활용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체험, 문화 활동 지원 사업 등이 명시되어있는 점에 미루어보아,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획에서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평가될 수 있다. 이에 문화나 예술 또한 마을공동체 기획과 친화력을 가지는 핵심적 기능 중 하나로 부상하였으며, 이는 문화가 마을공동체 계획에 중요한 요소로, 특히 지역 내 고유한 정서를 보존하여 마을로 묶어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나도삼, 2007). Hoynes(2003)는 지역 사회의 웰빙을 경제적 영역으로만 소급 시키면, 사회적 건강이 측정될 수 없다고 보며, 지역 사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효과적인 수단으로 문화 예술을 제시한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서구 도시 재생 사업에서 문화예술이 실제 유용한 기능을 수행한 점과 궤를 같이한다(Coggan, Saunders, & Grenot, 2008). 문화적 자원이 마을공동체 활동에 활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가령 Mchenry(2001) 지역 사회내 존재하는 문화적 자원, 각종 문화예술활동은 마을 구성원간 친화력을 형성하고, 참여에 대한 경계를 허무는 유용한 수단임을 강조한다(McHenry, 2011). 아울러, 지역 주민간 친밀성을 증대시켜, 이웃에 대한 인지 정도를 상승시키는 등, 지역 갈등 해소에 긍정적이라는 사례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Chapple & Jackson, 2010). 또한, 문화예술을 활용한 지역 단위의 집합적 행위는 구성원 간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고, 실제, 지역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록 자원봉사활동의 빈도가 높다는 결과가 보고된다(민소영, 2013; Madyaningrum & Sonn, 2011).

특히 서울시는 일찍이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을 발표하면서, 문화를 기반으로 한 도시계획을 시정의 핵심적 전략 중 하나로 위치시켰다. 나도삼(2007)은 문화와 도시 정책을 연계시키기 위한 프레임을 제시하는데, 문화예술과 지역, 주민을 토대로 구성되는 문화도시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진다. 우선 1) 예술의 영역에서는 지역 내 예술 자원을 확보하고, 생태적 다양성을 확보한다. 이는 2) 환경적 영역과 상호작용하며 예술의 공간화를 위한 장소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토대가 마련된다. 아울러, 3) 생활 영역에서 자연스레 문화예술적 요소가 개발되고 활용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문화 거리, 문화 지구 등의 공간 정책이 개발된다.

#### 4. 선행 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지난 2012년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공동체 기획을 서울시 도시·사회 정책의 중심에 위치시켰다. 서울시 마을 기획의 요체에는 과거 서울시 정부가 추진했던 기업가주의적 도시정책<sup>23</sup>으로 야기된 불균형 성장, 개발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인해 요원해진 시민적 삶을 마을공동체를 통해 극복하려는 서울시의 정치적 전략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이 5년이 채 경과되지 않았다는 점에 미루어 볼 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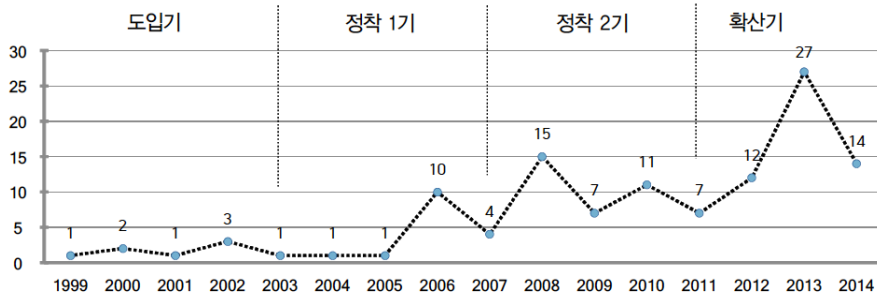
<sup>23</sup> 과거 서울시 정부는 청계천 개발, 동대문 디자인 파크, 용산 재개발, 디자인 서울 등을 위시로 하는 개발주의적 전략을 서울시 도시정책의 중심에 위치시켰다.

선행 연구의 경향은 대체적으로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추상적 연구나, 반대로 미시적 차원에서 화제가 되는 지역의 실례(實例)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볼 때, 연구를 위한 실증적 자료가 풍족하지 못한 실정이다<sup>24</sup>. 하지만 학술적 차원에서 서울시 마을 관련 연구가 증가하는 것은 마을 담론이 차지하는 현실적 위상을 반영하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자체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 매김되어, 행정적 요소로 체화되고, 지역 주민의 실제적 영역으로 구성되어가는 과정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정석 & 김택규, 2015).

이처럼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사회적 시의성으로 인해 관련 연구가 다수 누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선행 연구들의 성과를 논하자면, 우선 마을공동체의 정의와 목표, 실체적 가치 등에 대한 합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를 규명하기 위한 시도가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정석(2015)의 국내 마을공동체 연구 동향 조사에서 나타나듯, 마을공동체 사업이 정착되고 확산기에 접어들자 마을공동체의 실체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정석 & 김택규, 2015).

---

<sup>24</sup> 대표적인 서울시 차원의 마을 관련 실증 데이터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2015)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평가하며, 마을 사업 참여 주민의 가치, 인식변화, 활동 조건 변화, 행정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자료가 존재하며, 2014년에는 마을 사업 참여 주민 간 네트워크 분석이 실시되었다.



〈그림 II-5〉 연도별 국내 마을공동체 논문 편수

이와 더불어 기존 마을공동체 연구가 건축이나 도시계획 분야에 국한되어 시행되었지만, 서울시 차원의 도시-사회 전반 전략으로서 마을이 선점되면서, 전공 범위가 교육, 국제, 디자인, 문화재, 민속, 복지, 지리, 환경 등 다양한 전공에서 마을공동체 연구가 등장하였다(정석 & 김택규, 2015). 이는 곧 도시 전략으로서 마을이 아닌 대안적 삶의 양식으로서 마을공동체를 조망하는 시도들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김기홍, 2015), 행정 중심의 공동체 사업에서 지역 주민과 중간지원기구, 각종 시민 단체를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주민주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고 평가된다. 이는 서울시의 마을 기획 목적과 부합하 듯, 지역 거버넌스(local governance)로서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환경·복지·문화 등을 공유하는 사회 공간적 영역으로 자리잡아 감을 의미한다(서울시, 2016).

서울시 마을 관련 연구는 크게 네 가지 경향으로 나뉘어지는데, 1) 마을공동체 사업 성격 및 가치에 관한 연구, 2) 마을 주체에 관한 연구, 3) 분야별 마을 사업 사례 연구, 4) 마을 사업과 행정의 관계성 연구 등으로 구분된다(손우정, 2016; 정석 & 김택규, 2015). 본 연구의 목적이 서울시 주요 마을 행위자의 마을공동체 인식 유형이라는 점에 착목하여, 서울시 마을



공동체 기획의 성격, 마을 주체와 행위자 및 마을 공동자원 등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본다.

### 1) 마을 성격 연구

그간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획의 구체적인 정의, 가치 및 목표를 규정하려는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서울연구원, 2016). 나종석(2013)은 현 자본주의적 질서 내에서 마을공동체가 지나는 함의를 네 가지 관점에 입각하여 살펴보았는데, 첫째, 공동체적 관점에서 상호부조와 연대적 삶의 공간으로 이해하고, 둘째, 정치적 관점에서 다원화된 자치가 발생하는 공간으로 인식한다. 아울러 셋째로 사회 및 정치의 연계가 구축되는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의 장으로 이해하는 등, 마을의 호혜 경제적 기능을 바탕으로 대안 경제적 질서가 확립되는 공간으로 조망한다(나종석, 2013). 김진아(2014)는 공동체주의 정의론을 근간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의 핵심적 요체를 참여성, 상호작용, 합의성으로 보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 기법, 사례연구 등을 통해 세 가지 개념의 하위 구성 개념들을 도출하였다. 참여성의 하위 구성 요소로는 보편적인 참여 가능성, 상호간 주체 인식, 참여의 형태 및 참여 자발성으로 이루어지고, 상호작용의 경우 상호작용 능력과 신뢰형성, 권력분배 특성, 리더의 유형으로 나뉘어 진다. 아울러 합의성은 숙의과정, 호혜성의 원칙 및 합의이행제도와 공동체 의식 형성 등으로 구분된다(김진아, 2014).

이와 더불어 통치성 개념을 근간으로 마을공동체 성격을 살펴본 연구가 존재한다. 김동완·신혜란(2014)은 마포 성미산 마을을 푸코의 대항품행(counter-conduct) 개념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는데, 기존 발전주의

맥락에서의 도시적 삶의 품행을 마을공동체를 통한 성찰성 및 지배에 내재된 저항이라는 관계론적 권력론의 명제를 제시하다. 이에 도시 기획의 지배를 마을 운동이라는 저항 운동으로 변모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마을 공동체 사업이 신자유주의 도시화의 저항체가 아니라 새마을운동과의 유사성을 부각하면서, 구조적이고 광범위한 신자유주의 정책 기획의 일환이라는 비판적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기도 한다(박주형, 2013; 김상철, 2014; 김성윤, 2014, 서울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가령 김상철(2014)은 초기 마을공동체 사업이 주민 자치 역량 발굴에 초점을 두지만, 점차 행정의 필요에 따라 도구적으로 변모되고 있다는 점으로 주목하면서, 사례로 초기 복지사업 중심에서 주민 요구가 아닌 행정의 요구에 의해 안전마을, 아파트 공동체 문제로 변모된 것을 대표적 사례로 제시한다(김상철, 2014; 서울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아울러 박주형(2013)은 새마을 운동이 자조와 지도의 모순적 결합으로 탄생되었다면,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은 기업가주의와 컨설팅(consulting)의 모순적 결합으로 나타난 정치 기획의 일환이라 비판한다(박주형, 2013). 서울시 마을공동체 가치와 관련한 대표적인 실증 연구의 사례로 백영민 외(2016)는 서울시 25개 구에서 120명씩 할당표집하여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대상들의 정치, 사회적 가치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공동체 활동에의 참여를 설명하기 위해 탈물질주의, 권위주의, 정치적 이념이라는 개념 변수를 활용하였으며, 연구 결과 서울시 마을 공동체 참여자들은 서열 의식 및 리더십을 중시하는 권위적 가치를 선호하는 보수적 시민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기존의 연구와 다소 다른 결과로 평가된다(백영민, 김용찬, 채영길, 김유정, & 김예란, 2016).

한편, 상당수 연구의 경우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격을 현실적인 제도의

한계를 통해 비판하고, 대안적 차원의 발전 모색을 시도한다. 김세용(2013)은 현재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획이 내세우는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가 주민의 행정능력이 취약한 점, 개발 이익을 우선시 하는 등 주민참여를 ‘주민만의 참여’로 왜곡하는 모순적 상황에 주목하고,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교육 및 계획 수립, 마을만들기 법 제도화<sup>25</sup>와 같은 대안적 방안을 제시한다(이상훈, 이진원, 정윤남, & 김세용, 2013). 아울러 강상구(2014)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운동이 주민 운동의 역사적 과정이나 결과로서 제기된 것이 아닌, 박원순 체제와 함께 본격화 되었다는 점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한국 자유주의의 문제를 재생산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에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획이 노동조합이나 진보정당 등 다른 대항 공동체와 연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이슈에 반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권고한다(강상구, 2014; 서울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또한 하승우 외(2014)는 마을 공동체가 지역 및 시민 차원의 운동 역량을 강화 시켰지만, 반대로 공공이 담당해야 할 기본 영역을 방치한 사적 영역의 변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생산과 소비의 접합, 마을 정치의 복원, 다양성이 담보된 공론장 창출 등의 과제를 제시한다(권단 et al., 2014).

## 2) 마을 주체 및 행위자 연구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2012)에 따르면, 핵심 3대 과제 중 하나로 ‘마을 사람 키우기’를 제시하고있다. 이는 곧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체 사업을 이끌어갈 주체로 마을활동가를 전략적 행위 주체로

---

<sup>25</sup> 김세용 외(2013)는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정부 레벨 간 마을 관련 역할 분담, 마을만들기 전문가 양성 등을 핵심적 골자로 하는 마을만들기 법 제도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곧 마을만들기가 도시계획의 일방적 방안이 아닌 하나의 방도라는 관점을 제시한 것이다.

삼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마을공동체 기획의 목적을 주민자치의 실현이라 명시되어있다<sup>26</sup>. 이처럼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획의 요체에는 주민참여라는 핵심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으며, 이에 마을 주체 관련 연구 또한 활발히 누적되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2015)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의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평가하였는데, 마을 지원 사업을 통해 약 58,800명의 주민이 등장하였다는 점을 핵심적인 성과로 제시한다(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5). 특히 마을지원사업을 신청한 대표 제안자 총 13,536명 중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를 기입한 주민 6,953명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서울시 마을지원사업에 참여한 주민 중 여성이 약 70%이상이고, 연령은 40대가 41.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집계한 마을 주민모임 또한 괄목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공모 사업 중 단체 보다 주민제안사업의 지원수가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주민 자치와 관련된 일반적 연구로 김찬동(2012)은 현재 서울시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위원의 낮은 자치성의 원인으로 주민참여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는 곧 주민 자치의 기본적 전제 조건인 근린생활 영역에서 공동체가 부족하며, 아울러 서울시 주거의 특성상 주거의 정주성이 낮아 공동주거성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행정 독점적 권한이나 예산 결정권 등의 폐쇄성을 개선하여 마을공동체 단위로

---

<sup>26</sup>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 1 조에 따르면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명시되어있다.

위임하는 등, 공동체 형성을 지원해줄 전문지원조직의 구성 및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같은 마을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된다(김찬동 et al., 2012). 또한, 박현찬(2012)은 서울시와 해외 주요 도시의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정책을 비교하며, 독일의 ‘베를린 마을매니저 시스템’을 참고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마을 내 공동체 형성이 미비한 지역에 중대규모의 지원을 피하고, 오히려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모임 지원 및 의제 발굴 등에 힘써야 한다고 분석한다(박현찬, 2012). 이와 더불어 주민참여의 정도를 정책인지도의 관점에서 실증 분석한 이재완(2004)의 경우, ‘2012년 서울서베이’를 활용하여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주민참여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에 영국의 마을감정조사, 일본의 온라인 마을 학습 제도인 도시계획포럼 등 마을 정책 전반에 주민의 인센티브를 제고하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권고한다(이재완, 2014).

### 3) 마을 공동자원 연구

그간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자원과 같은 자원관리의 패러다임을 마을에 접목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최현 & 김선필, 2016). 이처럼 마을 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전략이 국내 지역 공동체 정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행정자치부의 「2016년 마을기업 육성 사업 시행지침」이나, 서울특별시의 「공유공간 발굴사업」 등의 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듯, 지역 사회 내 유휴 및 노후 공간 자원으로 전략된 각종 자원을 지역 내 공유 자산으로 재활용하여, 주민들의 실질적 필요와 복지 체감도를 증진시키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전대옥 et al., 2016). 아울러 최근 마을공동체 전략 중 지역 공동체 기금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서울시는 「2017 찾동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마을기금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서울시, 2017). 이에 따르면, “동 단위 보편적 생활의제 해결을 위해 민, 관이 함께 기금을 모으고 배분하는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신뢰가 쌓이는 민-관 협력망을 형성하여 지속 가능한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등의 목적을 제시한다. 이처럼 마을공동체의 공동 자산 형성과 관련된 논의가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전략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되고있다(전대옥 et al., 2016). 전대옥(2017)은 ‘지역 공동체의 소유권과 자산화 전략’을 통해 마을공동체 자산의 종류와 관리 현황 등을 고찰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 3-3>과 같다.

<표 II-4> 마을공동체 자산의 종류와 관리현황

유형		마을자산	관리 형태	관리 실태
생활 공유형	생활 필수형	학교, 마을상수도 기초생활시설 등	공적소유 or 합유	지분소유, 사유화, 주민갈등 존재
	생활 편의형	마을회관, 경로당 커뮤니티센터 등	총유 or 공적소유	
부가 가치형	공동 생산형	공동판매장, 재산권 저장시설 등	비법인 공동체 총유, 합 유 or 마을공동체 법인 소유	마을회사법인 소유, 참여 주민 제한적, 사유화 유발
	공공 위탁형	공공건축물 및 시설 공공시설 사용,영업권	공적소유, 사용권, 수익 권 위탁	위탁 전문성, 주민 대표 성 필요, 사용료 부담 및 계약 갱신 문제
공간 특화형	역사 문화형	역사유적,문화, 공연시설, 마을도서관	공적소유 및 사용권, 수 익권 위탁 or 공동체 소유	무상 임대의 어려움(관 리비용), 지분 공유시 주민 간 갈등 유발, 에 너지 사업 경우 정부 지원 증가 추세
	환경 자원형	마을숲, 마을공동체 에너지 자원, 환경 경관 자원 등		
기타형	지식 자산형	마을아카이브 및 미디어	시장거래제 아님	주민공동체 중요 자산. 총유 혹은 마을 법인 관리
	동산형	마을기금, 재단, 계모임 마을주식 등	합유, 법인소유, 신탁 등	국내 활성화 초기 단계

이처럼 마을공동체의 자원이 공동체 발전에 중요 전략으로 인식되면서, 오스트롬의 공동자원 논의와 맞물려 볼 때, 자원 체계를 둘러싼 접근은 마을공동체 연구에 유용한 근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무엇보다 과거의 공동자원이 자연 및 환경의 영역에 주로 적용되었다면, 최근에는 도시 공간을 커먼즈로 파악하고 도시 계획에서 시민들의 영역을 연구하는데 도입되기도 한다(Borch & Kornberger, 2015). 특히 마을공동체, 친환경 마을, 공동거주지 등과 같이 소규모 공동체 내 공존과 협력적 원리가 작용하는 경우와 같이 사회적 거버넌스 제도를 설계하는데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정영신, 2016).

#### 4) 연구의 차별성

이처럼 서울시 마을공동체 관련 연구는 괄목적인 양적 성장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노정한다. 우선 마을 공동체의 실체를 조망하는 성격 연구의 경우, 상당수 연구자가 지향하는 주관적 가치에 견주어 마을 사업의 성격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다소 규범적 대안 제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손우정, 2016).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마을 사업 전반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실증적 데이터가 뒷받침 되지 않는 점에 기인하며, 상술한 바와 같이 서울시 차원의 마을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사업의 지속 기간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마을공동체 현장의 생생함이나 실체가 결여된 거버넌스 관련 연구들의 경우, 마을 관련 제도나 정책들이 체계화 되면 주민을 비롯한 행위자들의 참여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는 암묵적 전제가 내재 되어있다는 점에서 정태적이고 제도 중심의 거버넌스(institution centered governance)적

접근이라는 한계를 지닌다(김의영, 2014; 유지연, 2016).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마을공동체를 보다 객관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마을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인식 유형화를 시도하며, 오스트롬의 8가지 공동자원 설계 원리 및 마을공동체 4 가지 기능을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처럼 마을공동체를 공동자원론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도시 내 지역공동체를 하나의 커먼즈로(city as a commons), 파악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정영신, 2016; Borch & Kornberger, 2015; Dellenbaugh et al., 2015). 특히 마을공동체 내, 외부를 둘러싼 각종 유무형의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 어떠한 요소들이 제도들과 맞물려 형성 되어야하는지를 Q 방법론을 통해 행위자(마을활동가)의 시각에서 탐색한다. 이와 더불어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마을공동체의 4가지 주요 기능을 동시에 반영하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마을공동체 사업의 실제적인 활동과 기능을 공동자원론과 교차하여 살펴본다. 즉, 오스트롬의 자원관리 패러다임과 마을공동체 핵심적 기능을 바탕으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주요 활동가들이 인식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주관적 인식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Q방법론을 통해 마을 행위자의 주관성을 파악하는 작업은 행위자의 주관성이라는 내면적 영역과 이론적 관점에서 활용될 제도적 설계와 어떻게 조응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



### III. 연구방법

#### 1. Q 방법론 개요

Q 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성(subjectivity)을 측정하고 응용하기 위해 1935년 윌리엄 스티븐슨(William Stephenson)에 의해 고안되었다. 그간 사회과학 연구 방법은 자연주의에 근거하여 객관성(objectivity)과 계량적 성질(quantitative)을 강조하는 실증주의 연구와, 인간의 주관성(subjectivity) 및 질적 성질(qualitative)을 강조하는 질적 연구로 대별되어왔다. 그러나 Q방법은 인간의 주관성을 기존의 객관적 접근 방식으로 연구한다는 점에서 특성을 지닌다(김홍규, 2008). 이러한 맥락에서 Q 방법론은 양적 접근이 고려하지 않는 인간의 주관성을 다루되, 현상학이나 해석학에서의 감정 이입과 추월과 같은 환원적 접근과 거리를 둔다. 아울러 양적 분석의 요인분석, 콩코스(concourse) 이론 등과 같은 객관적 방법의 채택을 통해, 기존 방법론의 한계를 보완한다(김홍규, 2008).

이에 Stenner & Stainton Rogers(2004)는 ‘Qualiquantology’라는 용어를 통해 Q방법론의 성격을 설명하기도 한한다(백평구, 2015). 결국 Q방법론의 핵심에는 연구 참여자가 스스로의 조작을 통한 Q-sorting을 거쳐, 그것을 객관적인 구조물(operant framework)에 투영함으로써, 설명과 이해의 구분을 유연화를 시도한다(김순은, 2010; 김홍규, 2008; Brown, 1980).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험자는 자신의 세계관을 드러내고, 스스로의 언어를 토대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자결적인(operant)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Brown, 1972). Q 방법론의 핵심적인 특성은 기존의 R 방법론과 같이 가설 검증에 주된 의의가

있다가 보다, 가설을 생성하고 발견하는 가설 추론적 기능이 부각된다. 이처럼 Q 방법은 가설 연역적 방법으로 설계된 R 방법론과 달리, 주어진 주제에 있어 개인들의 인식이 어떻게 구조화 되어있는지를 우선적으로 발견하고, 가설 연역적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참가설(genuine hypothesis)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그 특성이 드러난다(김홍규, 2008).

마을을 주제로 하여 Q 방법을 적용시킨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Duenckmann(2010)은 Q 연구를 통해 함부르크 지역의 마을 개발(village development)과 관련된 주민들의 인식 유형화를 시도하였으며, 국내 연구의 경우 김두환 외(2013)가 살고 싶은 마을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아울러 김근호 외(2012)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민 참여에 관한 주관적 인식 유형을 도출하였다. 이처럼 Q 방법은 양적, 질적 접근을 결합한 장점을 토대로 사회과학 전반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국제주관성연구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cientific Study of Subjectivity)를 통해 전 세계 500여명 이상의 학자들이 꾸준히 방법론의 대중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한국주관성연구학회를 중심으로 연구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김순은, 2010). Q방법론의 절차적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III-1〉 Q 방법론의 절차

절차	내용적 구성
Q표본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행연구, 관련 보고서, 신문기사, 대중매체 등을 토대로 Q진술문 작성</li> <li>- 개인의 주관적 생각을 명확히 드러내는 형태로 진술문이 구성</li> <li>- 분석틀에 입각한 이론이 반영되고 응답자의 이해를 위해 직관적인 문장으로 구성</li> <li>- 진술문의 수는 40~60개가 적당함</li> </ul>
P표본의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인식 유형을 반영할 수 있는 P샘플 선정</li> <li>- 통상 30~50명의 표본이 적합함</li> </ul>
Q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Q분류(sorting) 작업은 연구대상자의 자작적 주관성을 측정하는 것</li> <li>- 보통 강제배분방식(forced distribution)에 입각하여 정규분포의 형태로 분류틀을 제시함.</li> </ul>
Q자료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을 활용한 응답값 분석</li> <li>- 분류된 요인에 따라 유형 분류 및 특성 분석</li> </ul>

## 2. 연구 설계

### 1) Q모집단 구축 및 진술문 설계

본 연구는 Q 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표본인 진술문을 채택하기로 한다. 따라서 Q 모집단은, ‘지속 가능한 자치적 공동체로서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획이 지녀야 할 조건, 구성 요소, 특성, 성격, 가치, 기능 등에 관한 모든 자아 참조적(self-referent) 진술문’으로 정의한다. 진술문의 수집 방법은 연구 주제와 관련한 기존 자료들을 통해 진술문을 추출하는 기성적 표본 방법(ready-made sample)과 연구와 관련된 전문가, 행정가 및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접 및 지필을 통해 직접 진술문을 수집하는 자연적 표본 방법(naturalistic sample)으로 대별된다(Mckeown & Thomas, 1988; 강준모, 2012에서 재인용). 본 연구는 두 가지 수집 방법을 모두 채택하며, 기성

추출의 경우 국내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선행 연구, 학술 보고서, 기사, 대중매체 등을 통해 예비 진술문 및 키워드를 수집하고, 서울시 고유의 마을공동체 특수성을 감안하여, 서울시정에서 발행되는 마을 관련 공지사항, 사업 및 용역 보고서 등을 참조하였다. 아울러 공동자원론을 다룬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모집단을 구축하였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 마을공동체 연구자,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자치구 마을 담당관 등과 같은 마을 행정관과의 면담, E-mail 문답, 아울러 현장에서 활동하는 마을 활동가와의 방문 면담<sup>27</sup> 등을 통해 Q모집단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Q모집단은 연구 목적에 따라 비구조적(unstructured) 표집과 구조적(structured) 표집이 이루어지는데, 비구조적 표집의 경우 새로운 사실 및 유형 탐색을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며, 구조적 표집의 경우 특정 이론을 검증하거나 특정한 이론적 시각을 견지하여 진술문을 확보한다는 특징을 지닌다(김홍규, 2008). 본 연구의 경우 양자 모두를 활용한다. 우선 구조적 표집을 위해, Q모집단으로부터 오스트롬의 이론적 분류에 입각한 진술문을 확보하였고, 8가지 제도 설계 원리 당 각 15개 내외의 진술문을 추출하여 총 110 여개의 진술문을 1차적으로 작성하였다. 그 후, 오스트롬의 분석틀과 마을공동체간 호환성을 확보하기위해 공동자원 전문 연구자, 마을공동체 전문

---

<sup>27</sup> 서울시 마을공동체 연구를 위해 본 연구자는 서울연구원 산하의 마을공동체 연구자, 중간지원조직 소속의 마을 연구자,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소속의 마을 연구자 등과의 사전 면담을 통한 진술문의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현장 마을 활동가의 경우, 주로 2013 년, 2015 년 각각 서울시에서 발행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백서」, 「서울시 마을기업, 1056 일의 기록」 등에서 제공하는 기관 정보를 참고하여 2016 년 9 월 ~ 2017 년 1 월에 이르기까지 약 20 곳 이상의 마을 사업 현장을 방문하였다. Q 모집단 수집을 위해 연구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를 제시하고, 마을공동체 현장에서의 개념 적실성, 진술문의 용어나 화법의 타당성 등을 점검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활용될 공동자원론과 관련된 진술문의 타당도를 검증받기위해, 국내 오스트롬 이론 전공자, 공동자원 연구자 등과 E-mail 교류를 통한 피드백이 이루어졌다.

연구자에 각각에게 개별적으로 진술문을 검토 받고, 중복 진술문의 제거, 공통 진술문의 취합 등의 과정을 거쳐 8~10개의 범위에서 2차적인 진술문 선정 과정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연구팀을 대상으로 사전 검사(pre-test) 후 8개 제도 설계 원리 당 각 3개의 진술문을 최종 선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론적 자원 파트에서 제시한 마을공동체의 기능적 영역에 입각하여 진술문을 추출하였다. 특히 서울시 마을공동체의 기능 및 분야별 사업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 비구조적 표집 중 표본의 편향 가능성을 제어할 수 있는 주제별 체계적 표집법을 채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마을공동체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총 108가지의 진술문을 수집하고, 그 마을의 기능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 마을공동체의 기능을 크게 경제적 측면(42개), 정치-사회적 측면(20개), 복지적 측면(29개), 환경 및 문화적 측면(17개)으로 분류됐다. 그 후, 중복되는 진술문을 제거하고, 네 가지 기능 영역별로 각 4개의 최종 진술문을 확보하였으며, 추출 과정은 중복 진술문의 제거, 유사 진술문의 취합, 마을 활동가와의 면담을 토대로 최종 진술문이 선정되었다. 이와 같은 마을공동체 기능의 임의적 분류는 현존하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의 형태가 다양한 기능을 토대로 분포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선행 연구와 면담 등을 거쳐 큰 틀에서 볼 때 위의 네 가지 핵심적인 기능이 가장 보편적인 유형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와 같이 공동자원 제도설계원리 및 마을공동체의 기능을 활용한 인식 유형의 도출은 장차 마을공동체의 내생적 발전 전략에 있어 어떠한 공동자원 확보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정부 차원의 마을공동체 지원 시

마을공동체의 어떠한 기능을 중심으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질지 등과 같은 기초적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유용할 것이라 판단된다. 이처럼 최종 선정된 40가지의 진술문은 사전 점검을 통해 신뢰도(reliability) 수준을  $r=0.82$ 로 확보하였다<sup>28</sup>. 두 영역을 종합한 진술문의 이론적 분류틀 및 최종 선정된 40개의 진술문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III-2〉 진술문 선정을 위한 이론적 준거틀

진술문 분류	진술문 하위 분류
Ostrom의 공동자원 설계 원리	경계의 문제
	사용 및 제공 규칙과 현지 조건의 부합성
	집합적 선택 장치
	감시 활동
	점증적 제재 조치
	갈등 해결 장치
	최소한의 자치 조직권 보장
마을공동체의 영역별 기능	중층적 사업 단위
	경제적 측면
	정치-사회적 측면
	복지적 측면
	생태 및 문화적 측면

<sup>28</sup> Q 표본의 신뢰도 검사(reliability)는 통상 2-6 명 정도에게 시간차를 두고 Q 분류를 2 번 실시한다. 이때 첫번째 분류는 Q-sort, 두번째 분류는 Re-sort 라 칭하며, 두 개의 분류 결과에 대해 상관관계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한 후, 평균값을 계산한다. 통상적으로  $r=0.5$  이하이면 Q 진술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수정을 요하며, 0.7 이상이 된다면 신뢰도가 충분히 높은 도구라 볼 수 있다(김홍규, 2008). 본 연구의 경우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산하의 마을연구팀 4 인을 대상으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표 III-3〉 Q 표본

진술문 영역	번호	진술문
경계의 문제	1	나는 마을공동체가 멤버십 제도를 통해 구성원 위주의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	나는 한 마을공동체의 내부 자원(정보, 자금, 시설, 인력 등)이 다른 마을의 자원과 자유롭게 공유되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3	나는 한 마을공동체 내부 자원이 마을 거주자나 활동가에게 우선적으로 제공 및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사용, 제공 규칙과 현지 조건의 부합 성	4	나는 한 마을공동체 내부에서 만들어진 공동자원(출자금, 공간, 시설, 인력 자원 등)을 활용하는데 있어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	나는 마을 공동자원의 중요성은 알지만, 그렇다고 마을 자원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추출되고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6	나는 마을공동체 내부적으로 만들어진 공동자원(출자금, 지원금, 공간, 인력 등)을 활용하는데 있어 부족함이나 고갈의 여지가 보이면 사용이나 공급이 잠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합적 선택 장치	7	나는 마을 구성원들의 요구가 집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마을 제도나 규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8	나는 마을과 관련된 중요한 의제 결정과정에 마을 구성원이 반드시 참여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9	나는 마을공동체 내부의 규칙이나 제도가 서울시나 외부 전문 기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감시 활동	10	나는 마을 공동 자원이 공정하게 사용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적인 자원의 모니터링(감시)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1	나는 마을 내부의 모니터링 제도가 마을 구성원간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2	나는 마을이 내부적인 모니터링 보다, 서울시나 중간지원조직과 같은 외부 기관의 모니터링을 받는 것이 더 공정하고 전문적이라고 생각한다.
점증적 제재 조치	13	나는 마을공동체 내부 질서를 훼손하거나 마을 공동자원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구성원에게 페널티가 어느 정도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14	나는 마을공동체 결속을 위해 내부에서 발생하는 위반 행위를 제재하는 규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5	나는 마을 내부에서 해를 끼치는 마을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별다른 제재 없이 포용하고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갈등 해결 장치	16	나는 마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내부적인 협의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7	나는 마을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오로지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8	나는 마을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서울시 마을 부서나 중간지원조직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더 전문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최소한의 자 치 조직권 보장	19	나는 마을공동체가 자치 능력을 가지기 위해 내부적인 조직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	나는 마을과 외부기관(서울시, 중간지원조직)의 협력이 지나치면, 마을공동체의 자율성이 침해될 것이라 생각한다.

	21	나는 마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마을 관련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층적 사업 단위	22	나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동이 백화점식 사업보다는,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통일된 형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3	나는 서울시내 마을 활동이 서울시 전체로 묶이는 것보다, 지역 내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4	나는 마을공동체 활동이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자치구나 서울시 차원으로 확장되어 통합된 마을 사업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측면	25	나는 마을공동체의 다양한 영역 중 생활협동조합이나 마을 기업과 같은 경제적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6	나는 마을공동체의 대안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지만, 실제로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27	나는 마을 경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자금이나 분담금 출자에 지속적으로 협조할 의향이 있다.
	28	나는 마을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의 단점을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정치-사회적 측면	29	나는 마을공동체를 활용한 주민들의 생활 정치 참여가 오늘날 대의 민주주의 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30	나는 서울시나 외부 마을 기관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은 마을 주민들의 자치 능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31	나는 일면식도 없던 주민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활발하게 한다는 점이 마을공동체 활동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32	나는 계층이나 나이, 정치 성향 등에 선입견 두지 않고, 예를 들어 재산이 많은 기득권층이라도 마을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복지적 측면	33	나는 마을공동체의 핵심적인 기능이 구성원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
	34	나는 마을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육아나 돌봄 등의 복지가, 국가나 시장을 통한 복지 서비스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35	나는 마을공동체가 빈곤층, 장애인, 아동 등과 같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유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36	나는 마을공동체 내부의 자발적인 복지가 복지국가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생태-문화적 측면	37	나는 마을공동체의 핵심적인 활동이 지역 환경과 먹거리를 보호하고 생태적인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38	나는 마을공동체가 성장이나 개발이 최고라는 생각을 극복하고, 자급자족 및 녹색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생태공동체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한다.
	39	나는 마을공동체의 핵심적인 역할이 마을 주민들의 문화 생활(마을 축제, 취미 모임)을 풍족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40	나는 마을공동체가 지역 내 전통 문화와 새로운 문화를 결합한 문화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2) P표본의 선정

통상적인 Q연구의 경우 연구 목적과 관련성을 지닌 대상자들이 고루 분포된 상태에서 약 30-50명 정도의 표본이 적당한 것으로 알려진다(김순은, 2010). 본 연구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주요 행위자들이 공동자원론 및 마을공동체 기능 등과 같은 준거에 입각하여 서울시 마을 기획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이에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직, 간접적 경험 혹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선정이 중요하며, 이는 곧 서울시 마을 행위자가 하위 정치적(sub-politics) 맥락에서 지니고 있는 개개인의 동기, 가치, 신념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기 때문이다(김의영, 2014). 이에 본 연구의 P 표본은 통상적인 Q연구의 소표본 원칙(small sample doctrine)을 따라 관련 행위자를 선정한다(김홍규, 2008). 이에 본 연구의 경우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P 표본 선정이 중요한 작업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한 주요 마을 행위자를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표 III-4〉 마을 행위자 구분

주요 마을 행위자 분류	역할
마을공동체 사업 정책 결정권자 마을 연구자 및 마을 업무 공무원	광역 및 기초 중간지원조직 업무 담당, 서울시 마을 담당 공무 및 전문 마을 연구자 그룹
광역 및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종사자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운영 및 주민 지 원 전담
풀뿌리 활동가	자치구 마을 풀뿌리 활동 및 마을 활동 간 직, 간접적 연계 사업 추진

청년 마을 활동가	마을 내 새로운 주체 형성 위한 전략적 대상
마을 사업 지기	서울시 지원 사업에 선정자, 주민 운영위원 그룹 등

위 도표와 같이 마을 행위자는 크게 마을공동체 사업 정책 결정에 관여하거나, 광역 단위의 마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정책적 어젠다를 제시하는 연구자 그룹이 1차적으로 제시된다. 아울러 광역이나 자치구 단위로 설립된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에 종사하는 그룹은 사업 지원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층위로 보자면 2차적 집단에 해당한다. 그 후, 지역 사회 현장 내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실시하는 풀뿌리 활동가, 청년 마을 활동가 등의 층위가 있으며, 주민 층위에서 마을 운영에 개입하는 마을 사업 지기 등으로 나뉘어 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위 층위의 마을 업무 담당 공무원, 마을 연구자 등을 제외한 자치구 중간지원 종사자, 풀뿌리 활동가, 주민 사업 지기 등을 ‘주요 마을 활동가’로 명명하고, 본 연구의 참여 대상으로 삼는다. 여기서 마을 활동가는 주민제안사업을 통해 마을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한 신진 주민 인력에서부터, 자치구 내 지역 활동을 담당하고, 각종 연계 사업을 추진하는 풀뿌리 활동가에 이르기까지, 마을 현장 업무의 대다수를 담당한다.



〈그림 III-1〉 마을활동가 층위 구분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제시하는 마을공동체 활동가 교육을 살펴보면, 마을활동가들은 크게 1) 주민마을사업자, 2) 마을 상담가, 3) 마을 컨설턴트, 4) 마을 강사, 5) 자치구 마을생태계지원가 등으로 나뉘어진다. 이러한 층위는 마을공동체 활동가로서의 역할, 실무 경력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특히, 마을 강사의 경우 마을 활동 경험 2년 이상인 자, 공동체 리더 교육의 경우 주민 모임을 시작한지 3년 이내의 활동가, 마을 활동가 심화 트레이닝 과정의 경우 지원 여건으로 4년차 이상의 마을 활동가를 제시한다. 이처럼 통상의 마을활동가는 상술한 바와 같이 마을사업자, 마을상담가, 마을컨설턴트 및 마을 강사로 나뉘어진다.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층위적으로 볼 때, 마을 상담가 이상의 마을 활동가를 표본으로 선정 한다. 이는 곧 마을 관련 활동을 현장에서 3년 이상 해왔던 활동가를 대상으로 함을 의미한다. 이들의 경우 주로 자치구별로 ‘마을넷’이라는 주민네트워크조직을 결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행정적으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산하에서 조직된다. 아울러 활동 지역이


서울시 25개구 내 골고루 분포 되어있고, 활동 영역 또한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P표본 목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III-5〉 P 표본

P표본	성별	연령	학력	활동기간	활동지역	활동영역
활동가 1	여	53세	대졸	10년	강동구	마을 생태·환경, 주민 조직
활동가 2	여	43세	대졸	8년	동작구	마을 도서관, 육아, 공유사업
활동가 3	남	57세	대졸	21년	관악구	풀뿌리 조직, 주민 모임 조직
활동가 4	남	42세	대학원재학	5년	강서구	공유 공간, 지역 네트워크
활동가 5	여	51세	고졸	20년	양천구	중간 지원 조직, 생협
활동가 6	남	50세	고졸	20년	구로구	풀뿌리 조직, 생협, 마을 목공
활동가 7	여	50세	대졸	10년	중구	주민 조직, 마을 컨설팅
활동가 8	남	42세	대졸	6년	영등포구	마을 문화·예술
활동가 9	남	52세	대졸	3년	종로구	중간 지원 조직
활동가 10	남	53세	대학중퇴	15년	마포구	지역 네트워킹, 주민 조직
활동가 11	여	34세	대졸	5년	서대문구	마을 미디어, 아카이브
활동가 12	남	54세	대졸	15년	마포구	주민 조직, 네트워크
활동가 13	여	50세	대학원졸	5년	중랑구	여성, 교육, 돌봄, 협동조합
활동가 14	남	40세	대졸	15년	광진구	마을 도서관, 찾동
활동가 15	남	51세	대졸	13년	송파구	청소년 공동체, 문화·예술
활동가 16	여	42세	대학원졸	15년	서초구	주민 조직, 교육, 문화·예술
활동가 17	남	57세	대졸	6년	강남구	주민 조직, 문화
활동가 18	남	45세	대졸	5년	성동구	주민 조직, 중간 지원
활동가 19	여	43세	대졸	4년	은평구	중간 지원 조직
활동가 20	여	50세	대졸	5년	은평구	활동가 육성, 마을 복지
활동가 21	여	49세	대졸	10년	성북구	주민 조직, 찾동
활동가 22	여	46세	대졸	11년	성북구	주민 교육
활동가 23	남	53세	대학원졸	7년	노원구	도시재생
활동가 24	여	47세	대졸	8년	동대문구	중간 지원, 공동 육아
활동가 25	여	40세	대학원졸	6년	동대문구	여성, 청소년, 주민 조직
활동가 26	여	46세	대학원재학	7년	도봉구	중간 지원, 주민 조직
활동가 27	여	42세	대졸	10년	강북구	주민 자치
활동가 28	남	31세	대졸	4년	용산구	사회적 경제, 마을 축제
활동가 29	남	36세	대학원재학	4년	관악구	대안 모임, 공유 지식
활동가 30	남	51세	대학원졸	3년	동대문구	사회적 경제, 교육

## IV. 연구결과

연구 설계 후 2017년 4월 10일부터 5월 4일까지 총 30명의 마을활동가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연구 진행은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로 하여금 총 40가지의 진술문 카드를 읽고, 아래 63x44.5cm 크기로 제작된 정규 분포 Q카드(-4에서 +4까지 분포)에 강제 배분(forced distribution)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진술문 분류 과정은 정도 측정 방식으로(ipsative measure), 통상적인 리커트 척도(likert Scale)와 같은 정량 척도와 달리, 사람 간 특성이 아닌 개인 내의 선호도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김순은, 2010). 본 장에서는 연구 설계에 입각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주요 활동가의 인식 유형을 도출하고, 개별 인식 유형의 특성을 기술하는 등 연구 결과에 대한 함의를 제시할 것이다.

-4	-3	-2	-1	0	+1	+2	+3	+4
반대								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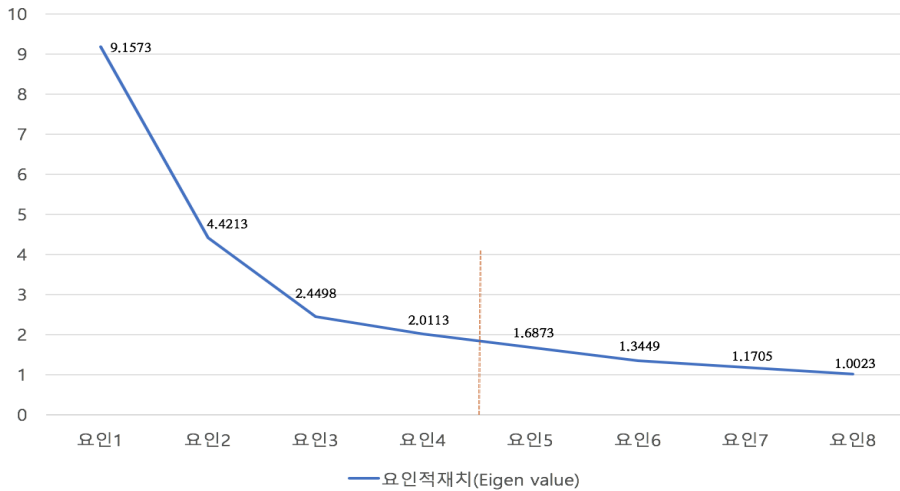
〈그림 IV-1〉 Q 카드

## 1. 유형의 추출

본 연구에서는 주성분 요인 분석(principle component factor analysis) 기법을 활용하고, 분석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요인 회전 방식은 변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배리맥스(varimax) 방식을 채택하였다. 통상적인 Q 연구에서 인식 유형의 수는 요인 적재치 값(Eigen value) 1 이상인 요인을 중심으로 유형을 추출한다(김홍규, 2008; McKeown & Thomas, 1988)<sup>29</sup>. 본 연구의 경우, 아이겐 값이 1 이상인 요인이 총 8개로 추출되었다. 그러나 추출 요인의 수가 많아질수록 줄어드는 표본의 수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종 요인의 수를 4개로 추출하기로 한다. 요인 개수를 선정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첫째, 개별 인식 유형의 아이겐 값을 시각적으로 도식화한 스크리 도표를 작성하여, 기울기가 완만하게 변하는 지점을 고려하였다. 둘째, 요인의 수를 줄이면서 실시한 변량 극대화(Varimax) 결과를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수의 표본을 확보하는 동시에, 전체 인식 유형의 누적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도록 설계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의 과정을 통해 추출된 요인의 수가 사후 면담(post-interview)의 내용과 부합하는지 살펴보았다.

---

<sup>29</sup> 이는 '카이저(Kaiser)의 규칙'에 의거하는데, 요인 분석의 경우 요인 적재치가 상관계수 행렬의 대각 원소 값인 '1'보다 큰 값을 가질 경우, 기존의 변수 보다 설명력이 높다고 고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상현(2006)에 따르면, 유형 추출은 요인적재치의 값 뿐만 아니라, 사후 면담과 같은 질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자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진상현, 2006; 강준모, 2012; 이승한, 2014에서 재인용).



<그림 IV-2> 요인적재치 스크리 도표

이처럼 네 가지 유형으로 추출 할 경우, 총 설명력은 60%이며, 개별 유형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유형 A는 20%, 유형 B 17%, 유형 C 14%, 유형 D는 9%로 제시된다. 이는 곧 4 가지 유형이 서울시 마을공동체 주요 활동가 인식 유형에 관해 60%만큼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sup>30</sup>. 그러나 본 연구의 유형화 결과가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동가 모집단 전원의 인식 유형을 대변할 만큼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본 연구에 참여한 P 표본 응답자에 한해서 설명력을 가진다는 점을 주지해야한다. 각 유형 별 P 표본 수는 유형 A가 9명, 유형 B 8명, 유형 C 7명, 유형 D가 3명이며, 어떠한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응답자가 3명이었다. Q 방법론에서 한 유형에 단 1명의 응답자가 있더라도 유의미한 결과로 보기에 유형 별 P표본의 수는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다 (김홍규, 2008).

<sup>30</sup> 일반적으로 설명력이 40% 이상이면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판단하며, 설명력이 50% 이상이면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갖춘다고 볼 수 있다(김순은, 2010; 김홍규, 2008; McKeown & Thomas, 1988).

<표 IV-1> 개별 인식 유형의 요인 적재치 및 설명력

구분	유형 A	유형 B	유형 C	유형 D
요인적재치(E.V.)	9.1573	4.4213	2.4498	2.0113
설명력(%)	20%	17%	14%	9%
누적 설명력(%)	20%	37%	51%	60%
P표본 수	9	8	7	3

각각의 도출된 인식 유형은 본 연구에 참여한 30명의 P표본이 이론적 관점에 입각하여 인식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획에 대한 의견, 태도, 가치관 등에 의거하여 분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형 별 P 표본의 요인적재치는 아래 <표 4-2>와 같다. 이때 변량 극대화 작업이 완료된 개별 P표본은 Flagging 작업을 거쳐 아래와 같이 음영 표시가 되었다. 요인 분류 결과 총 30명의 활동가 중 27명이 4개의 요인에 유형화 되었으며, 어떠한 인식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3명의 활동가(P표본 2, 23, 27)는 한 가지 이상의 인식 유형에 높은 적재치를 보이고 있어, 그룹핑에서 제외되었다.

<표 IV-2> P표본의 개별 유형별 요인적재치

P 표본	제 1유형	제 2유형	제 3유형	제 4유형
활동가 1	-0.0285	0.1686	-0.2231	0.7728
활동가 2	-0.3711	0.3431	0.3075	-0.5160
활동가 3	0.6184	0.3274	-0.4224	-0.0820
활동가 4	0.0646	0.3191	-0.4630	0.0175
활동가 5	-0.3722	-0.0322	0.8046	-0.1495
활동가 6	0.2766	0.7016	-0.1320	-0.0664
활동가 7	-0.3193	-0.2730	0.6787	-0.1817
활동가 8	0.0943	0.6408	-0.2137	-0.0348
활동가 9	-0.1294	-0.1537	0.6986	-0.1787
활동가 10	0.7027	0.3264	-0.3251	-0.0520
활동가 11	-0.0100	0.5961	0.1337	0.0366
활동가 12	0.7384	0.4143	-0.2951	0.0862
활동가 13	-0.0341	0.6638	-0.0793	0.5023
활동가 14	-0.6324	-0.1602	0.2098	-0.0968



활동가 15	-0.8431	0.1723	-0.0191	-0.0658
활동가 16	0.1453	0.5538	-0.0985	0.3778
활동가 17	-0.2611	0.5609	0.1235	0.1954
활동가 18	-0.7643	0.2309	0.1933	0.0641
활동가 19	0.4343	0.7666	0.1330	0.0940
활동가 20	0.6290	0.3248	0.1089	0.3156
활동가 21	0.0231	0.7699	-0.1749	0.1246
활동가 22	-0.4370	0.2107	0.5258	-0.0480
활동가 23	0.5121	0.5671	-0.1090	0.2312
활동가 24	0.0226	0.0516	0.6342	0.2949
활동가 25	0.2411	0.1267	-0.0903	0.5789
활동가 26	-0.0036	0.2366	0.4665	0.6202
활동가 27	0.4243	0.3694	0.3907	-0.1842
활동가 28	0.7422	0.2207	-0.4478	0.1466
활동가 29	0.6841	0.0400	-0.1384	0.1722
활동가 30	-0.3545	0.1608	0.6276	-0.2570

아울러 개별 진술문에 대한 Z-score를 각 인식 유형 별로 -4점에서 +4점까지 전환하여 나타낸 결과는 아래 <표 4-3>과 같다.

<표 IV-3> 각 진술문에 대한 인식 유형별 점수

N	진술문	유형			
		A	B	C	D
1	나는 마을공동체가 멤버십 제도를 통해 구성원 위주의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4	-2	-2	-4
2	나는 한 마을공동체의 내부 자원(정보, 자금, 시설, 인력 등)이 다른 마을의 자원과 자유롭게 공유되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4	1	1	0
3	나는 한 마을공동체 내부 자원이 마을 거주자나 활동가에게 우선적으로 제공 및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4	-1	-3	1
4	나는 한 마을공동체 내부에서 만들어진 공동자원(출자금, 공간, 시설, 인력 자원 등)을 활용하는데 있어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	2	2	2
5	나는 마을 공동자원의 중요성은 알지만, 그렇다고 마을 자원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추출되고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3	0	0	=2
6	나는 마을공동체 내부적으로 만들어진 공동자원(출자금, 지원금, 공간, 인력 등)을 활용하는데 있어 부족함이나 고갈의 여지가 보이면 사용이나 공급이 잠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0	-1	-2
7	나는 마을 구성원들의 요구가 집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마을 제도나 규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0	2	1	0
8	나는 마을과 관련된 중요한 의제 결정과정에 마을 구성원이 반드시 참여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	-3	1	-3
9	나는 마을공동체 내부의 규칙이나 제도가 서울시나 외부 전문 기관에 의해	-4	-4	4	-1

	만들어지는 것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10	나는 마을 공동 자원이 공정하게 사용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적인 차원의 모니터링(감시)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3	3	0
11	나는 마을 내부의 모니터링 제도가 마을 구성원간의 불신을 조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1	-1	1
12	나는 마을이 내부적인 모니터링 보다, 서울시나 중간지원조직과 같은 외부 기관의 모니터링을 받는 것이 더 공정하고 전문적이라고 생각한다.	-4	-3	4	-1
13	나는 마을공동체 내부 질서를 훼손하거나 마을 공동자원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구성원에게 페널티가 어느 정도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3	1	2	-1
14	나는 마을공동체 결속을 위해 내부에서 발생하는 위반 행위를 제재하는 규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0	2	-3
15	나는 마을 내부에서 해를 끼치는 마을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별다른 제재 없이 포용하고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3	-3	0	-4
16	나는 마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내부적인 협의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4	-3	0
17	나는 마을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오로지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1	-4	0
18	나는 마을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서울시 마을 부서나 중간지원조직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더 전문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3	-4	4	-1
19	나는 마을공동체가 자치 능력을 가지기 위해 내부적인 조직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4	-2	4
20	나는 마을과 외부기관(서울시,중간지원조직)의 협력이 지나치면, 마을공동체의 자율성이 침해될 것이라 생각한다.	4	1	-4	3
21	나는 마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마을 관련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3	3	2
22	나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동이 백화점식 사업보다는,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통일된 형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1	-1
23	나는 서울시내 마을 활동이 서울시 전체로 묶이는 것보다, 지역 내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1	2	-3	-2
24	나는 마을공동체 활동이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자치구나 서울시 차원으로 확장되어 통합된 마을 사업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3	3	-3
25	나는 마을공동체의 다양한 영역 중 생활협동조합이나 마을 기업과 같은 경제적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0	-1	2	2
26	나는 마을공동체의 대안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지만, 실제로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1	-1	1	-1
27	나는 마을 경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자금이나 분담금 출자에 지속적으로 협조할 의향이 있다.	0	3	-1	3
28	나는 마을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의 단점을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2	-2	-1	-3
29	나는 마을공동체를 활용한 주민들의 생활 정치 참여가 오늘날 대의 민주주의 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3	0	-3	1

30	나는 서울시나 외부 마을 기관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은 마을 주민들의 자치 능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1	-4	1
31	나는 일면식도 없던 주민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활발하게 한다는 점이 마을공동체 활동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1	4	3	0
32	나는 계층이나 나이, 정치 성향 등에 선입견 두지 않고, 예를 들어 재산이 많은 기득권층이라도 마을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2	3	0	1
33	나는 마을공동체의 핵심적인 기능이 구성원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	-1	-2	0	3
34	나는 마을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 육아나 돌봄 등의 복지가, 국가나 시장을 통한 복지 서비스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0	0	0	3
35	나는 마을공동체가 빈곤층, 장애인, 아동 등과 같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유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	-4	-2	2
36	나는 마을공동체 내부의 자발적인 복지가 복지국가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0	0	1	-4
37	나는 마을공동체의 핵심적인 활동이 지역 환경과 먹거리를 보호하고 생태적인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1	1	-1	4
38	나는 마을공동체가 성장이나 개발이 최고라는 생각을 극복하고, 자급자족 및 녹색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생태공동체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한다.	1	1	-1	4
39	나는 마을공동체의 핵심적인 역할이 마을 주민들의 문화 생활(마을 축제, 취미 모임)을 풍족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0	-1	-2	-2
40	나는 마을공동체가 지역 내 전통 문화와 새로운 문화를 결합한 문화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0	1

〈표 4-4〉는 각 유형 간 상관 관계 계수(r)를 나타내며, 수치가 높을 수록 유형 간 상관이 높고, 낮을수록 서로 독립적인 관계임을 의미한다. 유형 간 상관 관계는 -0.5573부터 0.3610까지의 스펙트럼에 분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추출된 요인 간 독립성은 높은 편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유형 C는 모든 여타 유형과 음의 상관 관계 값을 가지면서, 개별 유형 간 독립성은 물론 상호 대립적인 태도가 확인된다. 그러나 R방법론과 달리 Q방법에서 요인 간 상관 계수는 중요 정보로 고려되지 않는다(김홍규, 2008),

<표 IV-4> 요인 간 상관관계

구분	제 1유형	제 2유형	제 3유형	제 4유형
제 1 유형	1.0000	-	-	-
제 2 유형	0.3232	1.0000	-	-
제 3 유형	-0.5573	-0.1947	1.0000	-
제 4 유형	0.1550	0.3610	-0.1707	1.0000

위와 같이 인식 유형의 추출이 완료되면, 도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인식 유형의 특성을 해석한다. 김홍규(2008)에 따르면, Q 요인의 해석은 진술문 배치 과정에서 감추어진 마음을 읽기 위해 모든 정보와 직관이 동원되어야 하며, 특히 Q 요인의 분석 과정은 가설 생성적이기에, 표본의 분포에 대한 해답이나 설명을 찾아가는 과정이다(김홍규, 2008). 이에 Q 분석은 통상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첫째, 전 유형을 대상으로 합의적, 논쟁적 진술문을 파악하고, 그 특성을 기술한다. 둘째, 각 인식 유형이 가장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의 분포를 통해 유형의 특성을 분석, 기술한다. 셋째, 각 유형이 여타 다른 유형과 통계적으로 구별되는 진술문을 해석하여 유형의 특성을 부각한다. 이처럼 통상적인 Q해석은 상술한 바와 같지만 실제 해석은 연구자로 하여금 세세하고 창의적인 접근을 요한다. 가령 각각의 진술문 항목 점수, 유형이 나누어지는 요인적재치와 같은 계량적인 정보도 중요하지만, 유형 간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이론이 반드시 동원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사후 면담(post-interview)이 중요하다. 사후 면담은 Q 소트의 항목 중 양극(Ex. -4 or +4)에 배치된 진술문에 대해 P표본과의 면담을 거쳐 왜 해당 진술문을 양극에 배치했는가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진다(김홍규, 2008). 이 과정에서 Q 데이터는 연구자가 설계한 이론적 관점에 입각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 2. 인식 유형의 특성

### 1) 합의적 진술문 VS 논쟁적 진술문

통계 처리된 Q 데이터는 모든 유형이 합의적인 태도를 보인 진술문과 논쟁적인 진술문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이러한 과정은 모든 유형 간 공감대가 형성되는 진술문을 제시하여 P표본의 공통된 견해를 파악함과 동시에, 모든 요인을 통틀어 항목 간 상이한 태도를 보여주는 논쟁적 진술문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자료에서 도출된 합의적 진술문과 논쟁적 진술문은 Q표본의 12 가지 영역 중 7 영역에서 나타났으며, 이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IV-5> 합의적 진술문과 논쟁적 진술문

구분	합의적 진술문	논쟁적 진술문
경계		1. 나는 마을공동체가 멤버십 제도를 통해 구성원 위주의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4, -2, -2, -4)
조건 부합성	4. 나는 한 마을공동체 내부에서 만들어진 공동자원(출자금, 공간, 시설, 인력자원 등)을 활용하는데 있어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 2, 2, 2)	
집합선택		9. 나는 마을공동체 내부의 규칙이나 제도가 서울시나 외부 전문 기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4, -4, 4, -1)
감시		12. 나는 마을이 내부적인 모니터링 보다, 서울시나 중간지원조직과 같은 외부기관의 모니터링을 받는 것이 더 공정하고 전문적이라고 생각한다 (-4, -3, 4, -1)
자치 조직권		18. 나는 마을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서울시 마을 부서나 중간지원조직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더 전문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3, -4, 4, -1)

20. 나는 마을과 외부기관(서울시, 중간 지원조직)의 협력이 지나치면, 마을공동체의 자율성이 침해될 것이라 생각한다  
(4, 1, -4, 3)

경제	28. 나는 마을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의 단점을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1, -1, 1, -1)
생태, 문화	39. 나는 마을공동체의 핵심적인 역할이 마을 주민들의 문화 생활(마을 축제, 취미 모임)을 풍족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0, -1, -2, -2)

\*0는 개별 유형별 진술문 점수

우선 합의적 진술문을 살펴본 결과, 모든 인식 유형에서 4번 진술문(마을공동체 내부 공동자원을 활용하는데 있어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에 +2 요인가를 보이며 자원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28번 진술문(마을 기반 사회적 경제가 단점 극복하는 것 불가능)에 대해서는 모든 유형의 요인가가  $\pm 1$  근처에 수렴되면서 마을의 경제적 기능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39번 진술문(마을공동체의 핵심적인 역할이 주민들의 문화 생활을 풍족하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 1 유형은 중립, 나머지 유형은 모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논쟁적 진술문의 경우 1번 진술문(마을공동체가 멤버십 제도를 통해 구성원 위주의 운영), 9번 진술문(마을공동체 내부의 규칙이나 제도가 서울시나 외부 전문 기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더 공정), 12번 진술문(마을이 내부적인 모니터링 보다, 서울시나 중간지원조직과 같은 외부 기관의 모니터링을 받는 것이 더 공정하고 전문적), 18번 진술문(마을 내에서 발생 갈등을 서울시 마을 부서나 중간지원조직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더 전문적이고 공정), 20번

진술문(마을과 외부기관의 협력이 지나치면, 마을공동체의 자율성이 침해될 것)을 둘러싸고 인식 유형 별로 상이한 태도를 보였다.

종합해보면, 모든 유형의 마을 활동가들은 마을공동체와 공동 자원의 운용에 있어 지속가능성의 여부를 공통된 중요 가치로 인식하였다. 또한 마을공동체의 기능적 측면에서 마을 경제 항목에 대체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마을 기능 중 문화적 욕구 충족은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점이 전 유형의 공통 의견이라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논쟁적 진술문이 합의 진술문 보다 더 많았다는 점은, 마을 활동가 간 마을공동체와 공동자원 운용에 있어 상이한 관점을 보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오스트롬의 8가지 원리 중 경계, 집합적 선택 장치, 감시 제도 및 자치 조직권 보장 측면에서 인식 유형 간 상이한 입장이 확인된다.

## 2) 인식 유형별 분석

상술한 과정을 통해 추출된 개별 유형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획을 둘러싸고 저마다 상이한 태도를 지닌 응답자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인식 유형의 정보는 각 유형에서 가장 긍정적, 부정적으로 반응한 항목들로 구성되며, 표준점수 Z-score가  $\pm 1$ 이상인 진술문을 중심으로 분석한다(김순은, 2010; 김홍규, 2008).

### (1) 유형 A: 자치 결사체 중시형

유형 A에는 총 9명의 마을활동가가 포함되었다.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본

유형은 타 유형에 비해 마을공동체와 공동 자원을 둘러싼 경계에 엄격하고, 공동체의 배타성을 일정 수준 확보해야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아울러 마을 구성원의 자발적 결사를 통한 연대를 중시하고, 마을 내부 자원에 있어서도 자생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형 A 활동가는 오스트롬의 가이드라인에 대부분 동의한다. 즉, 마을공동체를 둘러싼 자원의 경계, 조건 부합성(지속가능성)을 중요시하고, 마을 공동 자원의 존속을 위한 감시와 제제 조치의 필요성을 긍정한다. 그러나 8번째 원리인 중층적 사업 단위에 있어서는 마을 사업의 확장 보다는, 소규모 단위의 마을 경계 설정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동체 운용 과정에 있어 행정 개입을 부정하는 등, 마을의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공동체의 자율적인 정치적 역량을 중요시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종합하여 유형 A 활동가들을 '자치 결사체 중시형'이라 명명한다. 본 유형에서 Z-score가  $\pm 1$ 이상인 진술문을 영역별로 나열하면 아래 <표 4-4>와 같다.

<표 IV-6> 유형 A '자치 결사체 중시형'의 대표 진술문

구분	찬성 진술문	반대 진술문
경계	1. 나는 마을공동체가 멤버십 제도를 통해 구성원 위주의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1.786)  3. 나는 한 마을공동체 내부 자원이 마을 거주자나 활동가에게 우선적으로 제공 및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1.401)	2. 나는 한 마을공동체의 내부 자원(정보, 자금, 시설, 인력 등)이 다른 마을의 자원과 자유롭게 공유되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1.446)
조건 부합성		5. 나는 마을 공동자원의 중요성은 알지만, 그렇다고 마을 자원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추출되고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1.381)
집합선택		9. 나는 마을공동체 내부의 규칙이나 제도가 서울시나 외부 전문 기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더 공정하다고 생



각한다(-1.593)

감시	10. 나는 마을 공동 자원이 공정하게 사용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위해 내부적인 차원의 모니터링(감시)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1.159)	11. 나는 마을 내부의 모니터링 제도가 마을 구성원간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1.085) 12. 나는 마을이 내부적인 모니터링 보다, 서울시나 중간지원조직과 같은 외부기관의 모니터링을 받는 것이 더 공정하고 전문적이라고 생각한다(-1.611)
제재 조치	13. 나는 마을공동체 내부 질서를 훼손하거나 마을 공동자원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구성원에게 페널티가 어느 정도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1.366) 14. 나는 마을공동체 결속을 위해 내부에서 발생하는 위반 행위를 제재하는 규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1.009)	15. 나는 마을 내부에서 해를 끼치는 마을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별다른 제재 없이 포용하고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한다(-1.358)
갈등 해결	17. 나는 마을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오로지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1.110)	18. 나는 마을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서울시 마을 부서나 중간지원조직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더 전문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한다(-1.213)
자치 조직권	19. 나는 마을공동체가 자치 능력을 가지기 위해 내부적인 조직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1.189) 20. 나는 마을과 외부기관(서울시, 중간지원조직)의 협력이 지나치면, 마을공동체의 자율성이 침해될 것이라 생각한다(1.388)	21. 나는 마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마을 관련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1.229)
중층 사업 단위		24. 나는 마을공동체 활동이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자치구나 서울시 차원으로 확장되어 통합된 마을 사업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1.010)
경제		
정치, 사회	29. 나는 마을공동체를 활용한 주민들의 생활 정치 참여가 오늘날 대의 민주주의 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한다(1.287)	
복지		
생태, 문화		

유형 A가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을 살펴보면, 경계 문항에서는 1번 진술문(마을공동체 멤버십을 통한 구성원 운영)과 3번 진술문(마을공동체 내부 자원이 마을 거주자나 활동가에게 우선적으로 제공 및 사용)에 관하여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다. 아울러 감시 영역에 있어 10번 진술문(마을 공동 자원이 공정하게 사용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적인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야)에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재 조치 문항의 경우 13번 진술문(마을공동체 내부 질서를 훼손하거나 마을 공동 자원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구성원에게 페널티가 가해져야)과 14번 진술문(마을공동체 결속을 위해 내부에서 발생하는 위반 행위를 제재하는 규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 모두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갈등 해결 문항에서는 17번 진술문(마을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오로지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해야), 자치 조직권 문항에서는 19번 진술문(마을공동체가 자치 능력을 가지기 위해 내부적인 조직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20번 진술문(마을과 외부기관의 협력이 지나치면, 마을공동체의 자율성이 침해될 것)에 동의하면서 내, 외부 행위 주체 설정 문제를 두고 일관된 의견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마을의 정치-사회 기능 관련 문항에서는 29번 진술문(마을공동체를 활용한 주민들의 생활 정치 참여가 오늘날 대의 민주주의 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이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본 유형에서 가장 반대한 진술문으로는 경계 문항에서 2번 진술문(마을공동체 내부 자원이 다른 마을의 자원과 자유롭게 공유되어도 큰 문제가 없다)이 제시되면서 마을 공동 자원의 배타성 확보에 동의하였으며,

조건 부합성 문항에서 5번 진술문(마을 공동자원의 중요성은 알지만, 그렇다고 마을 자원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추출되고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이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으로 제시되었다. 이와 더불어, 집합 선택 문항에서 9번 진술문(마을공동체 내부의 규칙이나 제도가 서울시나 외부 전문 기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더 공정)이 비동의 진술문으로 제시되면서 상술한 주제 설정 과정에 있어 외부 보다 내부를 더 강조하는 입장을 재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감시 문항에서는 11번 진술문(마을 내부의 모니터링 제도가 마을 구성원 간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과 12번 진술문(마을이 내부적인 모니터링 보다, 서울시나 중간지원조직과 같은 외부기관의 모니터링을 받는 것이 더 공정하고 전문적)이 반대 진술문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제재 조치 문항에서는 15번 진술문(마을 내부에서 해를 끼치는 마을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별다른 제재 없이 포용하고 함께 가야한다), ‘갈등 해결’ 문항에서는 18번 진술문(마을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서울시 마을 부서나 중간지원조직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더 전문적이고 공정하다), ‘자치 조직권’ 문항에서는 21번 진술문(마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마을 관련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중층 사업 단위’ 문항에서 24번 진술문(마을공동체 활동이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자치구나 서울시 차원으로 확장되어 통합된 마을 사업이 구축되어야 한다)이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으로 제시되면서 마을 사업의 소규모 운용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A의 특징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본 유형과 다른 유형 간 차이를 나타내는 진술문 정보를 살펴보면 아래 <표 4-5>와 같다. 상술한 대표적 찬, 반 진술문에서도 드러나듯, 유형 A는 타 유형에 비해

마을공동체와 공동 자원의 경계에 있어 타 유형에 비해 뚜렷한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유형 A는 정치, 사회 문항에서 29번 진술문(마을 공동체 주민 생활 정치가 대의 민주주의 보다 더 우월)에 동의하면서, 마을공동체를 통해 정치적 효능을 중요시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갈등 해결 문항에 있어서 16번, 17번 진술문 모두 유의미한 점수를 보이면서, 공동체 운용에 있어서 외부 보다 내부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타 유형과 차이를 보이는 대표적인 음의 Z-score를 살펴보면, 진술문 2번이 제시되면서, 마을공동체 내부 자원의 자유로운 교류에 반대하는 유일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마을공동체 법제화에 반대 의사를 표하는 등, 31번, 32번 진술문을 통해 마을공동체와 공동 자원을 두고 동질적인 구성원들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유형 A와 타 유형 간 차이를 나타내는 진술문과 Z-score

진술문	제 1유형		제 2유형		제 3유형		제 4유형	
	부여 점수	Z-score	부여 점수	Z-score	부여 점수	Z-score	부여 점수	Z-score
1	4	1.79*	-2	-0.62	-2	-1.03	-4	-2.06
3	4	1.40*	-1	-0.57	-3	-1.16	1	0.26
29	3	1.29*	0	0.12	-3	-1.14	1	0.26
17	2	1.11*	-1	-0.33	-4	-1.53	0	0.09
16	2	0.93*	4	1.60	-3	-1.27	0	-0.12
6	1	0.58*	0	-0.05	-1	-0.36	-2	-0.85
25	0	0.09	-1	-0.45	2	0.80	2	0.82
31	-1	-0.72*	4	1.61	3	1.32	0	0.14
32	-2	-0.87*	3	1.30	0	-0.13	1	0.28
11	-2	-1.08*	-1	-0.45	-1	-0.29	1	0.41
21	-3	-1.23*	3	1.48	3	1.59	2	0.73
2	-4	-1.45*	1	0.52	1	0.39	0	0.02

\*는  $P<0.01$ , 그 외 모두  $P<0.05$

## (2) 유형 B: 포용적 협의체 중시형

유형 B에는 총 8명의 활동가가 포함되었다. 본 유형은 공동체와 마을 자원의 경계 설정에 있어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입장을 취했다. 또한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지만, 그렇다고 자원과 관련된 규칙 설정의 필요성에는 다소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공동 자원을 둘러싼 내부 구성원 간 모니터링과 제재의 필요성은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B의 특성은 내부 협의체의 필요성을 가장 강조한 유형이다. 이에 마을 의사 결정에 있어서는 마을 구성원의 집합적 선택이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되며, 행정 개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본 유형은 마을공동체의 기능적 영역 중 마을 복지와 경제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무엇보다 사회적 기능 측면에서는 구성원의 다양성 확보와 구성원 간 네트워킹을 강조하는 유형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특성을 종합하여 본 유형의 활동가들을 ‘포용적 협의체 중시형’이라 명명한다. 제 2유형에서 Z-score가  $\pm 1$ 이상인 진술문을 영역별로 나열하면 아래 <표 4-6>과 같다.

<표 IV-8> 유형B '포용적 협의체 중시형'의 영역별 대표 진술문

구분	찬성 진술문	반대 진술문
경계		
조건 부합성	4. 나는 한 마을공동체 내부에서 만들어진 공동자원(출자금, 공간, 시설, 인력자원 등)을 활용하는데 있어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1.148)	8. 나는 마을과 관련된 중요한 의제 결정과정에 마을 구성원이 반드시 참여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1.440)
집합선택		

		9. 나는 마을공동체 내부의 규칙이나 제도가 서울시나 외부 전문 기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한다(-1.653)
감시	10. 나는 마을 공동 자원이 공정하게 사용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적인 차원의 모니터링(감시)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1.199)	12. 나는 마을이 내부적인 모니터링 보다, 서울시나 중간지원조직과 같은 외부기관의 모니터링을 받는 것이 더 공정하고 전문적이라고 생각한다(-1.204)
제재 조치		
갈등 해결	16. 나는 마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내부적인 협의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1.598)	18. 나는 마을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서울시 마을 부서나 중간지원조직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더 전문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한다(-1.679)
자치 조직권	19. 나는 마을공동체가 자치 능력을 가지기 위해 내부적인 조직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1.904)	
	21. 나는 마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마을 관련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1.484)	
중층 사업 단위		24. 나는 마을공동체 활동이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자치구나 서울시 차원으로 확장되어 통합된 마을 사업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1.422)
경제	27. 나는 마을 경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자금이나 분담금 출자에 지속적으로 협조할 의향이 있다(1.359)	
정치, 사회	31. 나는 일면식도 없던 주민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활발하게 한다는 점이 마을공동체 활동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1.607)	
	32. 나는 계층이나 나이, 정치 성향 등에 선입견 두지 않고, 예를 들어 재산이 많은 기득권층이라도 마을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1.297)	
복지		35. 나는 마을공동체가 빈곤층, 장애인, 아동 등과 같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유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1.904)

먼저 유형 B가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으로, 조건 부합성 항목에서 4번 진술문(마을공동체 내부에서 만들어진 공동 자원을 활용하는데 있어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 감시 항목에서 10번 진술문(마을 공동 자원이 공정하게 사용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위해 내부적인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이 제시되며, 마을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갈등 해결 항목에서 16번 진술문(마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내부적인 협의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자치 조직권 항목에서는 19번 진술문(마을공동체가 자치 능력을 가지기 위해 내부적인 조직체를 만들어야 한다) 제시되면서, 내부 협의체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1번 진술문(마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마을 관련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이 찬성 진술문으로 제시되면서, 마을 법제화를 수긍하였다. 한편, 마을공동체의 기능적 영역에서 경제 항목 중 27번 진술문(마을 경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자금이나 분담금 출자에 지속적으로 협조할 의향이 있다)이 동의 진술문으로 제시되었다. 아울러 정치, 사회 항목 중 31번 진술문(일면식도 없던 주민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활발하게 한다는 점이 마을공동체 활동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과 32번 진술문(계층이나 나이, 정치 성향 등에 선입견을 두지 않고, 마을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이 제시되면서,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기능, 구성원의 다양성 확보를 중요시하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형 B가 가장 반대하는 대표적인 진술문으로 집합 선택 항목에서 8번 진술문(마을과 관련된 중요한 의제 결정과정에 마을 구성원이 반드시 참여 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과 9번 진술문(마을공동체 내부의 규칙이나 제도가 서울시나 외부 전문 기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이 제시된다. 또한, 감시 항목에서 12번 진술문(마을이 내부적인 모니터링 보다, 서울시나 중간지원조직과 같은 외부기관의 모니터링을 받는 것이 더 공정하고 전문적), 갈등 해결 항목에서 18번 진술문(마을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서울시 마을 부서나 중간지원조직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더 전문적이고 공정)이 반대 진술문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층 사업 단위 항목에서 24번 진술문(나는 마을공동체 활동이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것 보다, 자치구나 서울시 차원으로 확장되어 통합된 마을 사업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과 복지 항목에서 35번 진술문(마을공동체가 빈곤층, 장애인, 아동 등과 같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유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이 대표적인 반대 진술문으로 제시되었다.

본 유형과 여타 다른 유형 간 차이를 나타내는 진술문 정보는 아래 <표 4-7>와 같다. 유형 B의 경우 마을공동체와 공동 원을 둘러싼 갈등 해결 장치 문항에 있어 16번 진술문(마을을 발생하는 갈등 해결 위해 내부적 협의체 반드시 있어야 한다)에 가장 찬성하는 유형으로 나타나며, 내부적 차원의 조정 과정을 가장 중시한 유형으로 인식된다. 아울러 정치-사회 문항에서 32번 진술문(계층, 나이, 정치 성향 선입견 두지 않고 기득권 층이라도 마을 구성원 받아들일 수 있다)이 타 유형에 비해 높은 점수를 기록하면서, 마을공동체 구성원의 계층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집단으로 이해된다. 한편, 마을공동체 기능 문항 중 복지적 측면에서, 35번 진술문(마을공동체가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데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이며, 마을의 복지적 기능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경제적 측면의 25번 진술문(마을 영역 중 경제적 기능이 가장 중요)에 유일하게 반대하는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표 IV-9> 유형 B와 타 유형간 차이를 나타내는 진술문과 Z-score

진술문	제 1유형		제 2유형		제 3유형		제 4유형	
	부여 점수	Z-score	부여 점수	Z-score	부여 점수	Z-score	부여 점수	Z-score
16	2	0.93	4	1.60*	-3	-1.27	0	-0.12
32	-2	-0.87	3	1.30*	0	-0.13	1	0.28
14	2	1.01	0	0.18	2	0.78	-3	-1.49
25	0	0.09	-1	-0.45	2	0.80	2	0.82
3	4	1.40	-1	-0.57	-3	-1.16	1	0.26
35	1	0.68	4	-1.90*	-2	-0.68	2	0.69

\*는 P<0.01, 그 외 모두 P<0.05

### (3) 유형 C: 행정 거버넌스 중시형

유형 C에는 총 7명의 활동가가 포함되었다. 본 유형은 타 유형과 모두 음의 상관 관계를 지니는 유형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곧 유형의 독립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형 C의 특성을 이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공동체와 공동 자원의 경계에 있어 타 유형에 비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특히 구성원의 경계 설정에 있어 마을 내부자의 위주의 공동체 운영 방식을 경계한다. 본 유형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공동체의 전반적인 운용에 있어 행정의 개입 및 영향력을 긍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행정 사업의 일환으로 특성이 드러난다. 이러한 유형 C의 성향은 마을공동체의 여러 의제 과정에 있어 내부적인 생성된 자발적 협의체 보다는,

외부 전문 기관, 특히 행정 주도의 공동체 운용을 중시한다. 이와 더불어 법제화를 통한 마을 활동 활성화에 찬성하고, 마을 사업이 서울시 차원으로 확장되는데 가장 동의하는 등 8번째 원리인 중층 사업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마을의 기능 영역에 있어서는 주민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사회적 기능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특성을 종합하여 본 유형의 활동가들을 ‘행정 거버넌스 중시형’이라 명명한다. 유형 C에서 Z-score가  $\pm 1$ 이상인 진술문을 영역별로 나열하면 아래 <표 4-8>과 같다.

<표 IV-10> 유형 C '행정 거버넌스 중시형'의 영역별 대표 진술문

구분	찬성 진술문	반대 진술문
경계		1. 나는 마을공동체가 멤버십 제도를 통해 구성원 위주의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1.031)  3. 나는 한 마을공동체 내부 자원이 마을 거주자나 활동가에게 우선적으로 제공 및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1.163)
조건 부합성		
집합선택	9. 나는 마을공동체 내부의 규칙이나 제도가 서울시나 외부 전문 기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한다(1.618)	
감시	10. 나는 마을 공동 자원이 공정하게 사용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위해 내부적인 차원의 모니터링(감시)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257)  12. 나는 마을이 내부적인 모니터링 보다, 서울시나 중간지원조직과 같은 외부기관의 모니터링을 받는 것이 더 공정하고 전문적이라고 생각한다 (1.667)	
제재 조치	13. 나는 마을공동체 내부 질서를 훼손하거나 마을 공동자원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구성원에게 페널티가 어느	

정도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1.118)		
갈등 해결	18. 나는 마을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서울시 마을 부서나 중간지원조직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더 전문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한다(2.005)	16. 나는 마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내부적인 협의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1.267) 17. 나는 마을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오로지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1.525)
자치 조직권	21. 나는 마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마을 관련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1.593)	19. 나는 마을공동체가 자치 능력을 가지기 위해 내부적인 조직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1.049) 20. 나는 마을과 외부기관(서울시, 중간지원조직)의 협력이 지나치면, 마을공동체의 자율성이 침해될 것이라 생각한다(-1.830)
중층 사업 단위	24. 나는 마을공동체 활동이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자치구나 서울시 차원으로 확장되어 통합된 마을 사업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1.557)	23. 나는 서울시내 마을 활동이 서울시 전체로 묶이는 것보다, 지역 내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1.241)
경제		
정치, 사회	31. 나는 일면식도 없던 주민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활발하게 한다는 점이 마을공동체 활동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1.322)	29. 나는 마을공동체를 활용한 주민들의 생활 정치 참여가 오늘날 대의민주주의 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한다(-1.140) 30. 나는 서울시나 외부 마을 기관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은 마을 주민들의 자치 능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1.481)
복지		
생태, 문화		

\*()는 z-score

유형 C의 대표적인 동의 진술문을 살펴보면, 집합 선택 항목의 9번 진술문(마을공동체 내부의 규칙이나 제도가 서울시나 외부 전문 기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과 감시 항목의 10번 진술문(마을 공동

자원이 공정하게 사용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적인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12번 진술문(마을이 내부적인 모니터링 보다 외부기관의 모니터링을 받는 것이 더 공정하고 전문적)이 제시되면서, 감시와 모니터링에서 행정의 역할을 중시하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재 조치 항목에서 13번 진술문(마을공동체 내부 질서를 훼손하거나 마을 공동 자원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구성원에게 페널티가 어느 정도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 갈등 해결 항목에서 18번 진술문(마을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서울시 마을 부서나 중간지원조직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더 전문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 자치 조직권 항목에서 21번 진술문(마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마을 관련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 등이 제시된다. 이와 더불어, 중층 사업 단위 항목에서 24번 진술문(마을공동체 활동이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자치구나 서울시 차원으로 확장되어 통합된 마을 사업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에 동의하면서, 마을 사업 확장성과 사업 간 정합성 확보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마을공동체 기능적 영역 중 정치-사회 항목에서 31번 진술문(일면식도 없던 주민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활발하게 한다는 점이 마을 공동체 활동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에서 동의하면서 네트워크 기능을 마을 기능 중 핵심으로 꼽았다..

이와 반대로 유형 C가 가장 반대하는 진술문으로는 경계 항목의 1번 진술문(마을공동체가 멤버십 제도를 통해 구성원 위주의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과 3번 진술문(마을공동체 내부 자원이 마을 거주자나 활동가에게 우선적으로 제공 및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이 제시되면서, 마을공동체 구성원 및 자원 운용에 있어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갈등

해결 항목에서 16번 진술문(마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내부적인 협의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과 17번 진술문(마을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오로지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 모두 반대 진술문으로 제시되면서, 마을 내부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갈등을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점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더불어 자치 조직권 문항에서 19번 진술문(마을공동체가 자치 능력을 가지기 위해 내부적인 조직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과 20번 진술문(마을과 외부기관의 협력이 지나치면, 마을공동체의 자율성이 침해될 것이라 생각한다)이 제시되면서 다시 한번 행정 친화적인 태도가 나타났다. 아울러, 중층 사업 단위 항목에서 23번 진술문(서울시내 마을 활동이 서울시 전체로 묶이는 것보다, 지역 내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 정치-사회 항목에서 29번 진술문(마을공동체를 활용한 주민들의 생활 정치 참여가 오늘날 대의 민주주의 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과 30번 진술문(서울시나 외부 마을 기관이 주도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은 마을 주민들의 자치 능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제시되면서, 마을 사업의 중층적 확장 전략에 동의하면서, 마을 구성원들의 자생적인 정치력 확보 보다는, 행정 친화적인 태도를 일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유형 C와 다른 유형 간 차이를 나타내는 진술문 정보는 아래 <표 4-9>와 같다. 우선 유형 C 는 타 유형이 모두 음의 Z-score를 기록한 점과 달리 18번, 12번, 9번, 24번, 22번, 8번 진술문 모두에 긍정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18 번, 12번, 9번 진술문의 경우 마을공동체와 공동자원의 집합적 선택 장치, 감시 활동, 갈등 해결 장치의 주체 행위자를 행정으로 명확히 인식한다는 점에서 타 유형과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22, 24번

진술문을 통해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단위가 확장되고, 통일된 정합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오스트롬의 8번째 원리에 유일하게 동의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8번 진술문(마을 의제 결정과정에 마을 구성원이 반드시 참여 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에 동의 의견을 보이면서, 타 유형과 같이 내부 협의를 중시하는 의사 결정 과정 보다, 행정을 통한 협의 경로를 보다 더 중시한다는 점에서 그 특색이 들어난다.

한편 20번, 17번, 30번, 16번 진술문 또한 유형 C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20번 진술문(마을과 외부 기관의 협력이 지나치면 마을공동체 자율성이 침해)과 30번 진술문(서울시나 외부 마을 기관이 주도하는 마을 사업은 주민들의 자치 능력을 훼손)에 반대하면서 상술한 행정 선호적 성향을 재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갈등 해결 장치 문항의 17번 진술문에 반대하면서, 타 유형과 차이를 보인다. 아울러 마을공동체 정치적 기능과 관련된 29번 진술문(마을공동체 활용 주민 생활 정치 참여가 오늘날 대의 민주제 보다 더 우월)에 반대하면서, 마을공동체의 대안 결사체적 성향에 반대하는 의견을 보였다.

<표 IV-11> 유형 C와 타 유형 간 차이를 나타내는 진술문과 Z-score

진술문	제 1유형		제 2유형		제 3유형		제 4유형	
	부여 점수	Z-score	부여 점수	Z-score	부여 점수	Z-score	부여 점수	Z-score
18	-3	-1.21	-4	-1.68	4	2.00*	-1	-0.34
12	-4	-1.61	-3	-1.20	4	1.67*	-1	-0.22
9	-4	-1.59	-4	-1.65	4	1.62*	-1	-0.63
24	-2	-1.01	-3	-1.42	3	1.56*	-3	-1.18
22	-1	-0.54	-2	-0.75	1	0.53*	-1	-0.42
8	-1	-0.76	-3	-1.44	1	0.51*	-3	-1.08
15	-3	-1.36	-3	-0.96	0	-0.19*	-4	-1.66
37	1	0.36	1	0.20	-1	-0.36	4	2.18

38	1	0.32	1	0.18	-1	-0.47	4	2.06
35	1	0.68	-4	-1.90	-2	-0.68*	2	0.69
19	3	1.19	4	1.90	-2	-1.05*	4	1.37
29	3	1.29	0	0.12	-3	-1.14*	1	0.26
3	4	1.40	-1	-0.57	-3	-1.16	1	0.26
16	2	0.93	4	1.60	-3	-1.27*	0	-0.12
30	1	0.79	1	0.29	-4	-1.48*	1	0.53
17	2	1.11	-1	-0.33	-4	-1.53*	0	0.09
20	4	1.39	1	0.55	-4	-1.83*	3	1.09

\*는 P<0.01, 그 외 모두 P<0.05

#### (4) 유형 D: 대안 가치 중시형

유형 D에는 총 3명의 활동가가 포함되었다. 본 유형은 이론적 관점에서 마을공동체 기능적 측면이 가장 잘 부각된 유형으로 나타났다. 그 중 생태 및 복지 관련 문항에 적극적인 동의를 표하면서, 마을공동체의 기능 및 사업에의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난 유형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공동체와 공동 자원의 경계에 있어 멤버십 위주의 운영을 반대하였으나, 자원 활용에 있어서는 내부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한 자원의 순환을 선호했다. 아울러 집합 선택 장치에 있어서는 민간, 즉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감시 문항에서는 모든 진술문이  $\pm 1$  범위에 위치하면서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공동 자원을 둘러싼 위반 행위 제재에 있어 무비판적인 구성원 포용에는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엄격한 규칙이나 제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마을공동체 자치 조직 형성을 위해 내부 조직체의 존재를 긍정하고, 중층적 사업 단위에 있어서는 사안에 따라 상이한 시각을 보였다. 이러한 특성을 종합하여 본 유형의 활동가들을 ‘대안 가치 중시형’이라 명명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유형 D에서 Z-

score가  $\pm 1$ 이상인 진술문을 영역별로 나열하면 아래 <표 4-8>과 같다.

<표 IV-12> 유형D '대안 가치 중시형'의 영역별 대표 진술문

구분	찬성 진술문	반대 진술문
경제		1. 나는 마을공동체가 멤버십 제도를 통해 구성원 위주의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2.060)
조건 부합성		
집합선택		8. 나는 마을과 관련된 중요한 의제 결정과정에 마을 구성원이 반드시 참여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1.078)
감시		
제재 조치		14. 나는 마을공동체 결속을 위해 내부에서 발생하는 위반 행위를 제재하는 규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1.494) 15. 나는 마을 내부에서 해를 끼치는 마을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별다른 제재 없이 포용하고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한다(-1.658)
갈등 해결		
자치 조직권	19. 나는 마을공동체가 자치 능력을 가지기 위해 내부적인 조직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1.368) 20. 나는 마을과 외부기관(서울시, 중간지원조직)의 협력이 지나치면, 마을공동체의 자율성이 침해될 것이라 생각한다(1.092)	
중층 사업 단위		24. 나는 마을공동체 활동이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자치구나 서울시 차원으로 확장되어 통합된 마을 사업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1.183)
경제	27. 나는 마을 경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자금이나 분담금 출자에 지속적으로 협조할 의향이 있다(1.087)	
정치, 사회		



복지	33. 나는 마을공동체의 핵심적인 기능이 구성원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1.329)	36. 나는 마을공동체 내부의 자발적인 복지가 복지국가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1.664)
	34. 나는 마을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육아나 돌봄 등의 복지가, 국가나 시장을 통한 복지 서비스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1.098)	
생태, 문화	37. 나는 마을공동체의 핵심적인 활동이 지역 환경과 먹거리를 보호하고 생태적인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2.185)	
	38. 나는 마을공동체가 성장이나 개발이 최고라는 생각을 극복하고, 자급자족 및 녹색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생태공동체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한다(2.060)	

\*()는 z-score

유형 D가 동의하는 진술문으로는 자치 조직권 항목에서 19번 진술문(마을공동체가 자치 능력을 가지기 위해 내부적인 조직체를 만들어야 한다)과 20번 진술문(마을과 외부기관의 협력이 지나치면, 마을공동체의 자율성이 침해될 것이라 생각)이 제시되었다. 또한, 기능적 측면 중 경제 항목에서 27번 진술문(마을 경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자금이나 분담금 출자에 지속적으로 협조할 의향), 복지 항목에서 33번 진술문(마을공동체의 핵심적인 기능이 구성원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 생각), 34번 진술문(마을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 육아나 돌봄 등의 복지가, 국가나 시장을 통한 복지 서비스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생태-문화 항목에서 37번 진술문(마을공동체의 핵심적인 활동이 지역 환경과 먹거리를 보호하고 생태적인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것), 38번 진술문(마을공동체가 성장이나 개발이 최고라는 생각을 극복하고,

자급자족 및 녹색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생태공동체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에 가장 동의하면서 마을의 구체적 기능과 관련된 문항에 높은 Z값을 보였다.

한편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으로는 경계 항목의 1번 진술문(마을공동체가 멤버십 제도를 통해 구성원 위주의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과 집합 선택 항목의 8번 진술문(마을과 관련된 중요한 의제 결정 과정에 마을 구성원이 반드시 참여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구성원의 열린 참여를 중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제재 조치 항목의 14번 진술문(마을공동체 결속을 위해 내부에서 발생하는 위반 행위를 제재하는 규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과 15번 진술문(마을 내부에서 해를 끼치는 마을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별다른 제재 없이 포용하고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이 제시되면서, 내부 위반 행위의 제재 필요성에는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구성원의 무조건적인 포용에는 반대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층 사업 단위 항목의 24번 진술문(마을공동체 활동이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자치구나 서울시 차원으로 확장되어 통합된 마을 사업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과 복지 항목의 36번 진술문(마을공동체 내부의 자발적인 복지가 복지국가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 등이 반대하는 진술문으로 제시되었다.

유형D와 여타 유형 간 차이를 나타내는 진술문 정보는 아래 <표 4-9>와 같다. 우선 타 유형에 비해 마을공동체 기능인 생태 및 복지 관련 문항에 적극적인 동의를 표하면서 유형의 기능적 측면이 부각되었다. 또한, 자치 조직권 보장 측면에서 마을공동체 법제화에 관한 동의가 B, C 유형에 비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감시 활동 영역에서 11번 진술문에 유일하게

동의하는 유형으로 드러나면서, 마을 모니터링 제도에 다소 회의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한편, 타 유형과 비교하였을 때 경계 영역에서 마을공동체의 멤버십 운영에 반대하면서, 열린 형태의 공동체 경계를 지향하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4번 진술문에 유일하게 반대하는 유형으로, 내부 위반 행위를 제재하는 규칙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표 IV-13> 유형 D와 타 유형 간 차이를 나타내는 진술문과 Z-score

진술문	제 1유형		제 2유형		제 3유형		제 4유형	
	부여 점수	Z-score	부여 점수	Z-score	부여 점수	Z-score	부여 점수	Z-score
37	1	0.36	1	0.20	-1	-0.36	4	2.18*
38	1	0.32	1	0.18	-1	-0.47	4	2.06*
33	-1	-0.40	-2	-0.79	0	-0.03	3	1.33*
34	0	-0.21	0	-0.08	0	-0.24	3	1.10*
21	-3	-1.23	3	1.48	3	1.59	2	0.73
11	-2	-1.08	-1	-0.45	-1	-0.29	1	0.41
3	4	1.40	-1	-0.57	-3	-1.16	1	0.26
31	-1	-0.72	4	1.61	3	1.32	0	0.14*
10	3	1.16	3	1.20	3	1.26	0	-0.01*
16	2	0.93	4	1.60	-3	-1.27	0	-0.12*
12	-4	-1.61	-3	-1.20	4	1.67	-1	-0.22*
18	-3	-1.21	-4	-1.68	4	2.00	-1	-0.34*
9	-4	-1.59	-4	-1.65	4	1.62	-1	-0.63*
14	2	1.01	0	0.18	2	0.78	-3	-1.49*
36	0	0.31	0	0.08	1	0.01	-4	-1.66*
1	4	1.79	-2	-0.62	-2	-1.03	-4	-2.06*

\*는  $P<0.01$ , 그 외 모두  $P<0.05$

### 3) 사후 면담(Post-interview)을 통한 유형 분석

통상적인 Q 연구 절차에 따르면, Q 소팅이 완료된 후 연구 참여자가 배치한 항목 중 가중치가 많이 부여되는 양극단의 진술문을 중심으로 사후 면담이 진행된다. Q 방법론에서의 면담은 Q 소팅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되기에, 통계적 절차를 통해 1차적으로 나누어진 인식 유형을 보완적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김홍규, 2008). 본 연구는 모든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Q 소팅 완료 이후 면담을 진행하였다. 사후 면담은 1인당 평균 40분 내외로 진행되었으며, 면담 내용은 연구자가 연구참여자로 하여금 양극단 주변에 위치한 진술문들의 배치 이유를 묻는 것으로, 연구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연구 참여자의 주관적 의사를 자유롭게 구술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된 면담 내용은 면담 기록지에 기재되었으며, 연구자가 이론적 관점에서 설계한 <표 3-2>의 12 가지 카테고리에 유념하여 분석이 진행되었다.

#### (1) 유형 A 활동가

유형 A에는 활동가 3, 10, 12, 14, 15, 18, 20, 28, 29 등 총 9명의 P표본이 포함되었다. 유형 A 활동가들의 대부분은 마을 공동체와 공동 자원을 둘러싼 경계의 문제에 있어 멤버십 제도의 유용성을 수긍하고, 자원 교류나 구성원의 경계를 두고 배타적인 태두리 설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진술문에 대한 유형 별 점수에서 경계 관련 진술문인 1번 진술문(멤버십 제도를 통한 마을공동체 구성원 운영)과 3번 진술문(마을공동체 내부 자원이 마을 거주자나 활동가에게 우선적으로 제공 및 사용)에 +4점, 2번 진술문(마을공동체 내부 자원이 다른 마을의 자원과 자유롭게 공유되어도 큰 문제가 없다)에 -4점을 배치하였다.

*“교과서적인 답변을 하자면 마을 자원은 열린 형태로 두는게 맞긴 하죠. 근데 동 차원*

까지 안 내려가고, 자치구로만 봐도 서울시에 마을 덩어리만 25개예요. 그러니까 자치구마다 고유한 마을 자원이 존재하는거예요. 또 자원이라는 게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자원인 것이 다른 마을에서는 자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인력 자원 같은 경우에, 우리 자치구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풀뿌리 활동가가 광역 단위의 마을 업무를 보러 차출 된다면 지역의 입장에서 큰 손실이지요. 지역 활동가도 자신의 지역을 잘 아니까 여기서 더 가치를 가지는 거고.”(활동가 3)

“마을에서 내부자랑 외부자가 구분되는 이유는 단순 해요. 민관의 대립 이기도 한데(...) 마을 활동이라는 게 결국 예산 같은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권력으로 직결돼요. 이런 경우에 이해 관계가 비슷한 구성원 끼리 뭉치는 편이 훨씬 유리해요. 갈등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거죠. 같이 해왔던 동료들이니까(...) 그리고 저는 마을 구성원들이 어느정도 계급적인 동질성이 지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치적 의사가 비슷하고, 가치관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만 결국 남게 되는 것 같아요.”(활동가 29)

“현재 마포에서 ‘모아(more)’라는 지역화폐 프로그램을 실험 중에 있어요. 2017년 부로 거의 200군데가 넘게 가맹점으로 가입했는데(...),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상권이랑 협력이 중요해요. 왜냐면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굳이 현금을 안쓰고 이용권을 써야될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리 가치소비라고 해도(...) 그래서 이용권을 이용하면 5%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가 되긴 했는데(...) 가맹점 가입에 적극적으로 응해주는 분들은 대부분 망원시장 상인들이예요. 예전에 마포에 홈플러스가 입정하려 할 때 마을이랑 망원상인들이 같이 입점 반대 운동을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결국 우리 편이라는 상호간의 확신이다든가, 공동으로 뭔가 같이 협력했던 경험이 있어야 이런 사업도 추진이

돼요.”(활동가 10)

이처럼 유형 A 활동가들에게 있어 마을공동체를 둘러싼 경계는 유무형의 내부적 자원을 공고히 하고,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데 있어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된다. 이처럼 내부적 결사를 중시하는 공동체 가치는 구성원 간의 공동 경험을 전제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아울러 유형 A 활동가들은 마을의 경계 설정이 곧 마을 자원과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인식한다. 무엇보다 내부적 차원의 집합적 선택 장치를 강조하고, 마을의 지속성을 공평한 내부 협의 등과 같이 1/n 방식으로 확보하고자 노력한다. 이는 사용, 제공 규칙과 현지 조건의 부합성 관련 영역에 있어 유형 A는 지속가능성의 여부를 중요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을공동체에서 멤버십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멤버십이 있어야 자립이 가능하기 때문  
이에요. 성미산 학교를 사례로 보면,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이 거진 38억 정도로 추산되  
는데, 학부모들이나, 후원 단체들이 그냥 이유없이 기부할까요?(...) 낮은 수준의 끈끈함  
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수준의 기금이죠. 다 이해 관계가 얽혀있고, 오랜 시간 밀접  
한 네트워크를 형성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보면 돼요. 지금도 학교에 입학하려면  
입학금, 학비의 명목으로 1,000만원 정도의 기부금은 다들 내고 있어요. 구성원이 되려  
고 하나(…)”(활동가 10)

“사실 저희 구성원들 입장에서 마을의 가치가 사업으로 알려지고, 홍보되는 점에 대해  
선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막상 마을 활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마을공동체 구  
성원들이 늘어난다는 것이 꼭 긍정적이기만 할까 싶기도 해요. 어느 정도 자립성을 가

진 마을 활동은 회비 제도의 필요성이 분명히 부각되는 시점이 오게 돼요. 생협이든, 먹거리 사업이든 일반적인 취미 모임이든(…) 1/N의 회비 구조가 없으면 활동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 들죠.”(활동가 20)

이와 더불어 유형 A는 마을공동체를 둘러싼 감시, 제재, 갈등 해결 등의 국면에 있어 협의를 통한 통제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행정 등과 같은 외부 조직에 의존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감시 영역의 11번 진술문(마을 내부 모니터링 제도가 구성원간 불신을 초래)을 요인가 -2에, 17번 진술문(마을 내부 발생 갈등 오로지 내부에서 자발적 해결) 요인가 +2에 배치하면서 확인된다.

“일전에 공동 출자로 운영되는 마을 학교에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요.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마을 교습소의 운영자가 아이들에게 신체적인 체벌을 가해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소송으로 이어지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외부적으로 문제가 안 번지도록 학부모들이 신속하게 내부 협의를 거쳐서 대응책을 마련한 게 좋은 대처였던 것 같아요.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마을 내부에서 생긴 문제는 내부적으로 해결하는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외부에 알려지면 괜히 파장만 커질 우려도 있고(…)”(활동가 12)

“마을은 일종의 문화적 습성이라고 보면 돼요. 딱히 뭘 배울 필요도 없고 그냥 구성원이 되어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그런(…) 그래서 꼭 무슨 지침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은 안에서 해결을 해야죠. 또, 마을 공동체에서 행해지는 대표적인 제재라면 소문이라는 게 있어요. 소문이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이 되는 거죠. 같은 마을 사람들 간에 도는 말들이 결국 마을 내부의 보편적인 가치 판단일 가능성이 크니

까요. 또 구성원들이 자기도 모르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생겨서 서로간에 더  
조심하기도 하구요.” (활동가 28)

“예전에 마을에서 어떤 활동가 주도로 큰 프로젝트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역에 유  
력한 후원 단체에게 지원도 받고(…) 근데, 그 후원금의 일부로 자기 개인 빚을 갚는데  
쓰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긴 빚에도 충당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활동가는 마을  
활동이 정지되어서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구성원 간에  
돈을 어떻게 쓰는지 드러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보장 되어있고, 또 부정이 적발된 이  
후에 내부적인 협의 과정이 있었으니까 나름대로 신속한 대처가 가능했죠.” (활동가 15)

이처럼 유형 A 활동가들의 내부 지향적 성향은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이나  
광역시 단위의 마을 행정 기관으로부터의 독립적인 마을공동체 활동을  
가능케한다. 민-관 간 갈등으로 이해되기도 하는 내, 외부의 갈등은 유형 A  
활동가들이 소속된 자치구와 같이 2012년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이전부터  
지역 내 마을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거나, 관과 대립적인 성향을 지닌  
풀뿌리 단체가 존재하면서 촉발된 갈등이다.

“행정이랑 관계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마을활동은 그냥 주민들끼리 일상 생활 의제를  
천천히 풀어가는 삶의 방식인데(…) 행정이 개입되면 주민은 실행 수단 그 이상 이하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려요. 일종의 주민 길들이기니까, 근데 주민들이 마을 활동을 하다  
보면, 기획 능력도 좋아지고, 마을 활동가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러면 행정이 좋아할까  
요(…) (활동가 10)



“행정은 아직도 자기들이 주도자라고 착각하죠. 예산 같은 자원을 배분하는 권력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 마을 활동가들 입장에서 자원은 돈 보다 활동가 그 자체 예요. 일개 주민이 활동가 차원으로 육성되면, 기획 능력 이라던가 조정 능력이 생기면 행정한테 따질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러면 행정 입장에서는 유리할 게 하나도 없죠. 말은 주민들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주민들 목소리가 커지면 관 입장에서는 예산 조정하는 힘 자체가 빠질 수도 있으니까(…)”(활동가 18)

“주민들이 해가 지날수록 어떻게 마을을 기획해야 행정이 좋아하는지를 알게 돼요. 이런 현상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어요. 행정의 언어에 익숙해지고, 행정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주민들이 맞추는 거잖아요. 이제 어딜 봐서 주민 주도인가요(…) 그런 면에서 행정은 자신들이 원하는 구도를 만드는데 성공한 거죠. 정작 마을 현장에는 행정이 없는데도(…)”(활동가 29)

유형 A 활동가들은 마을공동체 사업이 법제화되고 확대되는 점에 대해서 심정적 공감은 표하지만, 현실적 차원에서 그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아울러 마을공동체가 중층적 사업 단위로 확대되는 점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21번 진술문(마을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차원의 마을 법적 제도 필요), 24번 진술문 등의 부정적 요인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진선미 의원 발의로 마을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탠데, 사실 신기하기도 했어요. 마을 활동을 오래해온 입장에서는 이게 공론화가 되고 법적으로, 성문화된 형태로 우리 같은 활동가들의 업적이 반영되는 거니까(…) 근데 제도나 정책도 구속력이

강해서 민관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게 법적으로 되어버리면 그 구속력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어요.”(활동가 14)

“마을 활동은 결국 자발적인 활동인데 이걸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해요. 그리고 제 생각에 법의 진도는 사회의 진도 보다 결코 빠를 수 없어요. 사회적으로 뭔가 움직임이 있고 나서 법제화 되는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마을 활동처럼 역동적인 민간 활동을 법제화 하게 되면 분명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지역별 할당 쿼터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마을이 법제화 되면 더 강한 구속력이 생기지 않을까(…)”(활동가 12)

마을공동체의 기능적 측면과 관련된 진술문을 살펴보면, 유형 A활동가들은 마을공동체의 핵심적인 기능을 정치적 효능감로 보았다, 이는 29번 진술문(마을공동체 활용 주민 생활 정치가 대의 민주주의보다 우월)이 요인가 +3을 토대로 확인된다.

“저는 마을공동체 핵심 기능은 생활 정치 참여라고 생각해요. 정치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생활 하면서 풀어야할 의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 토론하고 토론후하고(…) 그런 게 다 정치죠. 결국 마을은 대의제에 대한 불신을 갖는 사람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거철만 되면 투표 달랑 한번 하는 거 말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게 뭐가 있나요(…) 마을 정치의 핵심은 대의제처럼 복잡한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볼 필요 없이 뭐든 상의하고 밤샘 토론도 할 수 있고(…). (활동가 12)

“저는 마을공동체 운동이 계급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공적 영역도 싫고, 그렇다고 시장이 있는 사적 영역은 더 싫고, 대안 담론을  
 가지고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끼리 갈 수 밖에 없어요. 문제는 8:2의 불공평한 게임에서  
 8이 마을을 꿈꾸고 뭉쳐야 되는데, 정작 8 중에 극소수만 마을을 통해서 진짜 무엇인가  
 를 하려고 하고(…)” (활동가 29)

“예전에 스페인에서 까탈루냐 독립이 말이 많았죠. 정작 까탈루냐 사람들 90%는 독립  
 하고 싶어하는데 중앙 정치 때문에 안되는 거잖아요? 마을공동체도 규모의 문제지 공  
 도 싫고 사도 싫고 독립적으로 다른걸 해보려고 하는거예요. 대신 마을은 소규모기 때  
 문에 구성원들의 의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어요. 물론 지난한 토론 과정도 필요하  
 지만(…) 그리고 그런 과정이 참 좋은 게 계속 토론을 습관화하면 비가역적인 경험치가  
 생기죠. 그러면 어떤 의제라도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습관이 생기고(…)” (활동가 10)

## (2) 유형 B 활동가

유형 B에는 활동가 6, 8, 11, 13, 16, 17, 19, 21 등 총 8명의 P표본이  
 포함되었다. 본 유형의 활동가들은 마을 공동체와 공동 자원을 둘러싼 경계의  
 문제에 있어 1번 진술문(마을공동체 멤버십 구성원 위주 운영)에 요인가 -2를  
 기록하면서 반대 태도를 보였으며, 2번 진술문(마을 내부 자원이 다른 마을  
 자원과 자유롭게 교류)은 +1, 3번 진술문(마을 내부 자원이 거주자,  
 활동가에게 우선 제공)에는 요인가 -1점을 기록하였다. 이에 유형 A에  
 비해서는 마을공동체 운용에 있어 개방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저희 자치구는 엄마들 위주로 마을 업무를 다 보고 있어요. 또 사업이 아이들 방과 후 활동이나 관련 사업으로 출발해서 그런지 이사를 가거나, 아이들이 크면 출석이 뜸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아이들이 학교 입학하면서 마을 활동에 참석하는 새로운 분들도 계속 생겨나요. 그래서 고정 멤버는 저를 포함해서 딱 3명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활동가들이 수적으로는 유지가 되는데, 멤버들은 활동에 따라 계속 바뀌는 그런 형태예요.” (활동가 13)

“저는 마을공동체 자원의 개념이 이제는 사람 대하는 서비스로 이해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자원이라면 경계를 두지 않고 자유롭게 교류 되도록 큰 문제가 없죠(…) 다만 재정 관련해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사용 되어야하는 생각에는 동의해요.” (활동가 16)

“자치구 특성 상 청년층이 많아서 그런지, 마을 미디어나 마을 아카이브 같은 시청각 자료를 만들고 공유하는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어요. 마을 라디오를 예로 들면 지역에 서 오래 남 모르게 마을 활동을 했지만, 제도권 마을 사업은 하지 않았던 분들을 저희가 초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실시간으로 200명 내외의 청취자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미디어 자원이 앞으로 마을 자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보 자원이 실시간으로 공유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활동가 11)

유형 B 활동가들은 마을공동체의 집합적 선택 과정과 의제 결정 과정 등에 있어 외부 보다 내부를 중심으로 한 협의 과정을 중시하였으며, 구성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데 있어 주민의 비중을 가장 높게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태도는 진술문 16번(마을 내부 갈등 해결 위해 내부적인 협의체 반드시 있어야)에 요인가 +4, 진술문 19번(마을공동체 자치 능력 위해 내부적 조직체 만들어야)에 요인가 +4, 진술문 7번(마을 의제 결정과정에 마을구성원이 반드시 참여하지 않아도 됨)에 요인가 -3을 기록하면서 확인된다.

“마을 의제를 결정하는데 단순히 문제를 인식하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 보다 그 과정에서 주민의 자분이 얼마나 작용하는지가 핵심이라고 봐요. 강북구 경우에 그 과정이 가장 잘 되는 지역 중 하나예요. 삼양동, 수유, 미아 지역 중심으로 ‘열린사회시민연합’이라는 풀뿌리 조직이 거의 20년간 활동해왔고, 서울에 지부가 3개 밖에 없는데 하나가 여기에 있는 거죠(…) 다른 단체랑 차이가 있다면, 설립 목적 자체가 주민 자치를 보장한다는 점에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의제를 만들어보도록 쪽 밀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민 단체들은 뒤에서 빠지고 주민들이 스스로 모임이나 기반을 만드는데 큰 공헌을 해왔어요.” (활동가 22)

“저는 마을 사업의 가장 큰 공이 주민 제안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3인 이상만 되면 누구나 어떤 의제로든 마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해보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게, 계획 수립부터 실행, 결과까지 모든 과정을 주민이 직접 기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간 보면 2대1, 3대1, 지금은 경쟁률이 5대1 정도 돼요. 이 과정에서 행정이 세세한 규칙을 만들거나 강요했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미가 떨어지겠죠. (활동가 8)

유형 B 활동가들은 마을공동체 내부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에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는 진술문 14번(마을공동체 결속을 위해 내부 위반 행위를 제재하는 규칙이 필요) 요인이 0 점을 통해 확인된다. 아울러 갈등 해결 과정에 있어 내부 협의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하는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진술문 16번(마을 발생 갈등 해결 위해 내부적 협의체 필요) 요인이 +4점, 19번 진술문 등을 통해 확인된다.

“이전에 다른 활동가의 실수를 너무 강하게 질책하는 스타일의 활동가가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활동만 그만두면 되는데, 그만두면서 SNS에 다른 활동가들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을 하더라구요. 근데 이걸 마을 내부 사정을 공공에 적나라하게 공개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활동을 안한다고 해도(...) 그래도 이런 행위에 대해서 따로 제재를 가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좋은 일, 공적인 일 같이 해보자고 하다가 생긴 갈등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무뎌 지기도 하고(...)” (활동가 19)

“마을 활동가들도 완장을 차버리면 부작용이 생겨요. 일전에 산새 마을이라고 서울시에 서 대표 사례로 주저 재생 마을인데(...) 마을공동체가 발전한 후에 지역 내부 주민에게 관리하도록 대표 자리를 줬는데, 그 후에 지원금이 총 1억이나 됐어요. 한전 보상금도 포함되고(...) 근데 그 돈 관련해서 예산을 너무 불투명하게 운용하고, 마을 총회도 열지 않고 초기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주민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신속하게 내부 협의를 통해서 그 분은 다음 해부터 대표직을 그만두게 됐어요. 마을 내부 협의는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모니터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요” (활동가 19)

타 유형에 비해 유형 B는 마을공동체의 기능적 측면에 있어 마을 구성원의

계층적 다양성을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진술문 32번(나이, 정치 성향 등에 선입견 없이 기득권이라도 구성원)에 요인가 +3을 기록한 대목에서 확인된다. 아울러 복지적 측면에서 진술문 35번(마을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유용하지 않음)에 요인가 -4점을 기록하면서, 마을공동체의 복지적 유용성을 긍정한다.

“올해 품앗이 공부방이나 여성 모임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장소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고 해요. 그래서 작년부터 조합원 차원에서 1,000만원 가량을 목표로 모금을 해서 활동가 엄마들 위주로 알음알음 700만원 정도 모았어요. 근데 그 돈도 겨우 겨우 모은지라,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충당하나 걱정이었는데, 일전에 교량 건설 반대 운동을 함께 했던 지역 유지 분께서 통크게 300만원을 출자 해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지역에 중소 기업을 갖고 계시던 분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마을공동체에도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활동가 13)

“한 여성 활동가 분이 남편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따로 일을 하지 않고 취미 생활로 마을 활동을 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활동가들 간에 좀 서먹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정작 그 분이 좋은 취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마을 활동을 계속 하면서 그런 불필요한 불협화음을 본인이 종식시키고(...) 활동가 중에서 끝자락에 있다가 지금은 중심 멤버예요. 여유 있는 사람이 마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활동가 17)

“행정직에서 마을을 보다가 최근 몇 년간 현장에서 마을 활동을 해보니까, 약자나 복지 관련된 의제가 마을에서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최근에는 동네에서 폐지 주우시는 분들의 사연을 듣다가, 이분들이 말도 안되는 돈을 받고 물건을 판다는 사실을 알게 됐

어요. 그러니까, 상점가에서 노인 분들이 느리고 잘 모르니까 제멋대로 싼 가격을 책정하는 거죠. 그래서 마을 모임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해서 어르신들로 하여금 서로 가격 정보를 공유하고, 더 좋은 가격을 주는 철거점에 팔 수 있도록 저희가 일종의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복지관이나 복지 정책을 통해서 할 수 없고 마을에서만 할 수 있는 복지라고 생각해요.” (활동가 6)

### (3) 유형 C 활동가

유형 C에는 활동가 4, 5, 7, 9, 22, 24, 30 등 총 7명의 활동가가 포함되었다. 본 유형의 활동가들은 마을공동체 활동에 있어 행정 주도성이 지니는 장점을 수긍하고, 사업 성공을 위해서 관을 주도로 한 적극적인 민, 관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유형의 활동가들은 마을공동체와 공동 자원의 경계 설정에 있어, 개방적 경계를 확보하고 공적인 형태의 마을 플랫폼이 창출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구성원 경계 설정에 있어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마을 공동 자원 중 가장 중요한 것을 주민 간 네트워크 자원으로 인식한다. 이에 행정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자원의 순환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러한 태도는 마을공동체 멤버십 및 자원 사용의 우선 순위와 관련된 1번 진술문, 3번 진술문에 각각 요인가 -2점, -3점을 기록하면서 확인된다,

“저는 주민 제안 공모 사업을 통해서 마을 활동에 뛰어들게 된 케이스예요. 저희 자치구의 같은 경우 다른 자치구랑 다르게 시민 사회 단체가 전무한 상황이라, 저 같이 주민들이 마을에 참가하게 되고, 거기서 마을 활동가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자치구는 마을 구성원이라는 경계가 딱히 없다고 보면 돼요”

(활동가 7)

“사실 시민 사회나 풀뿌리가 강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주민 주도성을 강조하는 자치구 입장에서 보면, 그 분들의 마을 사업은 끼리 끼리 하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마을 특성을 너무 잘 파악하고, 행정에 목소리도 강하게 낼 줄 아시는 분들이라 (….) 보통의 주민들이 끼기가 쉽지가 않죠. 뭔가 거부감도 들고, 저희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에게 행정이 적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존재 예요, 주민은 제도의 혜택을 잘 이용한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 마을활동가라고 부르는 분들 보다는 주민으로 등장한 마을 사업 지기나, 주민네트워크 측의 의견을 더 수렴하려고 해요.”(활동가 24)

“실제 제가 인큐베이팅 사업에 참여해서 교육 수업을 할 때 강조하는게 마을 자원은 순환되어요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마을은 공공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에 지원한 목적이나 명분을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가져갈 수 있게 강조하는 거죠. 실제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정작 담당해야 될 주민협의체, 그러니까 작능 단체죠. 그 분들은 마을 사업에 관심이 없어요. 구 의정 활동이나 그런데 관심이 많지, 마을 사업에는 전혀 관심이(…) 그래서 행정에서 내려온 혜택이나 공간 같은 자원을 대부분 자기들 활동에만 써요.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주민들이 계속 참가해야 자원 자체가 신선하게 쓰여요. 흑심이 없잖아요 주민들은.”(활동가 30)

“따지고 보면 저희 자치구에서는 주민 같은 인적 자원이나 행정에서 주는 예산, 활동비 말고는 자원이 없어요, 마을 역사가 오래된 것도 아니고 2012년 이후에 사업이 진행된 거라(…) 마을 사업 이전부터 마을이 있었던 유명한 곳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우리 입장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은 주민들이예요. 제가 저희 구에 주민 모임 참가 팀을 다 만나보고 하는데요, 이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예요. 어떨 때 보면 공무원보다 더 공공에 관심이 많고(…)”(활동가 5)

유형 C의 활동가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공공성 사업으로 인식하는 만큼, 제재나 모니터링, 집합적 선택 과정 등에 있어서도 순수 민간 보다는 행정의 영향력을 핵심적인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이는 12번 진술문(마을 내부 모니터링 보다 외부 전문기관 모니터링이 필요)의 요인가 +4점, 갈등 해결 장치 문항 진술문 16번, 17번에 요인가가 각각 -3, -4점을 기록하면서 본 유형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제재 조치 관련 진술문 15번(해를 끼치는 마을 구성원 제재 없이 포용)에 있어서 모두 음의 요인가를 기록한 타 유형과 달리 요인가 0점을 기록하면서 상대적으로 제재의 필요성에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우선 마을 자원을 사용하는데 감시를 하고 규칙을 빠듯하게 설정하는 것 자체가 꼭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준으로 주민 제안 사업이 총 56건데, 제가 평소에 다 밀착 지원 하는걸 원칙으로 삼아요. 그러면 이 사업 팀이 앞으로 씨앗기를 벗어나서 더 발전할 수 있을지 아니면 아 이걸 좀 개선이 필요하다 판단이 되거든요. 이럴 때 제가 행정의 입장에서, 그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가교를 맞아서 공모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활동가 7)

“민간 보다는 행정이 집행력과 실행력이 좋죠. 마을이 사업화 된걸 인정하면, 민간도 어느정도 행정에 익숙해 저야해요. 무조건 양보 안하고 버티는건 좀(…). 다행인건 서울

시의 기초 자체가 민간 편이에요. 서울시가 민간의 든든한 뺨인거죠. 그러니까 민간은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마을을 하려면 행정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요.”(활동가 22)

“마을 활동을 할 때 행정이 가이드라인을 일방적으로 제시한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은 한번도 없어요. 요즘 행정이 간섭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 의견 수렴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지(…) 지금 주민 제안 사업이 3인 이상이면 누구나 어떤 주제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만 봐도 행정이 지시한다든가 간섭한다는 건 지난 소리죠.”(활동가 9)

“지금까지 마을 활동을 하면서 제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재를 해야하는 상황이 한번도 없었으니까(…) 이 사업 자체가 행정이 주민에게 권력을 이양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는 거지, 옛날 새마을 운동처럼 강제로 길 터라, 이런게 아니잖아요(…) 주민이 자발적으로 공공 활동을 한다는 거라서 따로 무슨 규칙 위반 사례 같 은건 없어요.” 활동가(4)

“마을공동체 사업 성공 여부가 행정에 달린 이유가, 구청장의 역량이 커서 그래요. 저희 자치구 같은 경우에 구청장이 어떤 정당이나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요. 재보궐로 진 입한 지금 구청장님이 거리 환경 개선에 큰 관심을 가져서 사업비를 거기에 몰아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마을 사업에 재정이 더 가야 된다고 주장해서 실제로 예산을 올려준 사례가 있었어요. 활동비가 있어야 마을 활동을 하고, 활동비가 마을 자원의 상당 부분인데, 행정이라 함 협력을 잘해야죠.”(활동가 7)

유형 C 활동가들은 마을 사업의 유형이 점차적으로 통일되고, 사업의 규모 또한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층적 사업 단위에 동의하였다. 이는 마을

사업에 있어 자치구와 서울시 간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22번 진술문(마을공동체 활동의 통일된 형식), 24번 진술문(소규모 마을  
활동보다, 서울시 차원으로 확장된 통합 마을 사업)에 각각 요인가 +1, +3을  
기록하면서 확인 된다.

“서울시 마을 사업이 5년이 지나면서 가장 많이 제기됐던 비판은 도대체 마을 사업이  
뭐냐 예요, 근데 흥미롭게도 주민 제안 사업만 놓고 보면 초반의 마을 사업이 노동, 생  
협, 여성, 복지 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공모 사업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사업 신청하  
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을 신청 해야하는지 감을 잡으신 거 같아요. 저희 자치  
구에서도 실행력이 좋은 커뮤니티 위주 사업으로 마을 의제가 점점 더 수렴되는 것도  
그런 맥락이 아닌가 싶어요(…)” (활동가 4)

“저는 지금 마을 사업처럼 예산이 주된 자원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행정의 추진력 없이는 자원 확보가 힘들죠. 주민은 지역 의제를 찾아서 마을 사  
업을 하려고 하고, 행정은 그 움직임을 보고 지원하고(…) 그런 면에서 자치구는 계속  
해서 서울시 마을 사업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해요. 이게 가깝게는 박원순 체제가 끝  
나면 예산이 지금처럼 안나올거라는 말도 있는데, 자원이 있을 때 토대를 잘 마련해야  
죠.” (활동가 9)

“시간이 지나보니 마을공동체 사업이 서울시의 일반 정책과 유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사회적 경제라든가, 생협, 복지, 공동체 복원 등의 목표가 지금까지 서울시가 추구해왔  
던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일반적인 서울시 정책이 활성화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봐요.” (활동가 5)

유형 C 활동가들은 마을공동체의 기능적 측면에 있어 29번 진술문(마을공동체 주민 생활 정치 대의 민주제 보다 우월)에 요인가 -3을 기록하면서 부정적은 태도를 보였으며, 31번 진술문(일면적도 없던 주민 관계 형성 마을의 가장 큰 장점)에 요인가 +3을 기록하면서 네트워크의 장점을 강조하였다.

“주민으로 등장한 입장에서, 마포나 관악, 은평 같이 시민 사회 영역에 계셨던 활동가분들은 정말 대안적으로 뭘 해보려고 시도한다는 점에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마을공동체가 네트워크나 주민들의 참여나 이런 쪽에서 기능한다고 보는 입장이라, 정치적으로 뭔가 연계되고 이런 거는 생각해 본적 없어요.” (활동가 7)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저희 자치구 같은 경우에 전체 마을 사업 중에 수익을 내는 사업은 5%도 안되요. 그러면 마을 자원은 돈이 안되니까 자원이 아닌가요?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애초에 돈 벌려고 하는 사업도 아니고(…) 대신에 행정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협동 조합으로 성공한 사례들의 경우 굉장히 바람직하다 정도지, 모든 마을 활동이 협동 조합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마을의 공동 자원은 네트워크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행정의 입장에서 마을 사업이 관심이 가지는 부분들 일일이 다 챙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자발적인 네트워크 통해서 지역에 공공 의제를 스스로 찾아서 활동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이고, 소중한 자원이 아닐까 싶어요.” (활동가 9)

#### (4) 유형 D 활동가

유형 D에는 활동가 1, 25, 26 등 총 3명의 P 표본이 포함되었다. 본 유형은 공동체 경계에 있어 구성원의 경계와 자원의 경계에 상이한 시각을 보인 집단이다. 이에 구성원 멤버십과 관련된 진술문 1번(마을공동체가 멤버십 제도 통해 구성원 위주의 운영이 되어야)에는 요인가 -4점을 기록하였고, 진술문 3번(마을공동체 내부 자원이 거주자, 활동가에게 우선 제공 및 사용)에는 요인가 +1점인 태도를 보였다.

“마을 구성원 간 멤버십 같은 게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자치구 특성상 정주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을 오래한 시민 단체가 결국 주민 의사랑 비슷한 셈 이고, 행정도 여기에 공감하고 있어서 마을 분위기가 통일성이 높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런지 몇 년 전에 98%가 아파트 중심 지역인 창 4동이란 연립주택으로만 된 방학 2동이 동일 사안으로 마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고, 큰 내부 갈등 없이 다양한 주민들이 어우러져서 마을 활동가도 양성하고 그랬죠.” (활동가 26)

“자치구 특성상 모든 사업을 지역 특색에 맞게 운영하고 있어요. 지역에 산업 지구가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지역 상권을 활용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만든다거나, 운수 단체 가 많기 때문에 기사님들이 편리할 수 있게 도로 정비나, 휴식 공간을 보장한다든가(...) 그러다 보니 마을 자원 자체는 지역 내에서 생성해서 지역 내 의제에 쓰이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도 대부분 오래 거주한 마을 구성원들이 구요” (활동가 26)

“우리 자치구에서 제일 활발한 건 아파트 중심의 공동 육아 모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도 맞벌이 사정 때문에 마을 사업에 참여하고, 또 그렇지 않은 구성원들도 관심만 있으면 경계 없이 누구나 마음만 있으면 마을에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지 참여하는데 담이 높지 않아요.” (활동가 1)

D 유형의 활동가들은 마을 공동 자원 관리를 모니터링 시스템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자원 관리 과정에서의 제재나 페널티 보다는 폭 넓은 의사 결정 통로를 확보하고, 상호 간 공감 형성이 가능한 초기 규칙 설정이 더 중요한 방법임을 강조한다. 이는 감시 활동 관련 진술문 11번(마을 내부 모니터링이 구성원 간 불신 초래)에 타 유형과 달리 유일하게 양의 요인가인 +1을 기록한 점에서 나타난다. 아울러, 14번 진술문(마을공동체 결속 위해 내부 위반 행위 제재 규칙 필요)에 요인가 -3을 기록하며 반대 태도를 보였다.

“같은 자치구 내에서도 마을 팀이 여럿 있어요. 근데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성과를 내는 스타일이기보다, 대안적인 움직임 자체를 확보하자는 취지여서, 따로 활동을 제약하는 모니터링은 없어요. 대신에 자율적으로 회비 구조를 충당 하자는 의견을 초기에 정해서 그런지 자기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기금을 내거나, 활동비를 받아가고 그래요. 아무래도 행정적으로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 보다는 정말 관심사가 비슷한 분들 끼리 재미있게 해보려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활동가 25)

“예전에 한 사업팀이 활동비를 몇 달 동안 공개하지 않아서 공론화 된 적이 있어요. 일각에서는 돈을 사적으로 쓴 거 아니냐, 좀 강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말도 있었는데(…) 저희는 주기적으로 열리는 워크숍을 통해서 해결했어요. 거기서 마을공동체

회의 정보나 수입, 지출 다 공개하기로 하고, 회의 일지를 작성하고, 또 회의 불참 때는 위임자를 보내게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대화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었어요.”(활동가 26)

본 유형은 진술문 배치 결과, 마을 공동체의 기능을 두고 여러 유의미한 요인이 점수를 보였다. 특히 마을공동체 기능 중 복지와 생태적 기능에 중점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격을 인식하였다. 이는 P 표본 응답자들이 소속된 자치구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고, 활동 지역에서 관련 사업이 타 자치구에 비해 보다 더 활성화 된 점에 기인한다. 이는 진술문 33번(마을공동체 핵심적 기능이 구성원 복지 욕구 충족)에 요인 +3, 진술문 34번(마을 안 공동육아, 돌봄 복지가 국가 통한 복지보다 효과적)에 요인 +3점, 진술문 36번(마을 공동체 내부 자발적 복지가 복지국가 역할 대체하는 것 불가능)에 요인 -4점을 기록한 점에서 확인된다. 아울러 생태적 기능 문항인 37번, 38번 진술문 모두에 요인 +4를 기록하였다.

“저희 자치구는 독특하게도 민간을 중심으로 복지 네트워크가 촘촘하게 구성되어왔어요. 아무래도 지역적 특성상 고령 인구가 많고, 소득 수준도 높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일 테고, 무엇보다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민간복지연합체라고 불릴 수 있는 ‘시골벽적 사랑방’ 모임이 조직 됐기 때문이에요. 이 조직은 한마디로 공적인 복지에서 소외된 분들을 케어하는 거예요. 예로 방학 2동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제나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기에 힘든 노령 인구가 많은데, 사랑방 모임에서 이 분들에게 자발적인 민간 복지를 제공하는 거죠(...) 이 조직의 최대 장점은 사각지대의 현황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활동가 26)



“사실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큰 수혜는 여성, 그리고 아동 순서로 가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마을 활동가나, 마을 커뮤니티 모임이나, 교육, 아동 사업 관련해서 여성 활동가 분들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분들은 보통 낮 시간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동네에 삼삼오오 모여서 켄트나 반찬 만들기 같은 사업을 하면서 본인들의 말동무를 찾고, 동시에 그 활동을 좀 힘들거나 아동들에게 혜택을 주는 쪽으로 이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복지가 만들어지는게 아닌가(…)” (활동가 25)

“아무래도 저희 마을 활동의 가장 강점은 도시 농업인 거 같아요. 지리적인 장점인 거죠. 그러다 보니 서울시를 대표해서 도시 농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도 시작됐어요. 가깝게는 동네 텃밭부터 시작해서, 식용 가능한 유기농 재배하기, 나중에는 가게를 차려서 대량 판매 까지 가능하도록 다양한 발판 마련 환경이 구축되고(…) 마을공동체 활동에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건 큰 강점 이예요. 왜 마을에는 모든 게 있다라는 말처럼 농업을 중심으로 경제, 환경, 대안 모임 같은 모든걸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 큰 자산이 예요. 당연히 적극적으로 이용해야죠” (활동가 1)

“마을공동체 생태적 역할이랄까 그런게 부각되는 지역들은 그럴 수 있는 토대나 여건이 되기 때문이에요. 도봉구는 특성 상 산림 지역에 속하고, 또 그러다 보니 주민들 사업도 유희 공간을 자연친화적으로 전환하는 식의 활동이 추세가 됐던 거구(…) 다른 한편으로, 사업 심사 할 때도, 환경 활동이 비판이 가장 적은 주제이기도 해요. 생태나 환경 같은 주제들은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반대도 적고, 또 뭔가 진짜 대안적인 활동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활동가 26)

### 3. 인식 유형화의 의의

상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오스토롬의 공동자원 제도 설계 원리 및 마을공동체 기능을 중심으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주요 마을 활동가들의 인식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도출된 네 가지 유형은 ‘자치 결사체 중시형’, ‘포용적 협의체 중시형’, ‘행정 거버넌스 중시형’, ‘대안 가치 중시형’이며, 이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주요 활동가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 가지는 이념형(ideal type)<sup>31</sup>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우선 이론적 관점에 입각하여 각 유형의 대표적인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 아래 <표 4-14>과 같으며, 이는 상술한 <표 4-3> 개별 진술문에 대한 인식 유형 별 점수 및 사후 면담 결과를 토대로 구성하였다.

<표 IV-14> 이론적 관점에서 살펴본 각 유형의 특징

구분	유형 A	유형 B	유형 C	유형 D
자원의 경계	-멤버십 위주 구성 원 경계 설정 -공동체 배타성 확보	-무형 자원 중시 (인력, 마을 미디어 등등) -마을 간 자원 교류 필요성 인정	-행정 권한을 토대로 한 예산 등의 재정 자원 중시 -열린 구성원 경계 선호	-내부 지역 특성 활용한 자원 활용 중 시
사용, 제공 규칙과 현지 조건의 부합성	-마을 자원 제공 및 사용에 있어 규칙 준수	-내부 협의 통한 자 체적 해결	-행정 주도의 공급 우선주의	-내부 자치체의 정 례화 통한 해결
집합적 선택, 갈등 해결 장치	-순수 민간 영역 주 도의 집합 선택 강 조 -내부 중심의 갈등 해결	-주민 의사 통로 확 보형 -내부 협의체 통한 갈등 해결	-행정의 집합 선택 (주민의 행정화) -행정 제도와 가이 드라인 구축	-주민 의사 통로 확 보형 -민관 협력 추구형 형
모니터링, 제재	-내부 모니터링 선 호	-내부 모니터링 선 호	-행정 주도의 모니 터링 확보	-제재, 모니터링 비 선호

<sup>31</sup> 이념형을 통한 유형화 시도는 연구자의 판단 하에 특정 주제를 둘러싼 현실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관점을 단순화 시켜 이상화한 것으로, 특정 현상을 둘러싼 개별적 현상들을 “하나의 일관된 사유상”으로 종합하여 얻어진다(Weber, 1997; 박순열, 2010에서 재인용).

	-적극적 제재 통한 내부 결속력 확보	-내부 협의 통한 제재 규칙 마련	-사업비 위주의 예산 투명성 확보	-재발 방지 차원의 사전 협약 중시
자치 조직권	-순수 민간 중심의 자치 조직 -마을법 제도와 반대	-내부 중심의 협의형 자치 조직 -마을법 제도와 찬성	-행정 주도도의 자치 조직권 형성 -마을법 제도와 찬성	-주민 주도의 자치 조직 확보 -유연한 법제도와 긍정적
중층 사업 단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화	-지역 단위의 자원 활성화	-마을 사업 일관성 확보	-마을 사업의 구체화
마을공동체 기능	-민간 주도 정치적 결사체	-지역 복지, 주민 네트워크 활성화	-행정 주도의 주민 네트워크 형성	-도시 생태 마을 조성 -민간 복지, 사회적 경제 활성화

위 내용을 종합하면, 마을공동체 주요 활동가 집단은 개별 사안을 둘러싸고 저마다 상이한 관점을 보였다. 특히 자원 운용의 개방성, 집합적 선택 장치 및 제재와 모니터링의 주체 등에 있어 다양한 시각을 나타낸다. 특히 공동체와 공동자원을 운용하는 주체가 민간 중심인지 혹은 공공 중심인지에 따라 상이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 부각된다. 이러한 구분은 마을 사업의 고질적 문제인 민관 협치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며, 궁극적으로는 마을 기획이 공공 사업인지 혹은 민간 주도의 사회 운동인지 등과 같은 논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출된 개별 유형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V. 분석결과 논의

### 1. 공동자원으로서 마을공동체

본 연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답변 되어야할 사안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획을 공동자원의 관점으로 조망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이다. 무엇보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다양한 범위 속에서 어떠한 요소들이 공동자원의 성격을 지니는지, 그리고 그 공동의 것을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 인지와 같은 전반적인 공동화 과정에 있어(Linebaugh, 2008), 마을공동체의 현실적 적실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공동자원 관점의 결합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출현된 여러 유무형의 자원이 비배제적, 감소적 성격을 가진 공동자원의 정의에 부합될 수 있다. 먼저 협의적 자원의 관점에서 볼 때, 마을 공간이나 예산 및 사업 지원금은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차원에서 토대가 마련된다.<sup>32</sup> 이에 주민은 마을공동체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누구나 사업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여기서 마을 활동의 플랫폼(platform)은 비배제적이며, 개방적인 형태로 설정된다. 이는 본 연구의 인식 유형 결과에서도 뒷받침 되듯, 지역 주민이나 마을 거주자가 생활 의제를 발굴하여 마을로 등장하였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특히 행정 수혜를 통해 마을에 등장한 유형 C 활동가에서 잘 부각되는 특성이기도 하다. 한편,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은 10명 이내의 주민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

<sup>32</sup>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 27조에 따르면 마을 공간은 자치구 나 지역별로 설치하여 운영되며, 여기서 예산 및 사업 조정권은 자치구로 이양된다.

‘사업선정심의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마을 활동에 소요되는 재정적 자원은 제한적이고, 감소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마을 사업이 종료되면, 마을 활동에 참가했던 주민은 사업 추진 실적, 정산 내역, 자체평가 등을 보고서의 형태로 의무 제출해야 되며, 이러한 점에서 서울시 마을 사업의 핵심적인 자원인 예산 자원은 지속가능성의 맥락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한편, 행정에서 독립적이거나, 유형 A와 같이 자생적인 마을 공동자원 형성을 추구하는 경우, 마을 활동에 뜻이 있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멤버십, 조합원, 출자자 등의 형태로 유무형의 공동자원을 구축한다. 이때 마을 협의체는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가입이나 후원 등의 절차를 통해 구성원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러한 점에서 마을 구성원이 되는 과정에 있어 비배제성을 보장한다. 그러나 비구성원의 경우 구성원에 비해 누릴 수 있는 혜택의 범주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볼 때, 마을 자원의 감소성에 대비하기 위한 장치가 구성원의 경계 설정을 통해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광의적 자원의 관점에서도 마을공동체 자원은 공동자원으로써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는 최현(2016), 김선필(2014)의 선행 연구에서도 확인되듯, 마을공동체의 공동자원은 비단 행정 재원이나 출자금, 공간과 같은 물리적 속성 보다,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 인력 등을 중심으로 한 공동의 삶에서 형성된다는 분석과 맥락을 함께한다(김선필, 2014; 최현 & 김선필, 2016). 본 연구에서는 전 유형의 활동가들이 마을 사업 추진 주체에 상관없이,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협의체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이는 풀뿌리 중심의 마을 사업이든 행정 중심의 사업이든, 양자 모두에 있어 마을 활동을

위한 진입 담장을 폐쇄하지않고, 마을에 익숙하지 않았던 구성원들이 유능한 마을활동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한다. 이처럼 마을의 네트워크 자원은 마을 구성원으로 하여금 단순히 근린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 문제와 의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나아가 예산 조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마을공동체 전반을 기획하는 수준으로 발돋움한다.

“처음 자치구 중간조직에서 일해볼 생각이 없느냐는 말에 무섭고 두려웠던 마음이 커요. 학부모 모임 회의를 통해서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된거라(…) 제일 어려웠던 건, 회계 자료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랑, 행정 지식을 모르면 힘들다는 점이였어요. 그래도 제가 이런걸 해야 지금 사업 신청한 주민들이 앞으로 더 등장하게 될 거 같아서 책임감을 가졌어요(…)” (활동가 7)

“마을 네트워크는 동심원을 기준으로 세 가지 발전 단계를 거쳐요. 처음이 일회성 관계인데, 서로 아무 것도 모르는 사이지만, 마을이라는 단일한 주제로 그냥 어찌다 만나게 되는 거. 그 다음이 지속적 관계 예요. 이거는 마을에서 같이 놀고 일도 하다가 서로 의지가 맞아 떨어지는 단계 예요. 이 과정을 거치면 이제는 장기적 관계로 발전되요. 이 단계는 말 그대로 가족이죠. 내 지역, 내 관심이었던 게 우리 지역, 우리 관심사로 바뀌는 거니까(…)” (활동가 10)

이처럼 공동체의 네트워크 및 인력 자원은 마을 주민들의 역량 자원(인적 자원)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특히 마을공동체 초기 단계에 행정 지원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주민간의 느슨한 수준의 네트워크가 조금씩 구성되긴 하지만, 그것이 결집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행정

지원이 끝나고 마을 체제가 순수하게 주민들에 의해 운영될 때 판단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행정 지원 기간 중에는 공동자원 형성을 위한 공동체 문화 조성에 초점을 둔다면, 행정 지원 이후에는 공동자원을 유지하고 장기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인적 자원의 중요성은 제주 가시리 마을을 사례로 공동자원과 마을만들기 전략을 전략을 고찰한 최현 외(2016)의 선행 연구를 통해서도 드러나듯, 마을 구성원들의 공동 복지(commonwealth)를 위한 초석은 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권력화(empowerment) 과정을 통해 마련된다(최현 & 김선희, 2016). 이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2012)의 핵심 3대 과제<sup>33</sup>에서도 확인 되듯, 마을 공동체는 공동의 것을 자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인력 자원이 형성 되어야한다.

“마을 활동하면서 가장 좋으면서 동시에 힘든 상황은 서울시에서 모범 사례라고 지정하고 땅을 매입해서 주는 경우 예요. 제 작년에 서울시가 방학동에 28억짜리 마을회관을 텅텅 매입해서 줬어요. 받고 나서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만들자고 합의는 했는데, 막상 뭘 해야할지, 유지비는 어떻게 감당해야할지 앞이 캄캄했어요(...) 그래서 결국 마을 밥집이랑 공동 이용 시설을 개설하고 유지를 하긴 하는데(...) 아마 저희 자치구는 이걸 어떻게 가지고 갈지 협의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탄탄한 편이고, 이 정도 기획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가 인력이 많아서 감당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활동가 26)

---

<sup>33</sup>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기본계획(2012)을 통해 마을공동체 3대 과제를 사람: 마을사람키우기, 삶: 마을살이 함께 하기, 협력: 새로운 민관협력 만들기를 핵심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마을사람 키우기의 경우 창의적 마을활동가 육성, 청년과 여성의 역량 강화 및 활용 등이 세부 전략으로 제시된다.

한편, 대다수 P표본과의 면담 과정에서 공동자원으로서 공간 자원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을활동가들이 인식하는 마을 공간은 공유의 가치를 공간적으로 설정하여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 27조 ‘마을공간의 설치, 운영’ 항목에서도 확인 되듯, 서울시는 주민 자치를 위해 마을배움터나 마을활력소 등의 마을공간을 자치구나 지역 별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여기서 마을 공간은 마을의 거점 지역으로, 사업 계획 수립부터 각종 주민 참여 등의 모든 마을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며, 마을 내 유휴 공간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을 시도할 수 있는 장소이다. 이에 마을 관련 업무, 주민 여가, 커뮤니티 모임, 작은마을도서관, 마을 창작 공간 등이 마을 공간의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공간 자원은 활동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경우 행정 지원을 통해 마련된다. 공간 자원이 마을에 미비한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자치구 차원의 중간지원조직이나 자치구생태계조성단의 인프라 구성이 초기 단계인 경우, 마을활동가들을 위한 사무 공간이나, 주민들이 자유롭게 경유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서 공간은 주로 행정의 예산을 통해 조성되는 자원으로,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가 오래되지 않았거나, 자치구 차원의 풀뿌리 시민 단체가 미비한 경우가 그러하다. 아울러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한 공간과 실제적인 공간 조성과 활용을 담당하는 자치구가 공간 활용에 대한 이해가 불일치할 경우, 공간 사용의 명목이나 예산 관리, 공간 유지비 등을 부담하는 과정에 있어 갈등과 어려움이 나타난다.



이처럼 마을공동체 운영에 있어 공간 자원을 조성,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안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주로 기금 조성의 어려움이나 서울시 공간 특성상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의 여파로 인한 유지비 관리가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2016년부터 ‘공유공간 발굴사업’<sup>34</sup>을 실시하여, 서울시내 유휴공간 총 51개를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나, 아직 자치구 차원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용되기에는 정책이 보편적으로 확대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 확보 전략은 전대욱(2017)의 논의에서도 확인되듯, 추후 ‘지역공동체 자산화 전략(community ownership and assetization strategy)’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행정자치부가 「2016년 마을기업 육성 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지역 유휴 공간을 자산화하여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마을 기업을 대표적인 공동체 사업으로 꼽은 만큼, 공간 자원에 대한 논의와 현실적 지원 방안이 보다 더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 2. 이론적 관점의 유용성

본 연구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주요 활동가들이 마을공동체 기획을 인식하는데 있어 다차원적인 관점이 존재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엘리너 오스트롬의 8가지 자원 관리 규칙 및 마을의 4가지 핵심적 기능을 이론적

---

<sup>34</sup> 서울시는 2016년부터 원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시 소유 공간들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공유공간 발굴사업'을 실시하였다. 이에 시 전역 2089 개의 공간을 전수조사해 이 중 시민과 공유할 만한 공간 51 개소를 최종 발굴하였다. 대표적으로 폐 공간이던 관악구 신림 2 가압장과 서대문구 천연가압장은 북카페·전시공간 등을 갖춘 '마을활력소'로, 영등포 수도사업소는 '서남권 돌봄종사자지원센터'로, 종로구 명륜파출소는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전환되었거나 과정에 있다.

근거로 삼아 인식 유형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간 오스트롬이 제기하였던 자치적 자원관리론의 핵심은 인간의 이익 추구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 국가나 시장이라는 기존의 이분법적 해결책에 예속되지 않고, 자치적 관리라는 제3의 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있다. 이에 자원 관리 원칙들이 구비될 때 공동체와 공동 자원이 성공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고 권고되는 것이다(Ostrom, 2015).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시의성이 높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오스트롬의 관점을 적용해보고, 주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인식 유형화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 1) 자치적 거버넌스로서의 마을의 가능성

도출된 4 가지 유형을 이론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서울시 마을공동체 주요 행위자들은 8 가지 제도 원리에 입각하여 상이한 인식 유형을 보였다. 아울러 김정돈 외(2011)의 지적대로, 개별 제도 원칙들이 몇 가지만 혹은 동시 다발적으로 갖춰져야 하는지, 아니면 제도들이 시간 의존적(time-dependent), 상황 의존적(situation-dependent)인지 등과 같은 다차원적 관점에서(김정돈 & 류석진, 2011) 조망할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형 간 일관된 규칙이 도출되기 보다, 개별적인 독립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된다<sup>3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형 C와 여타의 유형이 모두 음의 상관 관계를 지닌다는 정보로 미루어 볼 때, 유형 C와 타 유형을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명확한 일관성이 포착되며, 이는 마을공동체 행위 주체 및 공동자원 관리 주체를 어디에 설정하는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유형을 이론적 관점에서 재조명해보면 다음과

---

<sup>35</sup> Q 분석 결과 유형 간 상관 관계는 -0.5573부터 0.3610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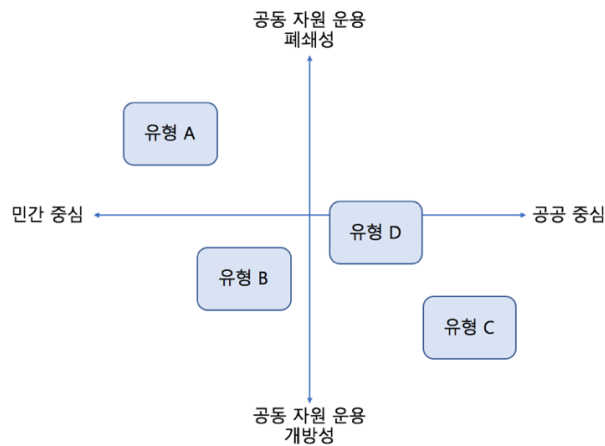
같은 시사점이 도출된다. 우선 첫째, 공동체 및 공동자원의 운용 주체를 누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자원의 개방성에 상이한 태도를 보인다. 둘째, 공동체와 공동자원을 둘러싼 갈등 해결 과정에 있어 내부 협의체가 중요한지 혹은 외부 개입의 영향력이 중요한지에 따라, 집합적 선택 장치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와 공동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은 전 유형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유형 간 모니터링의 주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제재 국면의 양상 또한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도식화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sup>36</sup> 우선 <그림 5-1>을 통해 공동 자원 운용에 있어 개방성의 정도와 민간과 공공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교차하여 살펴보면, 자원 운용에 있어서는 유형 C>유형 B>유형 D>유형A의 순으로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곧 마을공동체 활동의 주체를 민간 중심으로 인식할수록 공동 자원의 경계에 있어 배타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본 그림에서는 민간 중심적인 유형 A와 행정 중심적인 유형 C가 공동 자원의 개방성에 있어 극명하게 대조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Blakely&Snyder(1997)의 선행 연구<sup>37</sup>에서 확인 되듯, 동질적 가치를 공유하는 사적 공동체일수록 폐쇄적인 공유 환경을 형성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유형 A 활동가 집단은 그러한 점에서 공동체 내부의 사적 영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발전 전략을 채택하였다는

<sup>36</sup> 개별 유형 간 특성을 도식화하여 종합한 그림은 제 4장의 <표 4-3> '개별 진술문에 대한 인식 유형 별 점수에서 제시된 요인이 점수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sup>37</sup> 도시화 이후 공동체는 구성원 간 유사성을 더욱 공유(sharing)하는 공동체로 변모하였으며, 여기서 공유는 영역의 공유(shared territory), 가치의 공유(shared values), 지원구조의 공유(shared support structures), 운명의 공유(shared destiny) 등을 기반으로 한다(Blakely & Snyder, 1997; Salcedo & Torres, 2004).

점에서 타 유형과 차이를 보인다. 이는 타 유형에 비해 경계에 있어 배타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B와 D 유형의 경우 공동체 사업의 행정적 요소가 강한 유형 C에 비해서는 경계의 배타성이 확보되었지만, 두 인식 유형의 요인이 점수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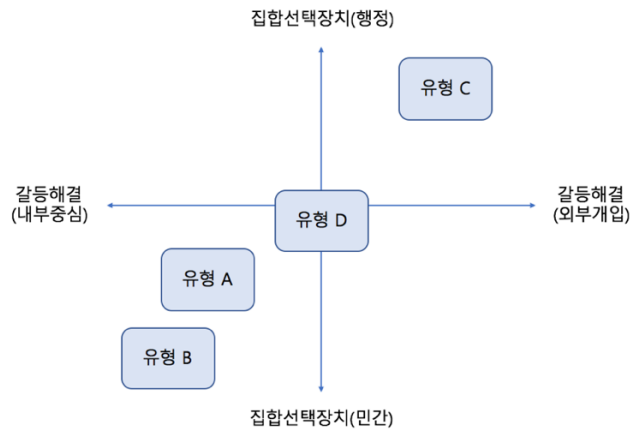
<그림 V-1> 유형 간 공동 자원 운용의 개방성

이처럼 공동 자원 운용의 개방성이라는 지표만 놓고 봤을 때, 서울시 마을 사업 당국은 새로운 주민의 등장이라는 초기 목표를 어떻게 지속시킬지 고민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가령, 불특정 주민 간 활발한 교류를 담보하는 마을 사업과 특정 구성원만이 참여하는 경계성을 지닌 사업의 장·단점을 면밀히 고려해보고, 어떤 영역의 마을 활동에서 폐쇄적 방식이 더 적합한지, 혹은 지역 주민의 자유로운 참여가 가능한 개방형 방식이 적합한지 등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이 공익적 사업임을 감안할 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기존 마을 활동에서

발굴되고 육성된 활동가 주체들이 새롭게 등장한 신규 참여 주체와 긴밀한 협치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는 민간과 공공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안으로 개별 사업을 통해 1차적으로 등장한 기성 주체들이 신규 주체와 점대 점으로 연결되어 선으로, 나아가 관계망으로 확장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조가 설계되어야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원 관리의 패러다임에서 자원 접근의 배타성 확보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기능으로 작동하기도 한다(Eizenberg, 2012; Ostrom, 2015). 이에 구성원 간 경계에 있어 새로운 주체의 등장을 위한 참여 단위의 확보가 중요하지만, 마을 공동자원에 있어서는 자원이 남용되지 않고 자생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그림 5-2>는 공동체 및 공동자원을 둘러싼 갈등 해결 과정에 있어 내부 협의체의 결속 정도와 집합 선택 장치의 주체 여부를 교차하여 살펴본 도표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내부 협의체를 가장 중시한 유형 B를 시작으로 유형 A, D, C의 순으로 집합 선택 장치가 민간 영역에 위치되는 경향을 보인다. 유형 B의 경우 16번 진술문(마을 발생 갈등 해결 위한 내부 협의체 반드시 있어야)이 요인가가 +4로 기록되면서, 여타 유형에 비해 내부적 차원의 협의체 마련을 가장 중시한 유형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8번 진술문(마을 중요 의제 결정 과정에 마을 구성원이 반드시 참여 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의 경우 요인가가 -3점으로 나타나면서, 공동 자원 운용과 관련된 내부적 협의의 밀도가 민간중심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내부적 협의는 제도의 영향을 받는 구성원들이 실행 규칙을 만들고 수정하는 과정에도 동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민의 의사가 마을 의제에 공식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문호가 얼마나 개방적인지의 여부와 직결된다. 그러한 관점에서 공동체의 내부 결속을 강조하는 유형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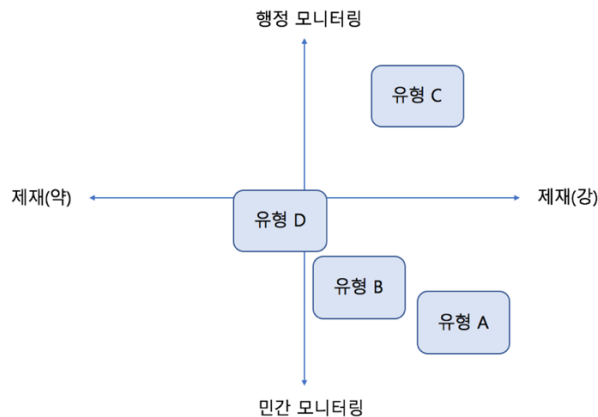
또한 갈등 해결 및 집합 선택 장치가 내부 및 민간 중심적으로 구성되며, 두 유형에 비해 민관 협력을 중시하는 유형 D나, 행정 주도의 마을 사업을 중요시하는 유형 C는 그 반대에 위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V-2> 유형 간 갈등해결 및 집합선택 장치

다음으로 유형 간 제재와 모니터링의 정도를 살펴보면 <그림 5-3>와 같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네 유형의 모든 활동가들이 공동체 및 공동자원의 운용에 있어 제재의 필요성에 긍정한다. 이는 전술한 <표 4-5>의 유형 간 합의적 진술문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듯, 모든 유형이 4번 진술문(마을 내부 공동자원을 활용하는데 있어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에 요인가 +2점이 배치된 점을 토대로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경계의 문제, 갈등 해결 및 집합 선택 장치의 경우 공동체 활동의 주체에 따라 일정 정도 유형 간 상관 관계를 지녔지만, 마을 공동 자원 운용에 있어 제재의 정도는 모니터링 주체가 민간이나 공공이냐의 여부와 큰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제재의 강도에 있어서는 유형 A> C> B> D의 순으로 정도가 강하였으며,

모니터링의 주체는 앞서 살펴본 마을공동체 활동 주체와 대체적으로 동일하였다.



<그림 V-3> 유형 간 제재 및 모니터링 비교

제재와 모니터링에 있어 주목할만한 점은, 2017년 부로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추가 개정하여, 마을 활동과 관련된 기금 운용에 보다 더 엄격한 관점이 적용되었다(서울시 2017). 이는 제재의 강도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인식 수준을 보여준 유형 C에서도 확인되었다. 가령 2017년 2기 사업부터는 기존 심사를 1차 심사와 2차심사로 구분하여, 1차는 행정과 전문가의 일방적인 심사 방식을 견제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심사에 참여하고, 서면 평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현장 심사가 추가되었고, 주민 제안자 50%, 전문심사위원 30%, 공무원 20% 등의 비율이 합산되는 채점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아울러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였다. 한편, 새로이 추가된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추가 설치하여,

10명 이내(민간 50% 이상 구성)의 마을 당국국 전문가들이 과반 찬성 형태로 심사를 진행한다. 이 때 현년도 마을 활동에 참가하는 마을사업지기는 제외함으로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서울시, 2017).

한편, 민간 차원의 모니터링 구조를 확보한 유형의 경우, 대개 자치적인 협의체를 통해 공동체와 자원을 관리하고, 공공의 지원은 재정적인 도움이 불가피한 순간에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이에 자치구 주민제안사업을 통해 신청하는 공모 사업을 제외하고, 공공 차원의 지원이나 모니터링 및 제재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에 자생 가능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로 구성원 간의 출자와 분담금 납부를 통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행정 중심의 모니터링은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잣대를 바탕으로 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더라도, 예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이에 민간 주도의 마을의 경우 지속가능성에 있어 제재나 모니터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동시에, 성과 도출을 위한 제재 보다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마을의 기반 조성을 위한 느슨한 차원의 규칙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유형은 공동자원 운용의 개방성, 갈등 해결 영역에 따른 집합적 선택 장치의 주체 및 제재와 모니터링의 주체 등에 있어 유효한 시사점을 제시하며, 이를 규정하는 것은 결국 마을공동체와 공동자원을 운용하는 주체가 민간 중심인지 혹은 공공 중심인지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마을 운용을 둘러싼 주체 설정의 문제는, 그간 마을 사업의 고질적 문제라 할 수 있는 민관 협치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며, 궁극적으로 마을공동체가 공공 사업인지, 민간 주도의 사회 운동인지 등과 같은 논쟁으로 확장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관 협치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한다.

우선 마을공동체의 부상은 공공이나 민간 중심의 기성 위기 관리 체제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획기적인 방법으로 유용하지 못했고,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등장한 것이다. 따라서 마을공동체 전략으로서 공동자원은 공공의 정부보조금(grant) 중심의 전략이나, 시장의 상품화(commodification) 전략이 아닌, 비재정적인 형태의 자원을 우선적으로 구축해야한다. 이에 마을 사업이 보조금 사업이라는 선입견과 행정의 포섭으로부터 탈피하여, 네트워크, 민관 협력 협의체, 공동자원 관리 규칙 등과 같은 인프라 중심의 광의적 마을 자원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 사업과 관련된 법제화 작업이 중요한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 가령 영국의 경우 2011년 「지역주의법(Localism Act)」을 제정하여 지역공동체 소유, 관리 제도(community ownership and management)를 도입하였다. 이는 지역성(locality)에 입각한 자산 이전을 통해 공동자원을 형성하고, 자조적 방식으로 지역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전대욱, 2017). 긍정적인 면은, 유형 A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 모두에서 21번 진술문(마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마을 관련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에 양의 요인가를 기록하면서, 마을활동가 집단에서도 마을 법 제정<sup>38</sup>에 관한 담론이 긍정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

<sup>38</sup> 현재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을 대표로 하여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하는 “마을공동체기본법”을 2017년 2월 발의되었다. 특히, 마을지원 사업과 활동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마을공동체기금을 운영하게 하는 등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었다.

있었다. 따라서 서울시 마을공동체의 공동자원 담론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자산 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 공동 경험의 누적과 같은 토대 마련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2) 마을의 기능적 유용성

한편, 마을공동체 기능에 입각한 유형 별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전 유형의 합의적 진술문인 28번 진술문(마을 기반 사회적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의 단점을 극복하는 것을 불가능)이 네 유형 모두 중립에 수렴하면서, 마을의 경제적 기능이 마을 기능이 핵심이라는 점에 중립적인 의견을 보였다. 관련하여 대표적인 사후 면담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실제 마을 삶을 산다고 하는 우리 삶을 봐도 이미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다 촘촘하게 들어와 있는데, 자립 가능한 마을 경제를 만드는 것 자체가 환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이니 사회적 기업이니 하는 것들이 즐겁자고 하는거라기 보다, 어떻게 보면 대항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회적 경제가 요즘처럼 정치적 중립을 요구 받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활동가 12)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 마을 내에서 유리 공예나 퀼트 사업 같은 걸 통해서 커뮤니티 모임으로 시작한 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 가능하다든가 직업으로 삼는다든가 그런 건 현실적으로 힘든 것 같아요.” (활동가 28)

“종로에서 지난해에 대대적으로 양봉 사업을 크게 시행했는데 1년 동안 거둔 수입이 2

천 만원이 채 안돼요. 근데 이게 돈벌이로 생각하면 얼마 안되지만, 지역에서 주민들이 발굴해내서 일궈낸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또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결국 마을에서 생기는 경제적 수입이 많냐 적냐는 별로 관심이 아닌거 예요. 지역 자원을 발굴해서 마을 사업을 했다는 거 자체에 의미가 있는거지.”(활동가 9)

“마을 안에서 경제가 다 해결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마을 안에 직장 생활이 다 있어야 돼요. 마을활동가라고 해도 낮에는 거주지에서 한참 떨어진 직장에 새벽부터 출근하고, 밤에 와서 모임에 참가하는데(...) 그래서 극단적으로 볼 때 직장 생활의 분리를 거부하고 마을 안에서 모든걸 해결하려고 할 때 경제적인 자립도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활동가 29)

이처럼 마을공동체 내부의 경제 활동은 임노동 규범에 입각한 활동이기 보다, 지역 단위에서 상호 호혜적인 초기 관계망을 형성하고, 공동의 경험 그 자체를 축적하는 등, 마을만들기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동된다. 이는 공공 경제, 시장경제라는 두 축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마을 경제와 같은 사회적(호혜) 경제의 위상은 기성 경제 체제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다수 마을 경제 활동의 경우,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공공 사업으로서 확장 가능성을 탐색하거나, 노동 시장에 진출하지 않은 여성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먹거리 생산, 문화 및 취미 생활에 있어 공동 생산과 공동 소비 등을 소규모 단위로 실천하는 양상으로 전개된다. 무엇보다 현재 마을활동가들의 경우, 시장 경제에서 임금을 획득하고, 이를 마을 경제에 투입하여 수지 구조를 유지하는 내생적 한계로 인해, 순수한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데 어려움이 노정된다. 이에

마을 경제는 시장의 영역이 아닌 일상 생활의 영역에서 소소한 호혜 연대망을 구성하는 정도로 기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제언이 제시될 수 있다. 우선, 마을 경제는 궁극적으로는 자립 구조를 갖춘 시스템으로 성장해야한다. 그러나, 여기서 자립의 기준을 경제적 자립 혹은 수입 창출로 국한시킬 경우, 기성 경제 체제와 논리적 구성상 차별성을 지닐 수 없다. 이에 마을 경제 주체 간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것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통해 마을 경제를 최대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설계되어야 한다. 이에 구성원들의 마을 경제 이용 빈도를 늘리고, 최소한 지역 사회 내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의 경제를 발휘할 수 있을 만큼의 구성원 간, 마을 기업 간 연결망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마을 경제는 공공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근거로 비용 편익적 관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자생적인 수익 창출 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장기적 목표로 하되, 공공과 민간의 지속적 투자에 비해 마을 경제의 재정적 회수율이 저조하다면, 지역 내 마을 경제는 중단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마을 경제에 직, 간접적으로 간여하는 공공과 민간은, 박소연 외(2013)의 선행 연구에서도 제시되듯이, 부동산 가치 상승, 업종 변경 등과 같은 부수적 파급 효과에 대비할 수 있는 마을 경제 인프라를 제공하고, 그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sup>39</sup>

한편, 현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마을 기금 사업’은

---

<sup>39</sup> 마을 경제를 위시로 한 사회적 경제는 지난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양적인 성장을 거쳤지만, 현실적 위상에 대한 의문과 비판 또한 존재한다. 이에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변형성 상임대표는 지난 2017년 6월 28일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 10주년 기념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법인격 신설, 사회적 가치 평가와 공공조달 참여의 확대, 민관 거버넌스 재 구축 등의 혁신 전략을 제시하였다.

마을 공유 자산 확보를 위한 중요 전략으로 고려될 수 있다. 서울시(2016)에 따르면, 마을 기금은 “동 단위 보편적 생활 의제 해결을 추구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가 함께 기금을 모으고, 배분하는 경험을 통해 호혜적인 주민 관계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는 그간 마을 경제 구축이라는 맥락에서 ‘지역 밀착형 마을 기금’, ‘서울시 자조금융 연대 제안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온 마을 자산화 전략의 일환이다. 마을 기금 전략의 기본 골격을 살펴 보면, 동주민센터와 주민운영위원회 및 기부금(컨설팅) 단체가 결합하여, 주민센터는 초기 주민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 사회 주요 기부 가능자에 대한 정보를 구축한다. 주민 운영 위원회의 경우 마을 기금 사업의 핵심적 단위로, 주민 기금과 관련된 의제를 개발하고, 모금 및 모금의 배분 전략을 수립한다. 한편 기부금 단체의 경우 모금, 배분의 전문가로 주민 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관련 법률, 행정적 업무를 담당한다. 이처럼 민관 연합체로 작동되는 기금화 전략은, 마을공동체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마을 내의 유무형의 금융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기에, 현실적인 차원에서 마을의 공동자원화 전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sup>40)</sup>

아울러 마을공동체 내부의 노동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대다수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 종사자의 경우, 자원 봉사자와 임금 노동자의 애매한 경계에 머물러 있어, 인력 양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경란, 2010). 또한 대다수 마을 활동가들은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마을 노동을 일삼고 있어, 마을 활동이 개별적인 생계 수단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마을 활동을 일자리의 개념으로 접근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

<sup>40)</sup> 현재 약 22개 자치구 동 단위에서 마을 기금 전략이 추진중에 있으며, 주민센터와 주민운영위원회, 복지관 간의 3자 조합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2016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마을기금 사례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산 낭비라는 사회적 비판, 마을공동체를 제외한 여타 사회 정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네 인식 유형 모두 정치·사회 관련 진술문에서 유의미한 요인가를 보였다. 가령 A 유형의 경우 29번 진술문(마을공동체 활용 주민 생활 정치 참여가 오늘날 대의 민주주의 보다 우월), B의 경우 31번(주민 관계 형성, 지역 네트워크 활발하게 하는 것이 마을의 가장 큰 장점), 32번(계층, 나이, 정치 성향 선입견 없이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C 유형 또한 31번 진술문의 주요 동의 진술문으로 도출되었다. 우선 마을 생활 정치를 강조하는 내용과 관련된 사후 면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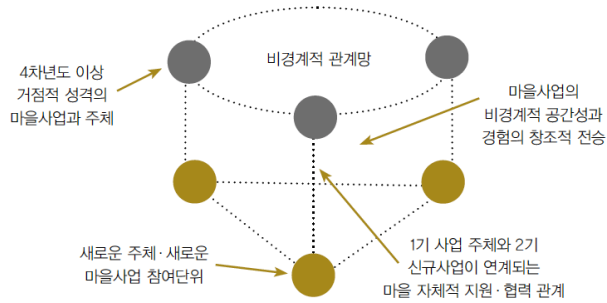
“마을에서 자꾸 정치를 얘기하는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정치에서 주민은 선거만 한하지, 대의제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을로 오는게 아  
닌가(…)”(활동가 12)

“마을 정치는 다르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처럼 마을 활동을 기획하고 사업비를 마련  
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데 있어요. 이게 옛날에 새마을 운동처럼 행정이  
무슨 주민 교육하듯이 하는게 아니라, 주민이 자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거죠. 마을에  
서 계속 주민주도성을 주장하는게 거기 있는 거구(…)”(활동가 8)

이와 같은 주민의 생활 자치 능력은 현재 서울시가 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표와 맞닿아있다. 가령 서울시는 1기 사업의 목표를 ‘주민의 등장’,  
2기 사업은 주민을 ‘지역의 정치적 주체’로, 3기 사업을 ‘주민주도의 지방자치  
구현’으로 명시하듯(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5), 지역의 핵심적인

주체로 주민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마을을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 통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로드맵은 장기적으로 주민의 정치력이 작금의 대의민주주의 체계와의 조화 혹은 대체를 이룰 수 있도록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 1조에서 언급되듯이, 마을공동체의 목적은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과 궤를 함께한다. 결국 공공 사업적 측면에서 볼 때, 행정은 새로운 주민을 지속적으로 등장시킬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지속하고, 민과 관은 상호 배타적인 관계 설정이 아닌, 상호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마을공동체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능인 네트워크 또한 상술한 정치 참여와 결부할 때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마을의 네트워킹 기능은 구성원의 외연 확장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특히 특정 주민들이 독점적으로 출현하여 마을 활동을 지속해 나가는 방식은 불특정 주민의 등장 기회를 막고, 신규 구성원들의 마을 진입을 불가능 하도록 경계를 형성할 여지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연구원(2016)이 제시한 바와 같이, 1, 2기 마을 사업 간 연계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가령 초기 주민 제안 사업의 경우, 행정의 전폭적인 협력으로 등에 업고 사업이 발전되었다면, 2기부터는 중간지원조직과 행정이 한발 물러나, 1기 마을 사업의 경험자들과 2기의 초기 진입자 간 멘토·멘티의 관계를 형성해야한다. 이는 민간의 시각에서 민간을 재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행정을 점차 분리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닐 수 있다.



<그림 V-4> 마을 사업의 연계 구조

이처럼 신규 주민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과정이 민간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관이 점차적으로 분리되면서 주민 중심의 네트워크는 보다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다. 이는 김세용 외(2013)가 지적하듯, 현재 주민 공모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특정 이해 관계를 대표하는 주민 엘리트가 사업을 독점하며, 이는 주민 간 누가 더 행정의 언어에 친숙해지고, 행정 수행 능력을 키우는 지로 귀결되는 경쟁적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마을공동체 사업은 마을 내·외부로 주변화된 주민 주체들을 포용하고, 마을 내부로 진입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뒷받침 되어야만, 구성원 운용의 운신 폭이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 3섹터 복지 전략으로서의 가능성

그간 마을공동체를 위시로 한 3섹터 전략은 공공 복지를 보완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에 마을공동체와 같은 시민사회 영역은 거시적 관점에서 복지국가의 비제도적(non-institutional) 토대를 강화하고(Gidron, Kramer, & Salamon, 1992), 미시적으로는 주민 조직화를



통해 지역사회조직(communitry organization)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을공동체는 공공과 민간의 한정된 복지 공급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복지체제로 기능할 수 있고, 무엇보다 복지 총량을 늘려 복지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마을활동가들은 마을과 복지를 연계하는데 있어, 복지를 위해 마을을 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복지 욕구가 해소되는 경로적 사고(pathway thinking)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래 <표 5-1>과 같이 복지 관련 진술문의 요인가를 살펴보면, 유형 D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은 복지를 마을공동체 기능의 핵심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아울러 기존 복지(국가, 민간 복지)와 마을을 매개로 한 복지의 영향력을 비교하는데 있어, 마을 복지의 유용성에 강한 동의를 보인 유형 D를 제외하고 모두 중립 혹은 반대 태도를 보였다.

<표 V-1> 복지 관련 진술문 유형별 요인가

마을공동체 기능 중 복지 관련 진술문	유형			
	A	B	C	D
나는 마을공동체의 핵심적인 기능이 구성원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	-1	-2	0	3
나는 마을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 육아나 돌봄 등의 복지가, 국가나 시장을 통한 복지 서비스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0	0	0	3
나는 마을공동체가 빈곤층, 장애인, 아동 등과 같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유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	-4	-2	2
나는 마을공동체 내부의 자발적인 복지가 복지국가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0	0	1	-4

유형 D가 타 유형에 비해 복지 문항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원인은 상술한 사후 면담 내용에서도 거론되듯이, 마을의 복지적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될 수밖에 없던 지역적 특성에 의거한다. 가령 민간복지연합체가 오랫동안

작동해왔던 26번 활동가의 지역(도봉구)은, 마을과 같은 비제도적 영역에서 복지적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사전에 파악하여 선점하였고, 마을 활동 중 공동육아 프로그램이 가장 활발했던 1번 활동가(강동구) 지역의 경우, 별개로 복지 사업을 추진한 건 아니지만, 주민 제안 사업의 수요가 공동육아에 치중되면서 복지에 대한 인식이 자연스럽게 제고되었다. 아울러 25번 활동가(동대문)의 경우, 자녀를 둔 3,40대 주부 모임을 마을 활동의 핵심 주체로 보고, 이에 여성과 아동을 마을 사업의 수혜자로 인식하면서, 복지를 매개로 한 마을 전략에 긍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이처럼 유형 D는 그간 학술적, 행정적 차원에서 논의되었던 ‘복지 마을만들기’, ‘마을지향복지전략’ 등의 대표적인 실례라 할 수 있다(강병노 & 유영림, 2015; 서울시복지재단, 2013; 이영범,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을 매개로 한 복지를 기존 복지와 동일 선상에서 이해하거나, 마을 복지를 기성(pre-existing) 복지 체계의 확장, 혹은 보충적 차원으로 종속시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는 곧 마을의 언어로 이해되는 복지와 일반론적인 의미의 복지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우선 보수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성 복지 프로그램은 국민 국가의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한 수급권(pensionable right) 중심의 제도이며, 생활 영역에 맞닿아있는 실천적 사회 사업 또한 지역 복지관이 프로그램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적 형태로 작동한다. 이처럼 복지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공공의 보장적 형태를 바탕으로 하며(Giddens, 2001), 공공 조직의 논리를 내재할 수 밖에 없다(김형용, 2016).

그간 서구의 경험을 통해 얻은 주지의 사실은, 복지 구현의 핵심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적 영역이 뒷받침되고, 이는 복지 정책의 제도화를 통해

실현된다. 그러나 마을을 매개하는 복지는 제도 밖 영역에서 구축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는 그간의 지역복지 실천 모델과 같은 결과 중심적(result oriented) 평가가 아닌, 마을 만들기 과정에서 형성되는 신뢰, 협력, 공동체성 등과 같은 비가시적 사회 자본(social capital)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마을 복지는 공공 중심의 지원이 일보 후퇴한 상태에서, 민간 중심의 호혜 및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복지국가와 마을 체제를 비교한 김형용(2016)의 연구에서 주장되듯이, 마을 복지는 “국가로부터의 의존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를 견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맥을 함께한다.

“마을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이웃을 만드는 사업이고, 복지는 그 과정에서 해소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꼭 복지를 위해서 마을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복지 이슈들이 완전히 배제되는 건 아니고(…) (활동가 3)

“저는 도시에서 필요한 자원이 의식주랑 에너지까지 해서 4대 자원이라고 봐요. 근데 이게 다 생존이랑 연관된 자원임에도, 하나도 빠짐 없이 다 상품화 되었잖아요. 그래서 마을은 이 상품화된 자원들을 되돌려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재미있게도, 서마중(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가면 마을 자원 현황이 있는데, 강남 3구에는 마을 자원이 눈에 띄게 없어요. 이게 뭐냐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마을이 아니라도 아까 말한 자원을 다 얻을 수 있잖아요. 마을을 할 필요가 없는거죠(…)” (활동가 12)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획은 제도적, 비제도적 영역 모두를 활용하여 마을 복지를 구축한다. 우선 비제도적 영역의 경우, 주민

조직화의 일환으로 복지의 범주를 넓게 인식한다. 이에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직접적 복지를 제공하는 고전적 기능이 아닌, 주민 간 커뮤니티 모임 빈도를 늘려 주민 네트워크를 회복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사업 참여를 근간으로 한 지역 내 협력망 구축 등과 같은 공동체성 회복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처럼 포괄적으로 볼 때 사회 자본(social capital) 축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마을 복지 전략은 효과성 평가(effectiveness evaluation)의 측면에서 볼 때, 제도적 복지와 동일선상에서 비교될 수 없지만, 지역 사회 조직의 측면에서는 공동체 활동의 초기 토대를 형성하고, 지역 구성원들의 복지감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닐 수 있다.

한편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2015년부터 시행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는 마을공동체를 활용한 대표적인 복지 전략이다. 찾동 사업은 기존 동주민센터가 주민 일반 사무나 행정 업무 중심에 치중했다면, 여기에 마을공동체적 관점을 결합하여 주민 복지, 건강, 공공행정, 주민 자치 등을 목표로 시행되는 동 중심의 미시적 공공복지전달체계이다(남기철, 2015). 이 과정에서 공공 복지 인력이 2배 이상 확충되는 등<sup>41</sup>, 기존의 공공 영역과 마을을 결합하면서 대표적인 민관 협력형 전달체계를 형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활동가 14번, 21번이 찾동에 종사중인 마을 활동가였으며, 면담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sup>41</sup> 서울시(2016)에 따르면, 동주민 센터가 1년간 추진되면서 452명의 사회복지공무원, 106명의 방문간호사가 신규 채용되었으며, 132,210명의 주민들이 우리동네주민관 활동, 복지 및 건강 대상 민원을 방문하고, 12,281건의 빈곤위기가정 신규 발굴, 7,209명의 치매 우울 노인 발굴, 1,334건의 복합적 지속관리 지원 사례 누적, 7,557명의 마을 계획 투표 참여 주민, 235건의 투표 결정 의제 수, 14개 동이 주민 주도로 마을 계획을 직접 수립하였다.

“요즘 활동가들 사이에서 마을에서는 왜 노동을 이야기 하지않고, 또 노동 측에서는 왜 마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냐고 말이 나와요. 저는 마을 복지가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노동이란 복지는 밀접하니까(…) 예를 들어서 취약 계층 중 한 분이 봉어 빵 장사를 하고 싶는데 기계가 없다, 그러면 공공 차원에서 기계만 대여해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럴 때 노동과 복지 두가지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다고 봐요. 민간에서 이런 수요들이 많아져서 올해부터 마을 부서 내에 노동권익센터가 생길 예정이에요.” (활동가 21)

“광진구 경우에 어린이 대공원이 있어서 그런지 마을에서 아동을 많이 이야기해요(…) 한 사례로 어르신들이 아이들한테 동화구연을 해주는 모임이 있었어요. 이 분들이 마을 사업 이전까지는 자원 봉사 형태로 쪽 활동을 하다가, 마을 사업이 안착되고 나서는 사업 신청을 해서 협동조합화 한거죠. 그래서 이제는 미미하긴 하지만 소정의 활동비가 나와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찾아다니면서 동극을 하는데, 기존에 비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실비가 나오니까 참여율도 높아지고,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공연 횟수가 늘어나는 거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활동가 14)

이처럼 제도권 내에서 구현되는 마을 복지의 경우, 위의 사례와 같이 절차는 공공의 절차를 따르되, 내용과 형식은 민간 영역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사업화’라는 공공의 장점과, ‘자율성’이라는 민간의 장점이 합쳐진 것이다. 이는 복지 서비스의 제공 주체나 전달 체계의 방법론적 측면에 있어, 공공의 독주를 우려한 민간 복지계의 의지가 제도권 속에 용이하게 관철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찾동 사업이 기존 복지생태계나 거버넌스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민간복지 실무자 또한 적지 않은

실정이다(남기철,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 채 경과되지 않은 찾동 사업이 제도권 밖의 사각지대 해소라는 초기의 목적을 실현하고, 또 다른 공공 영역의 비대화가 되지 않도록, 민간의 견제 조치가 잘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는 이론적 자원에서 전술한 Pestoff(1998)의 복지 삼각형 모델에 의거하여서 논의될 수 있다. 국가와 시장, 그리고 공동체를 기준으로 공공과 민관, 영리와 비영리, 공식과 비공식이라는 세 가지 축을 제시한 <그림 2-1>에 따라, 현재 서울시 마을 복지 전략은 비영리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비공식적 영역에서의 복지 및 비공식과 공식적 영역이 결합된 형태의 복지가 모두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은 대안적 복지 프로그램, 그리고 3 섹터 복지 전략으로서 유효한 의의를 지닐 수 있다. 특히 제도권 복지에서 공급되기 어려운 복지 필요(need)를 지역 차원에서 발굴하고, 순환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주민과 마을 플랫폼의 상호 의존성을 토대로 한다. 즉, 마을을 매개로 한 복지는 공적 영역의 고착성과 민간 영역의 창의성이 대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보적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민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술한 바와 같이, 마을을 매개로 한 복지는 공공 복지로 편입되는 것이 아닌, 어디까지나 상호 독립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마을 복지가 민간에서 기획되어 민간에서 조성되고, 민간에서 완성되는 민간 지역조직화의 원리에 근거한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 VI. 결론

### 1. 연구 요약

본 연구는 마을공동체와 같은 도시 사회 전략 또한 공동자원의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필요성을 수용하여,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획의 핵심 주체인 마을활동가들의 주관적 인식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마을 활동가들이 마을 사업을 인식하는데 있어 다차원적인 관점이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였고, 엘리너 오스트롬의 공동자원론 및 마을공동체의 기능을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하여 Q 방법론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시 마을공동체 주요 활동가들이 인식하는 마을은 총 네 가지 인식 유형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자치 결사체 중시형’, ‘포용적 협의체 중시형’, ‘행정 거버넌스 중시형’, ‘대안 가치 중시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네 유형의 총 설명력은 60%이며, 전체 30명의 P 표본 중 각 유형 별로 9명, 8명, 7명, 3명으로 유형화 되었으며, 3명의 활동가는 어떠한 유형에도 속하지 않았다. 첫번째 유형인 ‘자치 결사체 중시형’은, 지속 가능성과 자생성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운용을 지향한다. 이에 공동체와 공동자원의 경계 설정에 있어 내부 활동가들의 이해 관계를 중시했으며, 행정과의 협력 보다는, 내생적인 전략을 중시했다. 이에 공동 자원의 자립성 확보를 위한 내부 모니터링과 제재 장치를 갖추어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풀뿌리 시민 역량을 토대로 한 공동체의 정치적 역량을 중요시하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두번째 유형인 ‘포용적 협의체 중시형’은 내부 협의체를 통한 공동체 운용을 중시한 집단이다. 이에 집합적 선택 및 자치 과정에 있어 외부의 개입 없는

독립적인 내부 협의 역량을 강조한다. 아울러 마을의 복지적 기능을 긍정하고, 구성원의 다양성 및 네트워크 자원을 활발히 구축하는 등 포용적인 공동체 운용 원리를 채택했다. 세번째 유형인 ‘행정 거버넌스 중시형’은 마을공동체 사업에 있어 행정의 역량을 긍정한다. 이에 주민 역량의 성장을 행정 역량과 동일시하고, 행정의 추진력과 사업 확장성을 마을의 성공 여부로 판단한다. 본 유형은 공동체와 공동자원을 개방적으로 운영하고, 공동체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 전문적이고 공정한 외부 개입을 내부 협의보다 신뢰하였다. 이에 모니터링과 제재의 주체 설정에 있어서 내부 협의체 보다 외부(행정)를 더 신뢰하는 태도를 보였다. 아울러 주민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하였고, 마을 사업의 중층적 확장 및 제도화를 지지하였다. 마지막 유형인 ‘대안 가치 중시형’은 마을공동체의 생태, 복지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활용하는 집단이다. 이에 마을 내부의 지역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적 사업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구비한다. 공동체 운용 원리에 있어서는 개방적 전략을 취했고, 구성원의 제재 조치에 있어서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종합해보면, 네 유형의 서울시 마을활동가들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공공 사업으로 인식하는지, 혹은 민간 활동으로 인식하는지와 같은 주체 설정에 따라 공동체 운용에 있어 상이한 관점을 나타냈다. 특히 공동자원 운용의 개방성, 갈등 해결 영역에 따른 집합적 선택 장치, 그리고 제재와 모니터링 국면에 나타난 다양한 인식 간 자치 공동체 모델이 다양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아울러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은 제 3섹터 복지 전략으로서 유용성을 지진다. 최근 서울시에 마을공동체는 여러 비제도적 민간 복지와 더불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같은 민관 협력의 복지 모델을 구축 중에 있다.



이처럼 마을을 매개로 한 복지 사업은 일방적인 공공 복지의 확대가 아닌, 공공의 지원 능력과 민간의 창의성이 결합된 새로운 복지전달체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복지는 Pestoff(1990)의 모델에 입각해 볼 때, 비영리, 비공식, 민간이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전략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마을 복지가 공공 복지의 확장 이나 보충적 개념이 아닌, 민간 영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비제도적 복지로서 작동되고 평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마을 구성원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복지 증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마을 매개형 복지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 2. 연구의 함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닌다. 첫째, 그간 오스트롬의 공동자원론은 (신)제도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자원 관리 패러다임으로 활용되면서, 자원을 둘러싼 인간의 사회적 삶의 양식이나, 공동체의 형성 과정과 같은 정치사회적 변동과 연계되지 못했다(정영신, 2016). 이에 본 연구는 공동자원론의 관점을 대안 결사체, 주민 커뮤니티, 공동육아, 협동조합 등의 공동화(communing) 과정이 시의적절하게(well-timed) 조직되고있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획에 적용함으로써, 공동자원론의 실체적 가능성을 점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는 공동자원이 비배제성과 감소성을 지닌 물리적 재화이라는 고전적 관점을 넘어, 로컬 커먼즈(local commons)로 정의될 수 있는 마을공동체에 접목시킨다는 점에서 유용하리라 판단된다.

둘째, 상술한 이론적 자원을 활용하여 서울시 마을공동체 주요 활동가들의

인식 유형화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지금까지 서울시 마을공동체 연구에서 활용된 행위자는 주로 마을 사업에 참가한 주민들이었다(백영민 et al., 2016). 이에 본 연구는 마을활동가라는 상위 층위를 채택하여, 보다 더 심층적이고(in-depth) 마을 실정에 근접한 분석이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네 가지 인식 유형은 지금까지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과제인 주민 주도성 확보와 민관 협치의 문제에 있어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3섹터 복지 전략으로서 마을공동체의 잠재성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진다. 그간 복지국가라는 근대적 제도가 소득 보장, 사회 서비스 공급 등과 같은 직접적 복지를 중요시 여겼다면, 마을과 같은 비제도적 영역은 이웃과 공동체성 회복, 상호 호혜성 구축 등과 같은 전통적 의미의 복지감 형성에 기여한다. 이는 후기 근대로의 전환 이후 급격하게 붕괴된 협력적 생활 세계를 복원하고, 현대 사회의 각종 비복지 문제를 해소하는 대안적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특히 마을공동체의 경우, 민간 영역 중에서도 시민 사회가 주가 되는 공동의 장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움직임은 마을 사업이 차제에 3섹터 지역사회조직의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3.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자는 비배제성과 감소성을 지닌 오스트롬의 공동자원 개념을 수용하고, 8 가지 관리 규칙 및

연구자가 별도로 추가한 마을공동체의 4가지 기능을 교차하여 서울시 마을공동체 실정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커먼즈(communs) 연구자들에 따르면, 오스트롬의 제도주의적 패러다임에 충실하는 초기 연구를 넘어, 공동자원을 둘러싼 거시적인 정치경제학적 변동에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이노우에 et al., 2014; 정영신, 2016; Dellenbaugh et al., 2015; Rifkin, 2014). 이를 단적으로 표현하면, 서울시 마을공동체가 커먼즈의 관점에서 “어떻게 관리되는가”가 아닌, “어떻게 형성되어왔는가”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활동가들의 인식 유형은 추후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을 설계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데 도움이 되더라도, 서울시 마을공동체의 태동과 그 과정에서 공동자원의 형성과 해체 등을 비롯한 ‘변동’의 문제는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난다. 이러한 부분은 마을공동체의 형성과 발전, 해체 등을 총체적으로 추적해야하는 작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더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Q 모집단을 구축하고, 최종 진술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표성 및 포괄성에 제약이 따랐다. 본 연구는 Q 모집단 구성을 위해 1차적으로 국내 마을공동체 및 공동자원론과 관련된 선행 연구, 학술 보고서, 기사, 대중매체 등을 통해 예비 진술문을 수집하였고, 2차적으로 마을공동체 연구자,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자치구 마을 담당관 등과의 면담, E-mail 문답 등을 통해 진술문을 추렸으며, 최종적으로 연구자가 설계한 12가지 기준에 입각하여 Q 표본을 선정하였다. 그 후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산하의 마을 연구팀 소속 4인을 대상으로 신뢰도 및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수집된 진술문들이 공동자원 및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내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포괄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채택한 이론적 관점이 마을공동체와 관련한 인식 유형의 총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대표성의 한계가 있다. 아울러 몇몇 연구 참여자들은 Q 카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용어나 개념적 측면에서 난해함을 표하기도 하였고, 동일 진술문에 대해서 활동가마다 이해도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활동중인 ‘마을넷’ 소속의 마을활동가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들을 통해 도출된 인식 유형이 서울시 마을활동가 전원의 주관적 인식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물론, Q 방법론을 시행하는데 있어 P 표본의 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김홍규, 2008). 그러나 본 연구의 유형화 결과가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동가 모집단 전원의 인식 유형을 대변할 만큼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본 연구에 참여한 P표본 응답자에 한해서 설명력을 가진다는 점을 주의해야한다. 이에 도출된 유형을 인구 사회학적 변수와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거나, 활동가 모집단으로 일반화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병노, & 유영림. (2015). 복지마을 만들기의 경험과 의미 - 질적탐색. *한국 지역사회복지학*, 53(-), 197-228.
- 강은숙, & 김종석. (2013). 공유재의 딜레마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길. *한국행정논집*, 25(2), 531-557.
- 곽노완. (2015). 공유의 시대, 열리고 겹치는 공유도시의 비전. *마르크스주의 연구*, 12(3), 100-122.
- 권단, 김상철, 김신범, 김정찬, 박영길, 하승우, & 한채운. (2014). *모두를 위한 마을은 없다*. 서울: 삶창.
- 권상철. (2015). 대안 공동체 경제 논의와 제주지역 사례: 마을 공동어장과 이시돌 목장.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8(4), 395-414.
- 권효림. (2015). 결사체주의 관점에서 본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민주주의적 의의. *韓國社會學*, 49(5), 151-180.
- 김경돈, & 류석진. (2011). 비배제성과 경합성의 순차적 해소를 통한 공유의 비극의 자치적 해결방안 모색: 제주도 통일리 해녀의 자치조직 사례를 중심으로. *韓國 政治 研究*, 20(3), 163-188.
- 김기홍. (2015). 연구논문 : 모듬살이의 진화: "마을", "공동체", 그리고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農村社會*, 25(1), 127-170.
- 김동완, & 신혜란. (2016). 대항품행 그리고 성미산 스타일. *경제와 사회*, - (111), 174-204.
- 김미영. (2015).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공동체의 여러 형식. *사회와 이론*, 27(-), 181-218.

- 김상민. (2005). 주민환경운동과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서울 시 마포구 "성미산배수지건설반대운동"을 사례로. *시민사회와 NGO*, 3(2), 155-193.
- 김선필. (2014). 공유지 복원을 위한 이론적 검토. *마르크스주의 연구*, 11(3), 172-201.
- 김성윤. (2011). 사회적인 것의 재-구성, 188-206.
- 김순은. (2010). Q 방법론의 이론과 철학.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4), 1-25.
- 김의영. (2014). *거버넌스의 정치학*. 서울: 명인문화사.
- 김의영, & 한주희. (2008). 결사체 민주주의의 실험. *한국정치학회보*, 42(3), 143-166.
- 김진아. (2014). 마을만들기에 대한 공동체주의 이론적 해석: 델파이 방법을 통한 적용가능성 탐색. *국토연구*, 83(-), 113-127.
- 김진욱. (2013). 한국 복지국가 10년(2000~2010), 복지혼합 지출구조의 변화와 그 함의.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6(-), 387-419.
- 김찬동, 서윤정,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2).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방안*.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태성, 류진석, & 안상훈. (2005). *현대복지국가의 변화와 대응*. 파주: 나남출판.
- 김형용. (2015). 복지국가의 생태학적 전환과 사회서비스의 가능성: 생태 한계와 공유지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43(-), 211-238.
- 김형용. (2016). 복지와 마을, 접합시도에 대한 시론. *비판사회정책*, -(50), 38-75.

- 김형주, & 최정기. (2014). 공동체의 경계와 여백에 대한 탐색. *민주주의와 인권*, 14(2), 159-191.
- 김홍규. (2008). *Q 방법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 나도삼. (2007). 문화도시와 문화전략. *디지털콘텐츠와 문화정책*, 2(-), 155-178.
- 나중석. (2013). 마을 공동체에 대한 철학적 성찰. *사회와 철학*, -(26), 1-32.
- 남기철. (2015). 지역사회복지관점에서의 서울시 동주민센터 개편사업 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5(-), 163-186.
- 다무라, 아., 강혜정, & 田村明. (2005). *마을 만들기의 발상*. 서울: 小花.
- 민문홍, & Durkheim, É. (2012). *사회분업론*. 서울: 아카넷.
- 민소영. (2013). 문화예술을 활용한 마을만들기의 경험. *비판사회정책*, -(40), 32-73.
- 박소연, & 박인권. (2013). 마을기업에 의한 전통시장 활성화 메커니즘 분석. *공간과 사회*, 45(-), 52-89.
- 박아름, & 권태상. (2013). 일반논문 : 공유자원 문제와 사회주의 모델의 교훈 북한의 "담당림" 사례. *북한학연구*, 9(2), 33-65.
- 박정선. (2006). 제3부문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현황 - 사회복지 적용을 위한 탐색. *한국비영리연구*, 5(2), 199-231.
- 박종문, & 윤순진. (2016). 서울시 성대골 사례를 통해 본 도시 지역공동체 에너지 전환운동에서의 에너지 시민성 형성 과정. *공간과 사회*, 55(-), 79-138.
- 박종문, & 정현영. (2014).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4(6), 141-143.

- 박주형. (2013). 도구화되는 '공동체'. *공간과 사회*, 43(-), 5-43.
- 박현찬. (2012).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공지원의 방향. *建築*, 56(6), 20-28.
- 백영민, 김용찬, 채영길, 김유정, & 김예란. (2016). 시민들의 가치지향, 정치적 이념성향, 그리고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의 관계 -서울시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社會科學論集*, 47(1), 240-264.
- 백평구. (2015). Q모집단으로부터 Q표본 구성 과정에 대한 분석: 학술지 주관성 연구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1996~2014). *주관성연구*, -(30), 109-130.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5). *마을, 3년의 변화 그리고: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성과연구 보고서*.
- 서울시복지재단. (2013).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서울: 서울시복지재단.
- 서울특별시, 박태영, 김영남, 이영림, 나효선. (2015). *서울시 마을기업, 1056일의 기록*. 서울: 서울특별시.
- 손우정, 나도삼. (2016). *새로운 서울 마을공동체 정책수립을 위한 어젠다 연구*. 서울연구원.
- 안도경. (2011). 연구논문 : 시장-정부 이분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R. H. Coase와 E. Ostrom의 제도 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7(1), 35-57.
- 유지연. (2016). *마을만들기를 통해 본 거버넌스의 위기와 민주적 거버넌스의 재구성: 성북구 삼태기마을과 소리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경란. (2010). *도시 속 협동적 연대를 통한 마을경제관계망 만들기 -서울*



- 마포구 성미산마을의 사례. 韓國協同組合研究, 28(2), 143-171.
- 이노우에, 마., 최현, 정영신, & 김자경. (2014). 공동자원론의 도전. 서울: 景仁文化社.
- 이상훈, 이건원, 정윤남, & 김세용. (2013). 마을만들기 추진과정의 성과 및 한계에 관한 연구.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4(1), 137-149.
- 이영범. (2013). 복지로 가는 마을. 住居, 8(1), 24-28.
- 이은희. (2008). 후기 근대 지역공동체의 성찰적 동학. (국내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재열. (2006). 지역사회 공동체와 사회적 자본. 지역사회학, 8(1), 33-67.
- 이재완. (2014).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주민참여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7(4), 409-437.
- 임은진. (2010). 생태마을의 형성과정과 경관 연구. 문화 역사 지리, 22(1), 115-129.
- 전대욱. (2017). 지역공동체 소유권과 자산화 전략.
- 전대욱, 최인수, & 김건위. (2016). 지역공동체 소유권(communitiy ownership) 과 자산화 전략.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6(6), 204-221.
- 전동진, & 황정현. (2014). 마을 만들기 운동과 패러다임의 전환. 현대유럽철학연구, 35(-), 31-70.
- 정규호. (2012). 한국 도시공동체운동의 전개과정과 협력형 모델의 의미. 정신문화연구, 35(2), 7-34.
- 정석, & 김택규. (2015). 국내 '마을 만들기' 연구동향과 '사람'에 중점을 둔 연구의 특성 분석.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7(3), 123-138.
- 정영신. (2016). 엘리너 오스트롬의 자원관리론을 넘어서. 환경사회학연구

*ECO*, 20(1), 399-442.

조한혜정. (2007). 미래의 마을 만들기. *建築*, 51(1), 20-22.

조혜진, & 유동철. (2014). 지역사회복지관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과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6(3), 159-183.

최현, & 김선희. (2016). 공동자원의 지속가능성과 마을만들기 전략 : 제주 가시리의 사례. *공간과 사회*, 58(-), 267-295.

최현, & 파이성. (2015). 공동자원론과 한국 공동자원 연구의 현황과 과제. *경제와 사회*, 4(108), 166-198.

최협, 윤수중, 정근식, 조정만, 김명혜, 김종숙, 김준. (2001). *공동체론의 전개와 지향*. 서울: 선인.

한동우. (2012). 복지국가와 시민사회: 제도의존을 넘어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0(-), 57-77.

한상일, & 김경희. (2013). 한국 사회적 기업의 지역자산 활용: 자산기반지역 공동체발전 관점에서의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 모색. *地方行政研究*, 27(3), 153-180.

한주희. (2008). *근린조직을 통한 좋은 거버넌스의 실현*. (국내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서울.

홍경준. (2013). 닫힌 공동체로부터 열린 공동체로. *한국사회복지학*, 65(2), 179-201.

홍경준, & 김상균. (1999). 한국 사회복지의 현실. *사회복지연구*, 13(1), 29-59.

Adam, B., Beck, U., & Van Loon, J. (2000). *The risk society and beyond: critical issues for social theory*. Sage.

Beck, U. (1992).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Vol. 17): Sage.

- Beck, U. (2015). *What is globalization?*: John Wiley & Sons.
- Blakely, E. J., & Snyder, M. G. (1997). *Fortress America: gated communities in the United States*: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Bollier, D. (2014). *Think like a commoner: A short introduction to the life of the commons*: New Society Publishers.
- Borch, C., & Kornberger, M. (2015). *Urban commons: rethinking the city*: Routledge.
- Brown, S. R. (1972). A fundamental incommensurability between objectivity and subjectivity. *Science, psychology, and communication*, 57-94.
- Brown, S. R. (1980). *Political subjectivity: Applications of Q methodology in political science*: Yale University Press.
- Castells, M. (1983). *The city and the grassroots: a cross-cultural theory of urban social movements*: Univ of California Press.
- Chapple, K., & Jackson, S. (2010). Commentary: Arts, neighborhoods, and social practices: Towards an integrated epistemology of community arts.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29(4), 478-490.
- Coggan, C., Saunders, C., & Grenot, D. (2008). Art and Safe Communities: the role of Big hART in the regeneration of an inner city housing estate. *Health promotion journal of Australia*, 19(1), 4-9.
- Day, G. (2006). *Community and everyday life*: Routledge.
- Defourny, J., Borzaga, C., & Defourny, J. (2001).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 London: Routledge.
- Dellenbaugh, M., Kip, M., Bieniok, M., Müller, A. K., & Schwegmann, M.

- (2015). *Urban Commons: Moving Beyond State and Market* (Vol. 154): Birkhäuser.
- Eizenberg, E. (2012). Actually existing commons: Three moments of space of community gardens in New York City. *Antipode*, 44(3), 764-782.
- Esping-Andersen, G. (1996). *Welfare states in transition: National adaptations in global economies*. Sage.
- Evers, A. (2005). Mixed welfare systems and hybrid organizations: Changes in the governance and provision of social services. *Int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28(9-10), 737-748.
- Fitzpatrick, T. (2003). *After the new social democracy: Social welfare for the 21st century*.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Frazer, E. (1999). *The problems of communitarian politics: Unity and conflict*. Oxford University Press on Demand.
- Giddens, A. (2001). *The global third way debate*. Polity Press.
- Giddens, A. (2013). *The third way and its critics*. John Wiley & Sons.
- Gidron, B., Kramer, R. M., & Salamon, L. M. (1992). *Government and the third sector: Emerging relationships in welfare states*. Jossey-Bass Inc Pub.
- Gilman, R. (1991). The eco-village challenge. *Context*, 29(10), 10-15.
- Goldsmith, S. J. (1994). *The trap*. Carroll & Graf.
- Gorz, A. (1999). *Reclaiming work: beyond the wage-based society*. Polity.
- Harvey, D. (2012). *Rebel cities: From the right to the city to the urban revolution*. Verso Books.

- Harvey, D., Hardt, M., & Negri, A. (2009). Commonwealth: an exchange. *Artforum International*, 48(3), 210.
- Hillery, G. A. (1955). Definitions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 111-123.
- Kretzmann, J., & McKnight, J. P. (1996). Assets-based community development. *National Civic Review*, 85(4), 23-29.
- Linebaugh, P. (2008). *The Magna Carta manifesto: Liberties and commons for all*. Univ of California Press.
- Madyaningrum, M. E., & Sonn, C. (2011). Exploring the meaning of participation in a community art project: A case study on the Seeming project.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21(4), 358-370.
- Maffesoli, M., Felski, R., Megill, A., Rose, M. G., & Eagleton, T. (2004). The Return of the Tragic in Postmodern Societies [with Commentary]. *New Literary History*, 35(1), 133-159.
- McCay, B. J. (2002). Emergence of institutions for the commons: Contexts, situations, and events. *The drama of the commons*, 361-402.
- McHenry, J. A. (2011). Rural empowerment through the arts: The role of the arts in civic and social participation in the Mid West region of Western Australia. *Journal of Rural Studies*, 27(3), 245-253.
- McKeown, B. F., & Thomas, D. B. (1988). Q methodology (Quantitative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s series, vol. 66): Thousand Oaks, CA: Sage.

- Ostrom, E. (2007). Institutional rational choice: An assessment of the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
- Ostrom, E. (2015). *Governing the comm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estoff, V. (1998). Beyond the market and state: social enterprises and civil democracy in a welfare society.
- Pierson, P. (2001). *The new politics of the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on Demand.
- Piketty, T., Goldhammer, A., & Ganser, L. (2014).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 Pinker, S. (2014). *The village effect: Why face-to-face contact matters*: Atlantic Books Ltd.
- Plant, R. (1978). Community: concept, conception, and ideology. *Politics & Society*, 8(1), 79-107.
- Rifkin, J. (2014). *The zero marginal cost society: The internet of things, the collaborative commons, and the eclipse of capitalism*: Palgrave Macmillan.
- Rose, C. (1986). The comedy of the commons: custom, commerce, and inherently public property.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53(3), 711-781.
- Rose, N. (1996). The death of the social? Re-figuring the territory of govern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25(3), 327-356.
- Salcedo, R., & Torres, A. (2004). Gated communities in Santiago: wall or

frontier?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8(1), 27-44.

Sampson, R. J. (2012). *Great American city: Chicago and the enduring neighborhood effec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Taylor, M. (1982). *Community, anarchy and liber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Wellman, B. (1999). Networks in the global village: JSTOR.

Whyte, W. F. (2012). *Street corner society: The social structure of an Italian slum*. University of Chicago Press.

Wirth, L. (1938). Urbanism as a Way of Lif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24.

Zimmerman, C. C. (1938). *The changing community*. Harper.

Zizek, S. (2011). *Living in the end times*: Verso.

## Abstract

### A study on the perception types of Seoul village community activists

: Focused on E. Ostrom's CPRs design principle

Yoon, Chan Hum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begins with a question: “Will the village community project in Seoul be able to continue its growth as a sustainable community?” Elinor Ostrom(1990) has effectively proven her point against the “Tragedy of the Commons” by investigating how commons and its collective practices enable sustainable governance in local communities. Also, considering recent studies that suggested the expanded application of commons from rural artifacts to social movements and urban spaces, it has been suggested to adopt the concept of commons to understanding urban planning – that for the village community project – in the context of community organization. Based on this idea, the study aims to categorize an array of perceptions on the village community project in Seoul by employing the concept of CPR(common-pool



resources) design principles and village community functions through Q methodology. This study also attempts to explore the suitability of the village community project as a third sector welfare strategy. In order to implement the research, 30 members of 'Village Network' have participated as a P-sample.

The analysis on the 30 participants show that they can be divided in four types based on their perception toward the village community plan: Type A that pursues a self-governed community, Type B that pursues an inclusive community strategy, Type C that pursues a public-oriented community plan, and Type D that pursues alternative community activities. Type A activists put emphasis on sustainability and self-governing ability as the most necessary requirement for community administration. Therefore, activists of this type value a political capability in order to maintain their community and commons. Type B values internal consultation that can facilitate and empower community culture and pursues diversity in the makeup of community member. Type C activists affirm the pro-active roles of the public sector in community building. Therefore, community members of this type recognize administration-led, robust partnerships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as a growth driver. Lastly, Type D activists do not emphasize the administrative principles of the village so much as the utility of community projects and alternative programs for them. In particular, they are ardent advocates of the ecological and welfare functions that a community provides.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those four different categories carry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e more community activists perceive of the

community projects as activities dominantly run by the private sector, the more exclusive attitude they show when it comes to managing community/commons issues. Hence, this study discovered that the subjects of Type C, B, D, and A in the order tend to be more open to various methods to resource management and community boundary settings. Second, those groups display different traits of collective-choice arrangement by perception type when resolving conflicts over their community or commons. In this study, the center of collective-choice mechanism appears to shift to the private sector, which was most evident among Type B activists, those wh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internal consultation, followed by Type A, D, C in the order. Lastly, although every perception type agreed on the need for sanctions in community with an aim to secure sustainability, their approach to sanctions differed by whom they put in charge of monitoring. As such, each perception type holds different operation principles on community/commons-related issues. However, what penetrated throughout the different perception types was that the attitude of activists was determined by which agent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administers community activities. In terms of the functions of a village community, Type A activists consider a political capability the most important function while Type B for networking and welfare functions, Type C for community networking and Type D for ecological and welfare functions of community, respectively.

In the meantime, a community village also carries implications as a 3<sup>rd</sup>-sector welfare strategy. In this study, community activists in the village

community project in Seoul embody a pathway thinking in which they believe that meeting the welfare needs is not a core function of the village community project, on the other hand, community welfare issues can be naturally addressed by facilitating the community. According to the research data, perception types except for Type D do not regard a welfare function as the top priority of the village community. However, the community activists believe that community welfare can be an alternative solution to addressing urban social problems. Also, they argue that the community welfare body must maintain its independency as sitting in between the boundary of institutional welfare system and that of non-institutional one. Thereby, this study suggests the village-based welfare should be designed by, implemented by, and completed by the principles of non-institutional organization, instead of being incorporated into the public welfare system. Hence, the Seoul Village Community Project should maintain its non-profit keynote in terms of the welfare strategy and, at the same time, seek a way to coexist with the institutional welfare system.

**Keywords:** Elinor Ostrom, Common-pool resources, CPRs, Village Community, Community Building, Community Activist, Community Welfare Q methodology

**Student Number:** 2015-20231